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 방안 연구 -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김은경 · 오수길 외

발 간 사

산업화 시대의 경제성장 방법이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지속될 수 없다는 각성을 담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은 세계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압축적인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의 결과로 지역격차, 양극화, 일자리부족, 생태훼손, 공동체 파괴 등등의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급격한 변화의 과정에 있는 충청남도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충남의 이러한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철학적 배경이고 동시에 유용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접목시키는 방법은 아직 많이 연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가 중앙에서부터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한 제도의 정비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기에 충남의 상황은 급박합니다. 현재의 제도 내에서 지방자치 단체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큼니다.

이 연구는 충청남도의 이러한 필요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라는 구체적인 공간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영향평가가서 검토 과정의 실태를 바탕으로 그 한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지속가능성 평가를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행정여건을 고려해 적용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연구결과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평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을 도입하고 확대하는 과정,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갈등을 예방하려는 다양한 노력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충청남도가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수준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연구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소중한 의견 자문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연구 수행과정의 심의를 통해 연구의 수준을 높여주신 심위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진도

연구 요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충청남도에서는 행정복합도시, 내포 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에서 남하하는 산업단지의 입지 확대 등으로 급격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수십 년에 걸쳐 우리나라가 겪었던 개발 과정을 단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겪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양극화, 일자리 부족, 사회적 불안정, 환경훼손과 오염 등등의 문제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긴급하고 적극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 역외 유출이 가장 큰 충청남도의 입장에서는 환경성뿐 아니라 형평성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온 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해 좀 더 통합적인 지속가능성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이 확대되어 통합성을 가져야 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지속가능성 평가로 발전해 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속가능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행정에 도입하는 것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충남도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실태는 행정 여건상 형식적인 검토에 그칠 수밖에 없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의도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단계를 내실화해 지속가능성 평가를 도입하면, 협소한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을 위한 통합적 관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별도의 제도 개선 없이 현재의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과정을 연구 대상 범위로 설정한 이유이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행정 여건상 지속가능성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공무원이나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의뢰하는 전문가들도 일관성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평가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항목의 포괄성을 유지하면서, 평가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 필요에 부응하는 방법으로 정형화된 지속가능성 평가표를 개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성평가 결과에 따라 표준화된 행정처리 절차를 따르도록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전체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 방향을 지속가능발전으로 상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했다. 여기에 충청남도의 ‘내발적 발전’ 과 ‘정책 융·복합’ 이라는 기본 방향이 지속가능발전과 궤를 같이할 뿐 아니라, 충청남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충청남도 행정의 목표 가치로 전제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론들을 접목했다.

지속가능성 평가 틀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의 내용을 분석해 지속가능성의 특성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 글래드윈 등(1995)의 연구를 기반으로 삼았다. 여기에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선행연구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한 FGI,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질문의 풀을 도출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항목을 조정했다.

3. 연구 내용

1) 충청남도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실태 조사

2011년 충청남도 환경정책과에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내용을 모두 분석했다. 대부분의 검토 내용은 관련법 조항의 준수를 요청하는 수준이고, 선행 검토 의견을 반복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토 수준은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고, 검토 시간이 짧은 현실적인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지속가능성 평가표 도출

여러 선행연구의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들을 글래드윈의 지속가능성 특성에 맞추어 분류하고, 그 내용의 적정성을 델파이 조사를 통해 검토했다. 포괄성, 연계성, 형평성, 안전성, 신중성의 다섯 가지 특성별로 질문을 도출해 최종 30개의 검토 항목을 도출했다. 이 항목별로 미흡, 보완, 적정, 해당 없음을 표시하고, 그러한 판단의 근거를 기록하도록 했다. 동시에 그러한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또한 다양한 지표 풀을 검토해 참고 지표(안)를 제시했다. 평가 결과 미흡, 보완 등의 의견 발생 정도에 따라 행정처리 방법을 정해 행정처리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숙의과정을 둘 수 있다.

3) 지속가능성 평가표의 검증

이 지속가능성 평가표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충남도에서 이미 다루었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사례 중 하나를 선정해, 검토에 참여했던 자문위원에게 평가표를 활용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30개 항목 중에서 4개 항목이 해당 없음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평가표를 사용하는 것이 검토 의견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되며, 이 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처리 기준을 만들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주었다.

4. 연구 결과의 시사점

지방자치 관점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연구가 대체로 환경부를 협의기관으로, 사업추진 부처를 승인기관으로 보고 문제점 및 대안을 연구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은 훨씬 열악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검토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는 평가표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관점에서 사업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지속가능성 평가표의 활용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협소함을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지속가능성 평가표는 향후 충청남도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직접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담당해야 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평가 도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행정 여건이 도에 비해 더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평가표를 기초자치단체로 확산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 결과로 개발된 지속가능성 평가표의 유용성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이 연구의 한계는 지속가능성 평가의 모든 단위를 다 포괄하지 못하고, 가장 작은 단위의 사업에 대한 평가에 한정했다는 점이다. 가장 큰 단위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점은 이 평가표를 작성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참고 지표(안)를 제시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되었다.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가 선행되었다면, 그 행정계획의 실행수단인 사업들이 기본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의 부재도 한계가 되었다. 사업계획의 수립에 비해 짧은 기간에, 부족한 예산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야 하는 한계와 압박이 여전히 존재해한다는 점도 한계로 남아있다.

향후 연구과제로는 무엇보다도 충청남도 행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과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한 평가, 중장기 계획의 지속가능성 평가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속가능성 평가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행정에 도입하는 것인 만큼, 조직원의 인식을 개선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수용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

목 차

제1장 서 론	10
1. 연구개요	10
1) 연구범위	10
2) 핵심연구 내용	11
3) 연구수행체계	12
4) 연구방법 및 흐름도	13
2. 연구배경 및 목적	14
1) 연구배경	14
2) 연구목적	16
3. 이론적 배경	18
1)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	18
2)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론	24
3) 지속가능성 평가	32
제2장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의 의의	35
1. 충청남도의 현황	35
1) 도정방향과 시책	35
2) 여건 및 현황	36
3) 지속가능발전 도입의 필요성	43
4)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상황	44
2. 환경영향평가 검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46
1) 환경영향평가 검토 현황	46
2) 환경영향평가 검토 실태	48
3) 환경영향평가 검토의 문제점	49
4) 환경영향평가 검토의 개선방향	50
3.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의 의의	52
1) 환경영향평가와 지속가능성 평가의 관계 도식	52
2)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의 의의	53
4. 국내외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사례분석	54
1) 지속가능 보고서 단계의 평가 사례	54
2) 정책 및 계획 등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사례	57

3) 개별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사례	65
--------------------------------	----

제3장 환경영향평가와 지속가능성 평가 69

1.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 내용	69
1) 환경영향평가법의 의의	69
2)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범위	73
2. 충남 환경영향평가조례와 지속가능성 평가	79
1)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영향평가	79
2) 충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지속가능성 평가	81

제4장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및 항목 설정 94

1.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94
1) 지속가능발전의 다섯 가지 특성	94
2) 지속가능발전의 특성과 기준 연계	95
2.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	97
1)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 도출	97
2) 참고지표와의 연계	100

제5장 지속가능성 평가 절차 및 평가체계 구축 방안 104

1. 지속가능성 평가절차와 방법	104
1) 지속가능성 평가 절차	104
2)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	106
2.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108
1) 평가 절차의 개선	108
2) 평가 기반 구축	108
3. 시범평가	110

제6장 결론 및 제언 114

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114
2. 연구의 한계	116
3. 향후 연구 과제	117

<참고문헌>	119
--------------	-----

<부록 1>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분석(2011년도)	122
---	-----

<부록 2> 전문가 델파이조사 설문	143
---------------------------	-----

표 목 차

<표1> 환경영향평가 절차	10
<표2> 연구수행체계도	12
<표3> 연구흐름도	13
<표4> 연구방법	13
<표5> 전략환경평가의 진화·발전 패러다임	23
<표6> 지속가능발전 개념	24
<표7> ‘발전’과 ‘성장’의 패러다임 비교	26
<표8>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정의들	27
<표9>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 각 부문 역할	30
<표10> 논경지면적(16개시도)	37
<표11> 논경지면적(16개시도)<전년비 증감률>	37
<표12> 농가인구(16개시도)<전년비 증감률>	38
<표13> 농업소득(9개시도)<전년비 증감률>	38
<표14> 지역내총생산(GRDP)	39
<표15> 고용률(16개시도)	39
<표16> 농가부채(9도)(연말기준)	40
<표17> 경제성장 속도를 늦추더라도 환경문제 먼저 해결(20세 이상 인구)	41
<표18>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16개시도)	41
<표19> 충청남도의 지속가능성	42
<표20>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역(2011년)	46
<표21> 환경영향평가서 유형별 정리(내부)	47
<표22> 환경영향평가서 유형별 정리(외부)	48
<표23>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57
<표24> 점수 부여 기준	60
<표25> 영국의 지역별 지속가능성 평가 작성 주체	60
<표26> 유럽연합 내에서 환경영향평가부터 지속가능성평가 까지의 변천과정	62
<표2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정책 영향평가 평가 항목 예시	63
<표2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정책 영향평가 절차	64
<표2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정책 영향평가 성과와 한계	64
<표30> 00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추진 경과	65
<표31> 사업 평가틀	66
<표32> 평가 결과 요약	67
<표33> 2011년 개정 전후 환경영향평가의 비교	71
<표34> 환경영향평가법의 구성	72
<표35> 환경영향평가 등의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73
<표36>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75
<표37> 시·도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운영 현황	80

<표38> 충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안)	81
<표39> 지속가능발전 특성별 매트릭스 평가	95
<표40> 지속가능발전 특성별 하위요소 체크리스트	96
<표41> 지속가능발전 세부가치별 평가항목	97
<표42>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 도출을 위한 설문 조사 내용	98
<표43>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	99
<표44>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 참고지표	101
<표45> 지속가능성 평가 체크리스트	106
<표46> 지속가능성 평가 판정 결과에 따른 조치(예시)	107
<표47> 항목별 평가(예시)	110
<표48>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 시범 적용 판정의견	111

그 립 목 차

<그림1> 의사결정 계층구조와 환경평가	21
<그림2> 통합정도에 기반을 둔 전략환경평가 진화과정	22
<그림3> '발전' 전략의 변화	29
<그림4> 피터센계 지속가능발전 영역	29
<그림5>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	34
<그림6> 도정방향과 시책	35
<그림7> 신도시 건설	36
<그림8> 산업단지	36
<그림9> 지역별 소득 유출입 규모(2010년)	40
<그림10> 출신 지역별 행복도	42
<그림11>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52
<그림12> 브리스톨시 삶의 질 지표 정량평가	55
<그림13> 브리스톨시 삶의 질 지표 정성평가	56
<그림14> 영국 지속가능성 평가 절차 및 관계	61
<그림15> RPG와 지속가능성 평가	62
<그림16>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 내용	70
<그림17>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협의 및 사후관리 절차의 흐름도	78
<그림18>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 도출 과정	98
<그림19>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104
<그림20> 충청남도 지속가능성 평가 절차도	

1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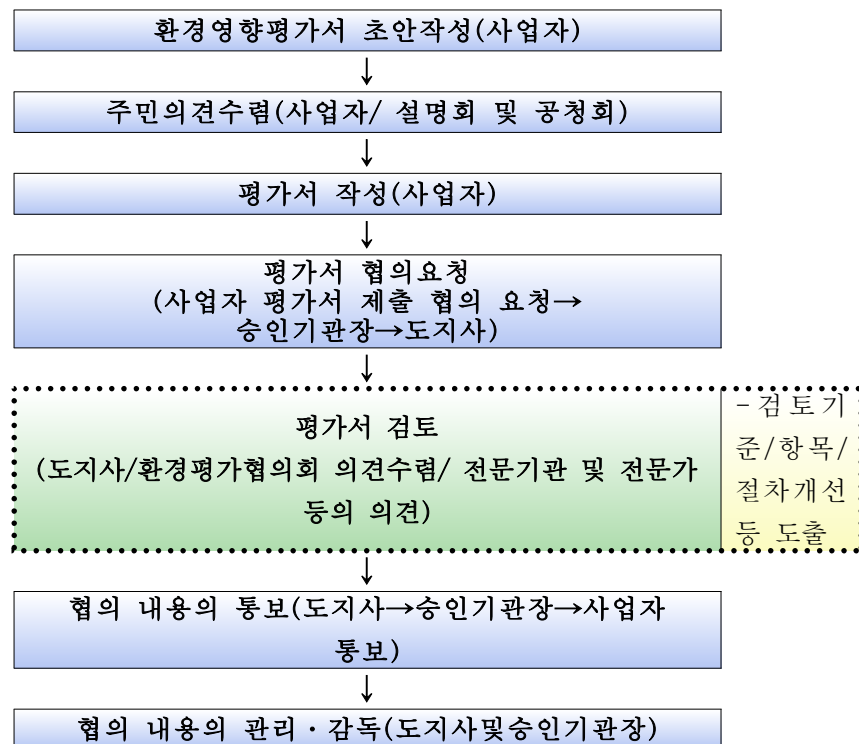
1. 연구개요

1)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 내용적 범위 : 충청남도 환경정책과가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의견 작성 과정과 내용

<표1> 환경영향평가 절차



2) 핵심연구 내용

(1)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실태 조사

충청남도 환경정책과에서 2011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내용에 대한 전체 조사를 통해 사업주체, 사업 분야, 검토 절차, 검토 내용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가 적절하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한계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2)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한 지속가능성평가 틀 개발

충청남도가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행정을 추진한다는 전제로, 충청남도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충청남도라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간적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충청남도의 제도와 행정 여건을 연구 범위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에서, 충청남도가 담당하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환경영향평가 검토의 수준을 가능한 한 균질화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행정의 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검토 과정을 정형화하는 것을 핵심 연구 내용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 평가표를 개발해 환경영향평가 검토 수준이 사업이나 평가자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현상을 개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개발된 지속가능성 평가표는 향후 충청남도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 직접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담당하는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를 위한 검토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환경영향평가 검토의 프로세스 개선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요청을 받아 검토를 진행하는 행정 절차를 정비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속가능성 평가표를 활용해 평가의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사전에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임의성을 줄이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동시에 검토 과정에서 적시된 문제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과정을 절차에 포함시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미흡한 사후관리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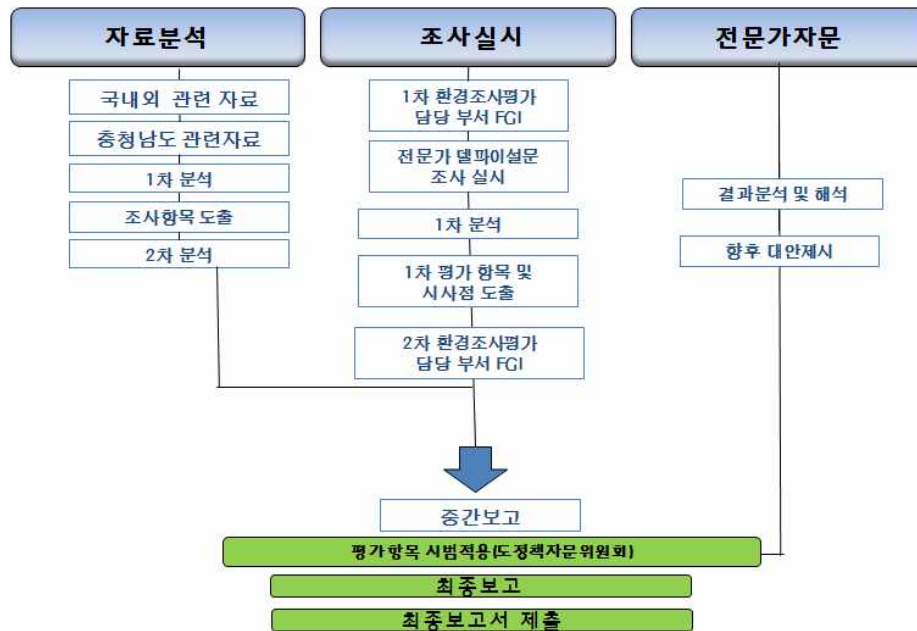
3) 연구수행체계

<표2> 연구수행체계도



4) 연구방법 및 흐름도

<표3> 연구흐름도



<표 4> 연구방법

연구방법 연구내용	문헌 조사	사례 분석	설문 조사	인터뷰 (FGI)	전문가 자문
충남사업평가 제도의 현황분석	●	●		●	●
지속가능성평가 대상 및 범위 설정	●	●		●	●
지속가능성평가 항목 및 설정	●	●	●	●	●
지속가능성 평가 모델 구축	●	●	●	●	●
충남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구축	●	●	●	●	●
기타연구사항	●	●	●	●	●

2.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1) 연구의 필요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을 위한 지속가능성 평가 요구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지 35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충분치는 않지만 다양한 사업들이 지방에 이양됨으로써 자치단체가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필요도 커졌고,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주민들의 참여를 중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사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어왔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행정처리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다룬 의견은 많지 않았다. 지방자치 단체 내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관점에서 균형 있고 포괄적이며 일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긴요한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검토 결과가 실질적으로 대상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을 통합하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 업무처리 여건을 감안한 개선 방안 요구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혼란스럽다.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사업에 대해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검토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고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검토의견을 작성하기도 하지만, 모든 건에 자문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자문을 받더라도 전문가들의 관점에 따라 검토 항목과 수준에 차이가 있어 평가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행정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담당자의 몫이 되고, 신속한 사업 추진 요구의 압박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평가 항목과 평가 기준을 정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한 행정처리 절차를 표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③ 기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한계 극복 필요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비판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가지로 제기되어 왔다. 환경영향평가의 여러 가지 한계는 기본적으로 우리사회가 “개발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개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공감대가 전제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가 개발이 선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전제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개발 사업이 지역의 경제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갈등이 발생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예상되는 환경 훼손이나 오염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주민참여를 중시하고 확대해 왔다. 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은 이러한 주민들의 관점을 반영하는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통로이다. 따라서 이 검토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포괄적이고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중요한 방안이다. 그리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의 협소한 틀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④ 충청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대비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연구나 비판은 주로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은 당연히 환경부이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기관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다. 국토해양부가 사업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하고,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작성한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에 협의 의견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이 수정되고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되면, 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담당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가 정해진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국가의 절차를 도의 규모로 축소하는 것이다. 도나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과가 국가의 환경부가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도나 기초지방자치단체 환경과가 환경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러한 전문성 부족을 채워줄 연구기관도 없다. 국가가 환경부 산하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에는 환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 없고, 아쉽게도 충남발전연구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하는 이러한 충청남도의 현실적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2) 연구의 배경

연구를 시작하게 된 구체적 배경은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제정이다. 그동안 충청남도는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두지 않았다. 2012년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 범위가 설정되면서 충남도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동안 충청남도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발전을 행정에 접목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던 터라 조례 제정을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검토할 항목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범위와 환경영향평가법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범위가 중복되어 환경부가 법의 오류를 수정하는 시간이 필요해진 상황도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충청남도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의 실태를 조사하면서 본 연구의 우선적 적용 범위를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으로 수정했다. 이 범위는 환경영향평가조례의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이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토 과정의 개선 역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을 개선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청남도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사전에 검토되어 충청남도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내실화하는 방안으로 지속가능성평가 틀을 개발하는 것이 연구의 기본 과제이다.

이 연구는 내용적으로 지속가능성 평가를 도입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지속가능성 평가표를 만드는 두 가지를 포함한다. 우선 지속가능성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과 그 해결방안으로 사회적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다수 연구(이시재, 2002; 구자건, 2003; 윤순진, 2004; 이정환, 2004; 환경부, 2009; 김준현, 2012))의 주장을 바탕으로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사업에 어떠한 의견을 낼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성 평가 적용 과정의 개선이다. 지속가능성평가가 아직 새로운 개념이어서, 적용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대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문을 의뢰하는 자문그룹 역시 지속가능성 평가가 아직은 생소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평가를 도입하되, 그 평가의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

능성을 평가하는 항목을 표로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이나, 검토 의뢰를 받고 검토를 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이 평가에 일관성과 포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자문의견을 요청하고, 자문의견을 통합하여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는 실무 절차가 정형화되고, 명확한 처리 기준을 갖게 되는 동시에, 사후관리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이론적 배경

1)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

(1)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성과와 한계

산업사회에서 경제 활동이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부터이다.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한 환경행정은 경제 활동 결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규제하는 것에서 시작해 점차 사전 예방의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이다. 다시 말하자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대상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주체를 사업자 중심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제3의 전문기관형을 부분적으로 혼합한 형태이며, 주민의견 수렴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중요한 요건이며, 규범적 성격이 강해 평가서 작성, 제출 및 협의,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 내용 통보, 반영여부 확인 등의 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오태곤, 2005). 우리나라에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시점을 1977년 환경보전법 개정 시점으로 보면 이미 35년의 시간이 지났고, 환경영향평가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된 1993년으로부터 보아도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어떤 성과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성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환경적인 면을 고려한 계획으로 사업내용이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의 누적으로 인해 초기 계획서 자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진단한다(조공장 외, 2008). 이 연구는 이와 함께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 및 주민의 의식변화에 기여한 점 등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성과로 꼽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에서 이러한 성과가 부각되기는 어렵다.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방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도리어 환경영향평가가 환경 파괴를 수반하는 사업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근래 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초래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는 환경영향평가 작성의무가 사업자에게 있고, 사업자가 지정한 대행업자가 실제로 시행하고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는 구조에

서, 사업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객관적으로 충실하게 밝혀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공탁하고,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의 작성자에게 위탁을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참여정부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사전에 국가가 국토의 생태조사를 실시해 지리 정보에 통합해 개발논의의 첫 단계에서 보존지역에 대한 사업 계획이 걸러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생태 훼손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보이나, 그 밖의 환경적 위해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다는 것이 한계이다.

둘째는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의 중단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절차상 사업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 또는 예비 타당성 검토를 거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자가 이미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상태에서 사업의 중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업의 추진을 전제로 환경 영향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심각한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사업의 추진 자체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이 환경영향평가라는 틀 내에서 고민되어 왔던 한계를 벗어나 좀 더 근본적으로 개발 정책 자체를 해부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이라는 접근 통로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 보다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과정, 수단에 고착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2)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원래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제도의 규제적 협의 기능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협의 과정의 문제이다. 조공장 외(2008)는 운영상의 문제를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

첫째, 협의기관에 의한 인허가로 인식

이러한 인식은 계획자가 협의 기관의 허가를 얻는 데 치중하게 해 주민참여나 갈등 관리에 소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환경영향평가가 바람직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되기 어렵게 한다. 승인 기관과 협의 기관이 분리되어 실제로는 협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보다는 행정부 내의 조정이 힘을 발휘한다. 또한 규제적 성격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다.

둘째, 계획지원 기능이 미흡

실질적으로 ‘No Action’안을 비롯한 대안의 설정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협의

에 중점을 두는 제도의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나, 평가 시기의 한계도 작용한다. 계획 수립 자체에서 환경 평가가 내재화되지 못해, 추가적인 시간을 소요하는 구조가 평가의 내실화와 계획 지원 기능이 작동하기 어렵게 한다.

셋째, 주민참여와 갈등관리가 미흡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환경을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승인기관의 무책임과 환경영향평가의 책임 문제과도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다. 승인 기관은 협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지도와 사후관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정보 공개와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부족

정보 공개 수준은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합리성의 추구라는 평가 제도의 본질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심의, 검토기관의 검토의견, 승인 기관의 판단 근거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다섯째,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성

환경부는 입지타당성 검토에 중점을 주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저감방안에 중점을 두는 환경영향평가를 이원화해 운영해왔다. 이에 대해 중복과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절차의 간소화가 환경영향평가의 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이 필요하다.

위에서 정리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인 운영상태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의 기관과 검토기관의 관점에 치우쳐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일반 국민들이 보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를 포괄한 것으로 보기에는 문제의식이 다소 협소해 보인다. 이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전제로 분석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가 사전 예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제도인가에 대한 논의를 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연구는 협의 기관을 환경부로 보고, 검토기관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한정해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실제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을 전혀 다루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제기하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나, 전문성과 행정 여건은 중앙에 비해 훨씬 열악한 상태이다. 이 문제를 환경정책이나 제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지, 혹은 지방자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통합적인 하나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과정을 내실화하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계획지원기능 미흡과, 주민참여와 갈등관리 미흡을 보완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아쉬움이 크다.

(3)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 방향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진화과정은 대략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평가 시점이 점차 앞당겨져 왔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가 환경 영향에 대한 사후 규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시점을 앞당긴 것이지만, 개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제로 부적절한 사업이 계획단계에서 검토되어 철회되거나 대안을 선택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별 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상위의 정책이나 행정계획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전략환경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로 발전해 갔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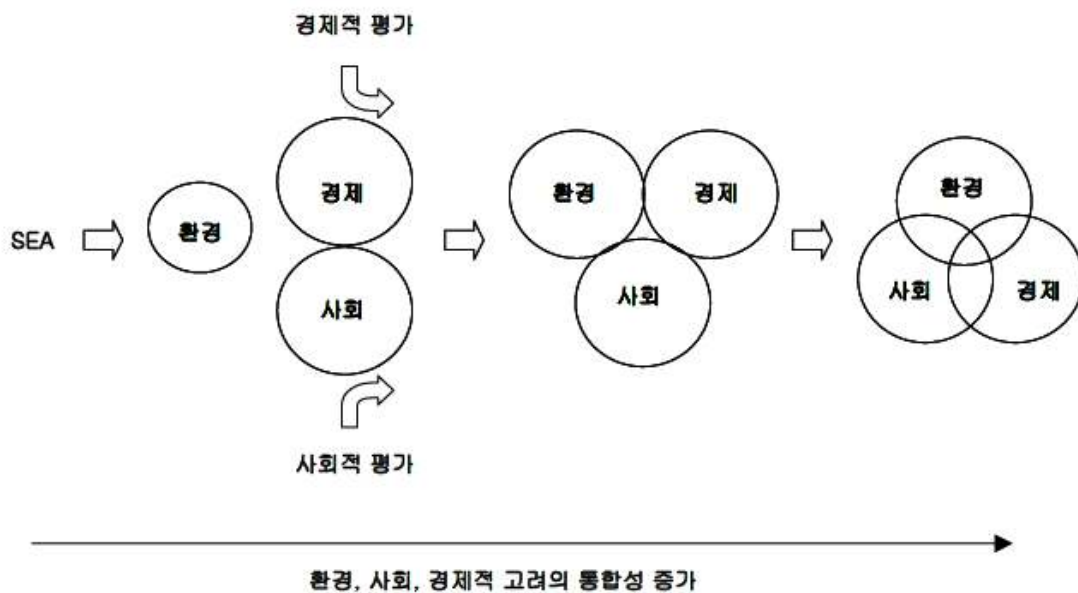
둘째, 평가 항목의 확대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가진 사업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환경의 가치들을 어떻게 경제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안소은 2008, 안소은 외 2010).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환경가치를 화폐화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차감함으로써 전체 경제적 타당성을 낮추어주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달리 표현하자면 사업이 외부화한 비용을 내부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환경 가치를 화폐화 하는 것으로 인한 논란은 여전히 피하기 어렵고, 기존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틀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적 타당성은 사업자의 타당성을 나타낼 뿐,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관점이나 해당 지자체의 관점에서 보면 비용이 증가하거나 권한의 배제나 이익의 유출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은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라는 개발주의 관점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 OECD(2006b)

<그림 1> 의사결정 계층구조와 환경평가

평가 항목의 확대는 환경영향평가에 사회적 영향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주를 이루었고(이시재, 2002; 구자건, 2003; 윤순진, 2004; 이정환, 2004; 환경부, 2009), 2010년을 전후한 시점에는 이러한 주장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영향의 구체적인 평가 방안들이 연구되었다(조공장 외, 2011; 김준현, 2012)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은 환경성, 사회성을 포괄하는 형태로 확대되어 갔는데, 경제성의 경우는 다른 항목들과 달리 사업자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깨지 못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평가 항목의 확대는 최종적으로는 각 영역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다른 영역의 가치와 공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OECD(2006a)

<그림2> 통합정도에 기반을 둔 전략환경평가 진화과정

셋째는 참여의 확대이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참여를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으나(오태곤, 2005), 실제로 아직도 명실상부한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민들의 정책결정에 참여 요구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요구가 적절히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사회적 신뢰가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아 참여의 확대가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발전 방향임에는 틀림이 없다. 협력적 거버넌스가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도 다양한 참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가 의미 있게 정착되지 못한 이유로는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가 협의 기관의 협의를 받는 데 치중해 왔다는 특성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조공장외, 2011). 사업 계획 수립 과정의 참여와 비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참여는 협소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가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나, ‘환경’이라는 좁은 통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진화 과정을 토대로 향후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Sadler(2005)의 주장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래 <표5>에서 보듯이 사업별 환경영향평가의 발전된 형태인 전략환경평가의 내용이 통합성을 높여나가면서 결국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가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표5> 전략환경평가의 진화·발전 패러다임

패러다임	주요 내용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형태의 전략환경평가 (1단계)	1) 사업단계의 환경영향평가에서의 환경영향의 증상확인인 아닌 환경영향의 원인에 초점 2) 제안된 정책, 계획, 프로그램에 초점 3) 환경적으로 고려할 점을 의사결정에 통합 4) 대안설정의 중요성 강조 5) 제한적이기는 하나 모니터링과 사후평가 실시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담보를 위한 전략환경평가 (2단계)	1)+2)+3)+4)+5) 6) 특정 자원의 자원량 또는 생태계 서비스 담보를 위해 설정된 안정보장기준(safeguards)에 미치는 영향평가 7) 손실과 훼손정도가 수용 가능한 범위 안이 되도록 보장 8) 잔존영향이 순손실을 방지하도록(강지속성) 또는 최소한의 안전기준(보통 수준의 지속성)과 일치하도록 보장 9) 시스템화된 환경영향 및 결과의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통합평가로서의 전략환경평가 (3단계)	1)+2)+3)+4)+5)+6)+7)+8)+9) 10) 주요 경제적, 사회적 목표의 확인 및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최소임계치(thresholds) 설정 11) 경제, 환경, 사회분야의 최소임계치 기준을 가지고 제안된 정책으로 인한 주요영향의 유형과 대안에 대한 평가 12) 목표 간의 상충성/교환비율(trade-offs)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예상되는 영향의 중대성을 평가 13)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최적의 균형점 찾기

※자료: Sadler(2005), 안소은(2008) 「사업단계 전략환경평가를 위한 환경가치활용방안」에서 재인용.

환경영향평가의 태생적 한계는 개발사업에 대한 상대적 입지이다. 개발사업을 전제로 해서 존재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게 하는 근본 요인이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규제적인 합의라는 특성이나 그로 인한 의사결정을 위한 통합적 정보를 제공 능력의 미흡을 해소 할 수 없다.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보면, 환경영향평가는 역설적으로 토건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기능이었다. 토건국가 자체를 극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대안적 발전 방안에 환경적 가치가 경제적, 사회적 가치와 함께 내재되도록 성장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Sadler가 제시하는 3단

계가 환경평가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와 논란이 필요하다.

2)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론

(1) 지속가능발전의 전개과정

①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태동

산업혁명 이후 지속되어온 생산·소비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은 1950년대의 대형 환경 사고에서부터 출발되었다. 런던 스모그, 이따이이따이, 미나마타 등은 산업활동이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저술들이 출간되었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주거나(Carson, 1962), 지구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그 안에서 인간 활동 방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거나(Meadows et al., 1972), 인간 사회를 중심으로 경제활동과 여타 영역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를 조명함으로써(Schumacher, 1973) 인간사회와 생태계, 인간사회와 경제활동의 긴밀한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이론들이 세계적으로 환경운동의 불을 일으키고, 환경행정의 기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생태·환경에 대한 자각과 보존운동은 1970년대 경제정책이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보수화되고 성장 신화가 강화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기업들은 환경보전 요구나 오염 저감 요구를 기업의 자유에 대한 규제로 인식하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아쉽게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업 활동의 주요한 여건인 자원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장기적인 대응 기회를 제대로 인식하고 활용하지 못했다. 동시에 보존지역을 가진 저개발국들의 반발도 심했는데, 환경파괴를 통해 산업화를 이룬 선진국들이 저개발국의 산업화를 막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UN은 지구 생태계에 대한 우려로부터 제기되는 환경보전 필요성과 기본적 필요의 충족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1972년에 시작된 UN의 연구는 1987년 노르웨이 전 수상 브룬트란트가 3년간에 걸쳐 세계각지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펴낸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마침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인류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선언한다.

<표6> 지속가능발전 개념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

②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담은 지속가능발전이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세부 분야별로 생물다양성 협약, 기후변화 협약 등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더욱 의미 있었던 것은 각국이 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선언이었다. 특히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 「의제21」을 작성하기로 합의하면서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92%에 이르는 자치단체들이 「지방 의제21」을 작성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적극 동참했다.

그러나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 정상회담(WSSD)을 통해 점검된 10년 동안의 활동 결과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세계 경제생산이 증가했음에도 빈곤은 더욱 확산되었고, 환경 파괴도 그치지 않고 지속되었다. 실천 측면에서 보아도 「의제 21」이 구체적으로 실행된 성과가 크지 않았고, 그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틀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다. 더구나 요하네스버그 회의가 개최되기 바로 전해인 2001년에 일어났던 뉴욕의 9·11 테러 등 사회불안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 정상회담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행을 경제, 사회, 환경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빈곤과 사회 불균형으로 인한 테러 등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세대 내 형평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대부분 선언에 그치거나 시민단체들의 실천사업으로 변화된 「의제 21」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의 추진 주체를 정부로 정하기에 이르렀다. 각 정부가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할 것을 합의하고, 각국은 그 결과를 2005년까지 UN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로써 각국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해야 할 의무와 그 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③ 지속가능발전의 정착과 적용

지속가능발전은 UN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으나 실제로 UN의 지속가능발전 논의는 유럽이 주축이 되었다. EU는 2001년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채택하고 2005년에 수정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유럽의 경제부흥 플랜이라고 할 「리스본 전략」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을 정도로 지속가능발전이 기본적인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각 개별 국가나 도시들도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지속가능발전 지표 체계를 개발하고 측정결과를 공표해왔다.

지속가능발전이 선언된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비판은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2008년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러한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은 세계적으로 세 가지 위기가 중첩되어 나타난 시기였다. 2007년 IPCC 4차보고서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압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였고, 2008년 초반의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그리고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기침체가 그것이었다. 영국의 신경경제재단(nef: new economic foundation)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당시의 상황을 지속가능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였다. 그들은 에너지 생산·소비 시스템을 대규모 생산, 원거리 대량 소비 방식에서 지역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소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통해 화석에너지에 의존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 발생을 줄이는 동시에 좋은 일자리 창출로 경기를 회복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Green New Deal’이라 이름 한 이 제안은 에너지 사업의 독과점 해소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에너지 생산 소비 과정의 환경 정의 실현과 환경 건전성 담보, 소득 불균형 해소와 사회 공동체 복원 및 강화 등 사회, 환경, 경제 세 측면을 모두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실행방안이다. 이러한 제안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에서 실제로 실행되었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이 기존의 모호하다는 비판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자리 잡았다. 결국 모호하다는 비판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하는 개념을 기존의 패러다임 안에서 판단하면서 생기는 한계였다고 할 수 있다.

(2)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함의

①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에 포함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와 주장이 존재한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이 기존의 ‘성장’과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UNCED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고정된 조화상태가 아니라, 자원이용과 투자방향, 기술발전의 방향설정, 그리고 제도변화가 현재의 욕구뿐만 아니라 미래의 욕구와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변화의 과정이다.”라고 설명한다.¹⁾ 성장(growth)이 ‘시장에서 화폐로 거래되는 양의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비해 발전(development)은 ‘부를 생산하는 과정과 그 결과로 인한 부의 구성까지 고려’하는 방법이다.²⁾ 이렇듯 지속가능발전은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에서의 가치구조, 목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판단과 완전히 다르다.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을 비교하면 아래 <표7>과 같다. 이렇듯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7> ‘발전’과 ‘성장’의 패러다임 비교

발전(Development) 패러다임	성장(Growth) 패러다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적인 측면의 고려 ·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경제 활동의 결과인 부의 구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인 팽창에만 초점 · 시장에서 화폐로 거래되는 양(GDP)의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 · 나무를 시장에서 팔아야 가치가 계산되는

1) 조준형·홍성태 옮김(2005), 『우리 공동의 미래』, 새물결, p. 41.

2) 폴 호켄 지음(2004), 『비즈니스 생태학』, 에코리브르, p. 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 산소 발생, 홍수 제어 및 토양 보존 기능, 정서적·심미적 기능 모두를 가치로 인식 · 사회 공동체 및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을 경제성과 동시에 반영 · 건강한 인체를 유지하는 것과 같음 	<p>방식으로, GDP의 증가를 위해서는 다른 기능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 오염으로 환자가 늘거나, 치안이 불안해 자물쇠가 많이 거래되거나, 갈등이 심해 소송이 늘어도 경제는 성장 · 단순히 체중이 증가하는 것과 같음
---	--

※자료: 김은경 · 지속가능발전포럼 지음, 「성장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한국미래발전연구원(2012)

②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구성요소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지속가능발전의 정의가 발표되고 난 후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논의를 정리해보면 <표8>과 같다.

<표 8>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정의들

Barbier, 1987

세 가지 시스템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 Biological system goal(생물 다양성, 회복력, 생산성)
- Economic system goal(기본적 욕구충족, 평등, 유용한 재화와 서비스 확대)
- Social system goal(문화적 다양성, 제도적 지속가능성, 사회정의, 시민참여)

The world Conversation Union, 1991

현 자원시스템의 용량을 해치지 않으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Costanza, Daly & Bartholomew, 1991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인간의 경제 시스템과 생태시스템의 관계

- (1) 인간이 생존을 지속할 수 있고
- (2) 개별적 인간이 모두 번영할 수 있고
- (3) 인간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 (4) 그러나, 인간활동의 영향은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함:
다양성, 복잡성 생태적 자원시스템을 파괴하지 않음

Meadows & Randers, 1992

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란 세대를 넘어서 오래 유지되고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하며,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자원기반을 해치지 않는 것

Hawken, 1993

지속가능성이란

-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수준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인간과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는 경제 시스템
- 인류의 터전을 현재보다 나은 상태로 개선하고, 필요한 양 이상을 착취하지 않고, 생명 또는 환경을 해치지 않고, 필요 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U.S. President'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1994

“Life-sustaining earth” : 생명이 평화롭게, 존엄성을 인정받고, 평등하게 존재하는 세상

- 미래세대와 현재세대의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평등한 삶의 기회를 부여하고 안전/건강/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
-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자원기반을 유지하고, 모든 생명체의 기능과 생존기반을 지켜야 함

Viederman, 1994

- 지속가능성은 지역사회의 현명한 자원사용(자연자원/인적/사회적/문화적 자원/기술 등)을 추구하는 민주적 절차
-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가 높은 수준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구현하며 지역사회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함. 그러나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모든 생명체와 생산력을 결정하는 생태시스템의 기반을 해치지 않음
- 미래세대가 그들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해줄 책임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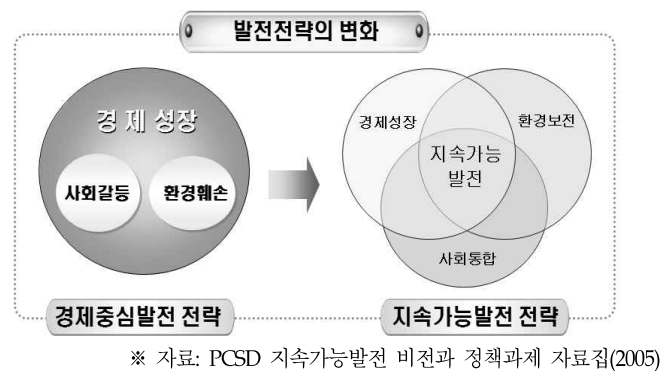
글래드윈 등(1995)은 그 다양한 연구들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요소들을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 방법을 활용해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특성으로 정리했다.

- o 포괄성(Inclusiveness) : 시간적으로 미래 세대를 고려하며, 공간적으로 지구 전체를 포괄하는 특성
- o 연계성(Connectivity) :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이 연계되어 있어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하는 특성
- o 형평성(Equity) : 세대 간, 세대 내 그리고 생물종 간의 형평성, 공정함, 정의가 유지될 것을 요구하며, 최소한 비용의 전가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특성
- o 신중성(Prudence) :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 비선형적 상호관계, 알 수 없는 한계, 복잡한 생태·사회시스템의 역동성 등등에 대응하는 기술적, 과학적, 정치적 관리와 예방에 대한 요구
- o 안전성(Security) : 현재와 미래 세대의 안전하고 건강하며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로, 생태 및 사회 시스템의 건강성과 중요한 자연 자원의 감소, 생존 시스템의 용량, 인간의 권리와 자유 등이 감소하지 않을 요구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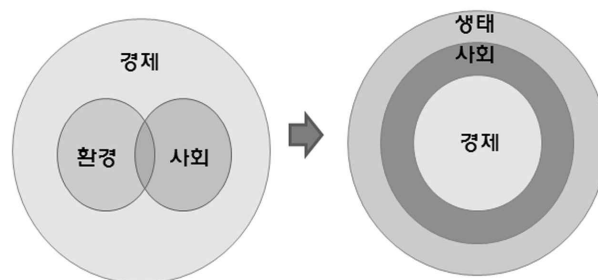
글래드윈 등의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대한 연구는 많은 후속 연구와 실천의 기준을 제공한다. 다른 유사한 개념들이 지속가능발전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해 내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실천 전략 및 사업들이 실제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③ 지속가능발전 개념 구성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관련 정책 영역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도식화하면 <그림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성장’ 패러다임에서는 사회갈등과 환경훼손이 경제 성장에 희생되는 상황이라면, 지속가능발전에서는 세 영역의 요구가 모두 충족되는 영역을 지속가능발전으로 인식한다.



<그림3> ‘발전’전략의 변화



<그림4> 피터 센게 지속가능발전 영역

위의 <그림4>는 피터 센게 등(2008)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 경영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도표이다. 경제는 인간사회의 다양한 활동 영역 중에 하나로 사회규범을 충족해야 하고, 인간사회는 전체 생태계의 일부로 생태계의 한계와 작동 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이 그림의 의미이며, 이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업이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피터센게 등은 설명한다. 이 정의는 기업 뿐 아니라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 정책과 연구 영역들이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 지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이해가 지속가능발전의 연구 및 추진에 있어 중요한 ‘영역을 초월한 협력(Transdisciplinary)’의 바탕이다.

(3)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 부문의 역할

「우리 공동의 미래」를 통해 UN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 각 부문 역할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이 한 분야, 또는 하나의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사회 모든 영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때 각 영역이 가져야 할 목표와 운영 방식의 변화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표9>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 각 부문 역할

- 정책결정에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정치체제
- 자립적이며 지속적인 생산기반 위에서 잉여생산물과 기술적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경제체제
- 부조화한 발전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체제
- 발전을 위한 생태적 토대를 보존해야 할 의무를 존중하는 생산체제
- 끊임없이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술체제
- 지속가능한 유형의 무역과 재정 흐름을 촉진시키는 국제체제
- 유연하고 자기 교정능력을 갖고 있는 행정체제

※ 자료: 홍성태·조형준 역(2005), 『우리 공동의 미래』, p. 118.

그러나 이러한 각 영역의 과제는 분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의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하거나, 다른 영역의 과제와 통합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정책의 기술적 선택은 기술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함과 동시에 정치적으로 확대된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생산 기반의 훼손, 사회적 갈등을 고려해야 하며, 행정은 유연하고 자기교정력을 갖추고 각 영역의 목표와 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의 접근 방법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존과는 다른 접근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o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 접근

정책을 영역별로 나누어 기획·집행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성과가 다른 분야에 문제로 전가되거나 사회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모든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이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거나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는 장치들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각 분야가 통합된 목표를 공유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치의 통합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이 크다.

o 새로운 시스템의 창조

드러난 문제를 제거하는 기술적 대응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하는 근본적인 혁신은 다르다. 이런 기술적인 대응을 ‘Greening’ 이라고 하고 근본적인 혁신을 의미하는 ‘Sustaining’ 과 구분한다. Greening은 단편적이고 임시적인 기술적 대책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근본적인 혁신의 필요성을 은폐,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지속불가능한 현 시스템이 유지되는 데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는다(Gladwin, 1995; Hart, 1997). 특히 시스템 이론을 주장해온 피터 센게 등(2008)은 지속가능발전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답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o 영역을 넘어서는 협력

다양한 관점에서 혹은 타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다양한 관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실행하기 위한 영역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학제간 연구(Interdisciplinary or Cross-disciplinary)를 넘어 다양한 학문의 전문가들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사회문제를 찾아내고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해가는 초학제간 연구(Trans-disciplinary) 방식을 요구한다(Gladwin, 1995; Senge et al., 2008).

o 민주적 의사결정

사회, 또는 시장 권력구조의 영향을 벗어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이 요구하는 철차이다. 이는 전문성에 기초한 획일적인, 단일한 답이 아니라 지역별 특수 상황을 반영한 구성원들의 합의를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거버넌스로 표현되는 이러한 과정들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3) 지속가능성 평가

(1) 세 가지 차원의 지속가능성 평가

① 지속가능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는 최상위의 평가이다. 이는 행정 행위의 결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처해 있는 상황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측정하고, 그 변화 추세를 분석한다. 이는 행정 기관 내의 상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결과가 미치는 행정구역 전체의 상태를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행정의 결과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업이나 주민들의 행동의 결과까지를 포괄하는 지표이다. 지속가능보고서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와 사업별 지속가능성 평가의 기준이 된다.

이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서는 해당 단위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체계가 필요하다. UN, OECD, 유럽 각국, 혹은 자치 단체들이 이 지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표들은 국가나 지역의 상황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참여를 통해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UN이 제시하는 지표에는 중학교 진학률과 같은 지표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표가 의미가 없으며, 충남에서는 1인당 경지면적이 의미 있는 지표이지만, 서울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하나의 주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의 경우 경제지표 25, 사회지표 25, 환경지표 27, 총 77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2년에 한 번씩 측정해 지속가능보고서를 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기존의 지표와 다른 점은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가치를 담은 지표라는 점이다. 근래 행정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과지표는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도로를 몇 Km 건설했는가를 성과 지표로 삼고 있지만, 이 지표는 그 지역이 도로가 과다하게 건설된 지역인지, 지역의 인구 구성과 주민의 요구에 적합한지,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에 적합한지 등의 가치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이는 단순히 효율성을 나타낼 뿐 목표에 얼마나 다가가는가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가치-정의, 안전성,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일을 통한 삶의 질, 온정과 배려-를 담아야 한다.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은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고,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서는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통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대중교통분담률, 교통사고 발생률, 유효보도율, 자전거 도로, 교통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설정과정에서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반영하며,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되고 보고됨으로써 행정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성과를 환류하고, 문제점을 보

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 과정은 대개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②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교통기본계획, 수자원관리기본계획, 등등 중·장기 행정 계획이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는 개별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보다 큰 범위에서 정책 방향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환경평가의 경우 전략환경평가에 해당한다. 개별 사업과 달리 행정 내부의 계획에 대한 검토이고, 상대적으로 시간에 따른 비용 부담에 예민하지 않아서 의미 있는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에 대한 동의와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에 대한 수용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수반, 혹은 단체장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가시화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이다. 행정 조직 구조상 대통령 직속, 혹은 단체장 직속의 위원회에서 담당함으로써 수장의 의지를 담아 행정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약화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가 어려워 충남의 경우 이 기능이 공백상태이다. 충남이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기능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단계의 평가는 지속가능발전의 특성들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예를 들면 교통 정책의 경우,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려를 하고 있는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반영되고 있는지, 이산화탄소 저감을 고려하고 있는지, 경제적 양극화를 유발하지 않는지 등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고려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 검토의견을 토대로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써 행정전반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③ 개별 사업의 지속가능성 검토

개별 사업의 지속가능성 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 상 협의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이다. 이는 구체적인 지역에서 계획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기본 자료로, 사업의 경제성, 사회성, 환경성, 주민 의견 수렴 등에 대해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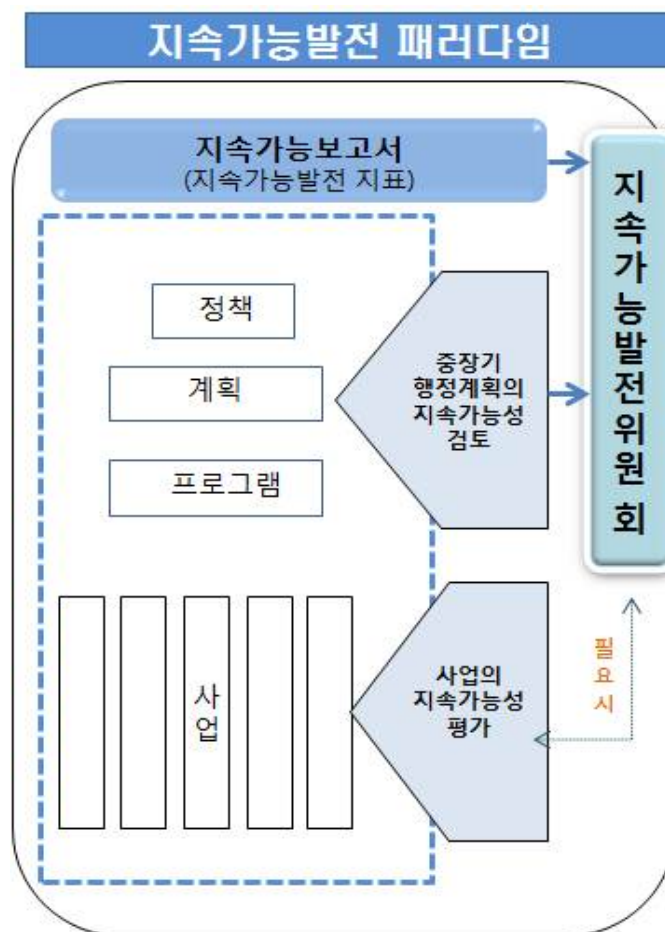
이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에서 실행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통합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타당성 검토가 사업자의 경제적 수익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경제성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크다. 충청남도가 자치단체 중에서 역외 유출이 가장 크다는 점도 사업의 경제성을 재해석해

야 할 중요한 사유가 된다. 사회적 경제,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에 우선적인 경제적 기회가 배려되도록 하는 것도 이 경제적 측면의 평가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 건설되는 도로가 지역 공동체와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인 자연 생태계, 생업, 경제적 기회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의 기준은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그 지표에 대한 지자체의 목표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속가능발전 지표로 잡고, 중장기 행정계획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 저감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계획은 지속가능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2) 지속가능성 평가의 계층구조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차원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5>와 같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행정 내부가 아닌 전체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평가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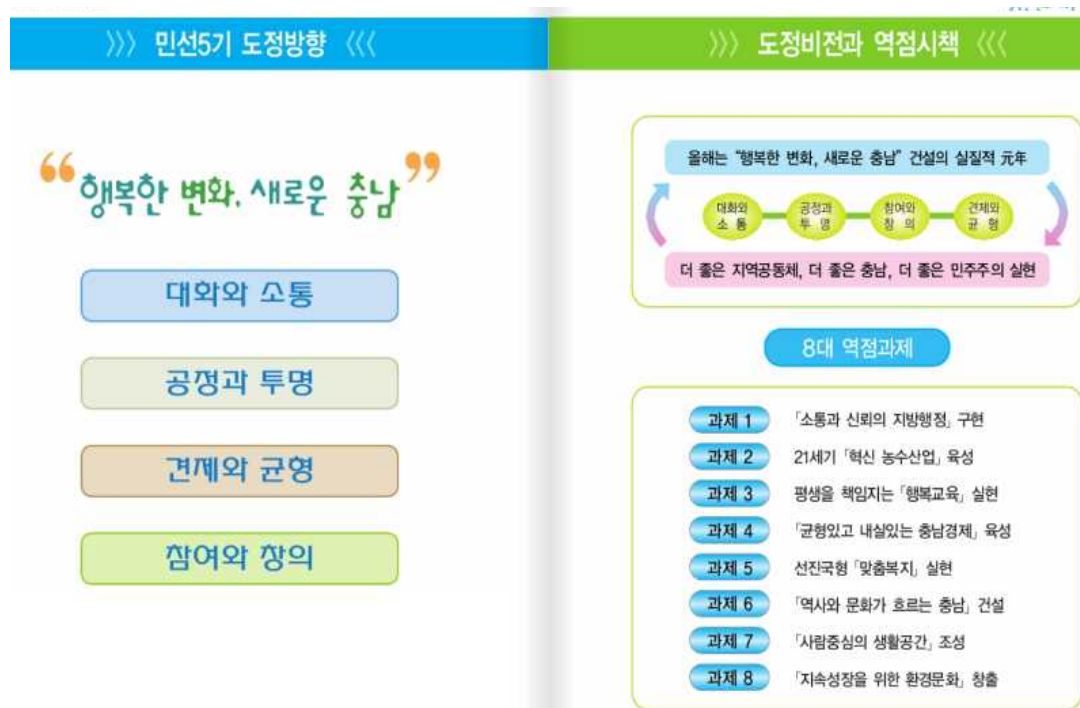


<그림5>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

제2장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의 의의

1. 충청남도의 현황

1) 도정방향과 시책



<그림6> 도정방향과 시책

2) 여건 및 현황

(1)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도시 개발



<그림7> 신도시 건설

(2) 수도권 확장과 수도권에서 남하하는 산업 입지



<그림8> 산업단지

(3) 경기도가 수도권의 개발로 농업 생산 능력 축소

- 경기도의 농업 기능이 축소되어 충남으로 하향
- 충남의 남부 자치단체의 농업 기능이 중요해 짐

■ 논경지면적(16개시도)

<표10> 논경지면적(16개시도)

시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국	1,069,932	1,045,991	1,010,287	984,140	959,914
서울특별시	545	544	536	318	296
부산광역시	5,400	5,147	5,025	4,647	4,442
대구광역시	6,146	5,778	5,186	4,667	4,345
인천광역시	15,747	15,401	14,281	13,662	13,394
광주광역시	8,819	8,310	7,560	7,302	7,015
대전광역시	2,254	2,214	2,131	2,041	1,895
울산광역시	8,421	7,802	7,454	7,209	6,947
경기도	108,334	105,936	103,939	101,896	98,205
강원도	46,889	45,583	43,869	43,190	41,086
충청북도	57,098	54,871	52,994	50,999	49,222
충청남도	181,328	176,107	172,136	169,081	165,678
전라북도	157,719	156,208	146,164	143,222	141,036
전라남도	209,658	205,738	198,874	194,764	190,588
경상북도	150,028	146,486	144,150	141,005	138,427
경상남도	111,445	109,782	105,930	100,104	97,305
제주특별자치도	101	84	58	33	33

※ 자료: 통계청

■ 논경지면적(16개시도) <전년비 증감률>

<표11> 논경지면적(16개시도)<전년비 증감률>

시도별	2008	2009	2010	2011
전국	-2.2	-3.4	-2.6	-2.5
서울특별시	-0.2	-1.5	-40.7	-6.9
부산광역시	-4.7	-2.4	-7.5	-4.4
대구광역시	-6.0	-10.2	-10.0	-6.9
인천광역시	-2.2	-7.3	-4.3	-2.0
광주광역시	-5.8	-9.0	-3.4	-3.9
대전광역시	-1.8	-3.7	-4.2	-7.2
울산광역시	-7.4	-4.5	-3.3	-3.6
경기도	-2.2	-1.9	-2.0	-3.6
강원도	-2.8	-3.8	-1.5	-4.9
충청북도	-3.9	-3.4	-3.8	-3.5
충청남도	-2.9	-2.3	-1.8	-2.0
전라북도	-1.0	-6.4	-2.0	-1.5
전라남도	-1.9	-3.3	-2.1	-2.1
경상북도	-2.4	-1.6	-2.2	-1.8
경상남도	-1.5	-3.5	-5.5	-2.8
제주특별자치도	-16.8	-31.0	-43.1	0.0

※ 자료: 통계청

■ 농가인구(16개시도) <전년비 증감률>

<표12 > 농가인구(16개시도)<전년비 증감률>

시도별	2008	2009	2010	2011
전국	-2.7	-2.2	-1.7	-3.3
서울특별시	-20.9	-18.2	92.0	-13.5
부산광역시	-1.1	-11.5	13.0	-5.6
대구광역시	-6.8	-11.1	24.7	1.0
인천광역시	-9.4	4.7	-4.8	-4.1
광주광역시	-9.8	-0.8	6.3	-7.3
대전광역시	6.2	3.8	12.2	6.3
울산광역시	-2.5	-1.4	-9.4	-2.7
경기도	-1.4	-0.8	-4.3	0.1
강원도	-3.4	-2.6	-4.0	-4.5
충청북도	-2.1	-2.2	-5.4	-2.1
충청남도	-1.2	-2.6	-5.5	-4.1
전라북도	-3.4	-1.6	-2.8	-6.5
전라남도	-3.0	-3.1	-6.9	-4.1
경상북도	-2.0	-2.2	2.4	-4.1
경상남도	-3.8	-3.0	1.1	-3.1
제주특별자치도	-2.7	2.6	9.3	-0.4

※ 자료: 통계청

■ 농업소득(9도) <전년비 증감률>

<표13> 농업소득(9개시도)<전년비 증감률>

시도별	2008	2009	2010	2011
전국	-7.2	0.5	4.1	-13.3
경기도	-12.2	-15.9	9.6	-63.6
강원도	30.8	5.7	19.6	-19.6
충청북도	-30.1	43.7	-31.4	-27.0
충청남도	19.7	-23.6	-3.6	-34.7
전라북도	-7.0	2.5	19.5	-2.5
전라남도	-15.9	-3.3	6.9	29.3
경상북도	-4.8	13.4	-15.6	-13.4
경상남도	-23.9	34.1	5.7	23.3
제주특별자치도	2.4	-31.4	72.3	-37.3

※ 자료: 통계청

(4) 지역내총생산(GRDP)

<표14> 지역내총생산(GRDP)

시도별	2008	2009	2010	2011
전국	1,028,500,488	1,065,664,629	1,172,742,223	1,242,903,801
서울특별시	248,383,240	257,598,048	271,649,357	283,651,279
부산광역시	56,182,324	55,525,657	59,531,015	62,691,526
대구광역시	32,714,330	32,797,086	35,631,907	37,550,188
인천광역시	47,827,269	50,255,626	56,856,925	59,294,551
광주광역시	21,745,349	22,066,126	25,140,087	26,580,044
대전광역시	23,218,135	24,211,355	26,412,681	27,991,887
울산광역시	52,408,173	51,270,767	59,159,552	69,113,491
경기도	198,948,412	208,296,101	232,428,716	243,031,664
강원도	26,310,580	27,348,473	28,828,933	30,284,916
충청북도	30,104,794	32,175,365	36,233,182	38,520,655
충청남도	57,973,983	65,133,829	76,353,760	84,927,955
전라북도	29,471,304	31,854,976	34,643,065	38,086,788
전라남도	52,387,280	51,047,676	58,750,193	62,589,136
경상북도	67,711,991	69,222,687	78,313,538	81,005,934
경상남도	74,280,287	77,213,071	82,340,582	86,454,801
제주특별자치도	8,833,037	9,647,786	10,468,730	11,128,986

지역내총생산(시장가격) = 지역내총부가가치(기초가격) + 순생산물세
 2011년 지역소득 잠정추계결과임(2012.12.24)

※ 자료: 통계청

(5) 고용률

<표15 >고용률(16개시도)

시도별	2009	2010	2011	2012
전국	58.6	58.7	59.1	59.4
서울특별시	58.1	58.9	59.7	59.7
부산광역시	54.1	54.3	54.4	55.6
대구광역시	56.4	57.0	56.8	58.2
인천광역시	59.0	59.3	60.3	61.2
광주광역시	56.4	57.0	56.6	56.2
대전광역시	57.3	57.0	57.3	57.5
울산광역시	57.9	58.4	59.0	59.2
경기도	58.9	59.0	59.1	59.5
강원도	57.8	56.1	56.4	56.7
충청북도	59.4	59.6	59.6	58.7
충청남도	60.5	60.4	60.9	61.5
전라북도	58.2	57.3	57.8	57.4
전라남도	63.8	62.1	62.1	62.6
경상북도	62.1	62.5	62.0	62.0
경상남도	59.6	59.1	60.1	59.6
제주특별자치도	66.7	64.8	65.8	66.2

※ 자료: 통계청

(6) 농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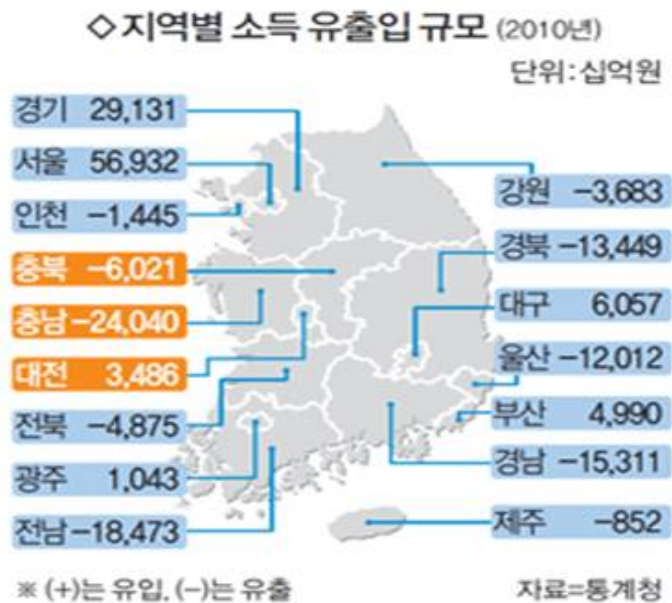
(가구당/단위 천원)

<표16>농가부채(9도)(연말기준)

시도별	2008	2009	2010	2011
전국	25,786	26,268	27,210	26,035
경기도	43,527	41,392	42,585	42,623
강원도	30,180	26,166	30,108	30,665
충청북도	21,374	20,553	22,965	20,740
충청남도	30,014	27,114	24,073	22,656
전라북도	17,759	19,358	26,040	25,661
전라남도	18,891	19,929	20,216	16,718
경상북도	17,603	20,282	22,078	20,303
경상남도	26,324	32,302	27,897	28,927
제주특별자치도	43,559	40,172	40,539	31,042

※ 자료: 통계청

(7) 역외 유출



※ 자료: 통계청

<그림9> 지역별 소득 유출입 규모(2010년)

(8) 경제성장과 환경문제에 관한 도민 의식

<표17> 경제성장 속도를 늦추더라도 환경문제 먼저 해결(20세 이상 인구) / 2011년도

단위: %

시도	계	매우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 국	100.0	44.7	40.5	11.4	3.4
충 남	100.0	45.1	38.5	11.5	4.9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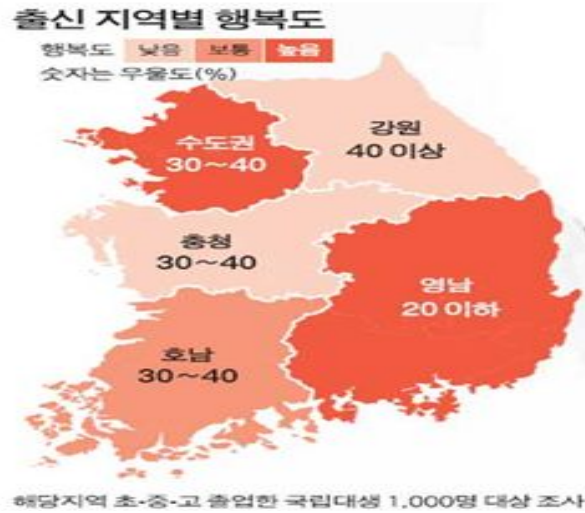
(9) 자살률

<표18>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16개시도)



※ 자료: 통계청

(10) 행복도



※ 자료: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그림10> 출신 지역별 행복도

(11) 충청남도의 지속가능성

<표 19> 충청남도의 지속가능성

충청남도의 지속가능성										
경제 3위, 사회 5위, 환경 15위 명성 4위, 총점 8위										
지자체 지속가능지수 점수 및 순위표										
	경제(1000점)	순위	사회(1000점)	순위	환경(1000점)	순위	명성(1000점)	순위	총점(4000점)	순위
대전광역시	536.11	13	650.29	7	787.50	1	661.94	2	2635.83	1
서울특별시	611.11	8	678.00	2	675.00	4	614.50	12	2578.61	2
경상남도	708.33	2	655.14	6	575.00	9	640.13	10	2578.60	3
경기도	730.56	1	682.86	1	512.50	13	635.31	11	2561.23	4
전라남도	650.00	6	664.86	4	550.00	11	645.75	6	2510.61	5
제주도	638.89	7	496.00	16	712.50	3	645.44	7	2492.83	6
울산광역시	611.11	8	526.86	13	662.50	5	676.69	1	2477.16	7
충청남도	691.67	3	655.43	5	475.00	15	652.38	4	2474.47	8
광주광역시	486.11	14	581.14	10	762.50	2	601.00	14	2430.75	9
충청북도	661.11	4	519.14	14	587.50	8	641.06	9	2408.82	10
부산광역시	438.89	16	665.43	3	662.50	5	614.19	13	2381.00	11
경상북도	658.33	5	642.57	8	425.00	16	644.06	8	2369.97	12
전라북도	541.67	12	593.14	9	550.00	11	654.44	3	2339.25	13
강원도	588.89	10	513.71	15	562.50	10	651.38	5	2316.48	14
대구광역시	483.33	15	536.57	12	662.50	5	574.81	16	2257.22	15
인천광역시	563.89	11	554.86	11	500.00	14	594.63	15	2213.37	16

※ 자료 : '2011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성지수' / 2011.1.26(ERISS)

3) 지속가능발전 도입의 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청남도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신도시 개발, 수도권에 산업 입지 대체 수요로 인한 산업단지의 개발 등 우리나라가 수십 년에 걸쳐서 겪었던 과정을 단 몇 년 만에 겪고 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양극화, 일자리 부족, 사회적 불안정, 환경훼손과 오염 등이 수십 년에 걸친 개발사업의 결과라면, 충청남도의 개발 사업은 이러한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충청남도 행정은 과거의 실패를 걸러내고, “보다 형평하고,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 누구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온정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로 가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위에서 살펴본 충남의 지표들은 경제적 생산은 많지만, 역외 유출이 심각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행복도가 낮고 자살률이 높은 상황이고, 환경적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늘고 있는 등 오히려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실태에서 부분적인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급격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환경에 대한 예측과 예방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충남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할 필요도 크지만,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이론에서 제기하는 통합적 평가의 필요성과 일치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가 통합적 평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는 많은 연구와 실행방안들이 제안되었지만,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틀은 아직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제적 관점에서 사업의 수익성이나 비용/편익을 분석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편익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기존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똑같은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우선권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에 따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다. 형평성이라는 관점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경제 개발이 이루어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누구든 투자를 해서 지역에서 사업을 벌이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기존의 경제 성장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 정책의 결과이다. 이미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사업의 추진 구조를 바꾸지 않고 환경영향평가가 평가 항목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충청남도가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성장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일이다. 지속가능발전을 행정의 기본 철학으로 설정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는 자연스럽게 지속가능성 평가로 발전할 수 있고, 그 내용은 경제, 사회, 환경 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에 중시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과정까지를 포함할 수 있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의 발전된 형태로서 지속가능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환경영향평가가 협의 기능에서 벗어나 정보제공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발전 방향이 실현되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가치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은, 개발사업을 전제로 한 상대적인 입지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은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전제로 한 지속가능성 평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상황

충청남도는 민선 5기 자치단체장을 맞아 충청남도의 여건에 맞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부 논의의 결과로 나온 것이 ‘내발적 발전’ 이고 그 실현 방안으로 ‘정책 코오디네이션’, 혹은 ‘정책의 융·복합’ 이 제시되었다(충청남도종합계획2012~2020).

이러한 충청남도의 발전 방향 논의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론에서 제시하는 목표 및 방법과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내발적발전이 충남도의 지역 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기존의 GDP 중심 경제 성장에서 벗어나, 경제발전 과정의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고려하고, 경제발전의 결과가 좀 더 형평성을 갖도록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은 “유연성과 자기교정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UN의 요구는 ‘정책 코오디네이션’ 이나 ‘정책의 융·복합’ 과 같은 맥락이다. 유연성과 자기 교정능력을 갖추는 수단으로 중시하는 행정 내의 수평적 소통과 거버넌스는 정책 코오디네이션과 정책 융·복합을 위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충남의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 주민을 위한 발전이 필요하다.’ 는 인식이 지속가능발전과 맥이 닿아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지속가능발전은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40년 전부터 논의되어 세계적인 이론으로 정립되고, 실천되고 있다.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행정에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를 지나면서 녹색성장으로 오히려 퇴보했다. 그러나 충남의 발전 방향이 지속가능발전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은 진정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경우 그 방향은 지속가능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충청남도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와 별개로 지속가능발전의 지향을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추진 체계와 방법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는 못한 상태이다. 내발적 발전은 때로 대규모 외자유치로 흔들리기도 하고, 전체 도정의 성과를 가늠하는 지표들은 아직도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효과성을 가늠하지 못하는 효율성 지표에 머물러 실적평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충남도가 추구해온 방향이 지속가능발전과 같다고 하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포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충남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는 일과,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

성을 검토하는 일 등의 역할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이명박 정부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녹색성장기본법에 종속시켜, 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없애면서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이 4대강 사업과,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이라는 대표적인 실패로 귀결된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의 복원은 시급히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기본 지향에 동의하고 공무원 교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 교육과정을 설치해 3년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할 만한 일이다. 이 과정을 거친 많은 지자체 및 산하 기관의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지속가능발전을 자치단체에 접목해 실현하거나,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거나, 교육을 통한 인식 확산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기반의 확대는 이후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체계가 정립되고, 세 가지 차원의 지속가능성 평가가 정착되는 과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 검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환경영향평가 검토 현황

(1)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내역

현재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2011년 총27건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내역을 분석하였다(〈표20〉 참조).

<표20>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내역(2011년)

번호	협의 내용	날짜
1	탕정T/C 및 탕정제2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	2011. 2. 1
2	아산 그린테크밸리 산업단지조성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011. 3.21
3	예산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 검토	2011. 3.28
4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2011. 3.31
5	경부고속도로(남이-천안)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검토	2011. 4. 8
6	서산 도시형일반산업단지조성 환경영향평가서(초안)검토	2011. 4.12
7	행정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검토	2011. 5. 6
8	화양-양화 도로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검토	2011. 5.24
9	(주)도고산업개발 채석장 환경영향평가서(초안)검토	2011. 5.30
10	아산 아름다운CC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검토	2011. 6.21
11	가로림 조력발전소건설 환경영향평가서(본안)검토	2011. 7.12
12	당진1 철강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2011. 7.25
13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2011. 7.25
14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검토	2011. 8.19
15	지방어항(고대도,장고도)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검토	2011. 9. 2
16	청양스틸테크노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검토	2011. 9. 9
17	동화기업 열회수시설(소각로) 환경영향평가서(초안)검토	2011. 9.22
18	태안 웨스트비치CC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2011.10.11
19	동부그린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검토	2011.10.19
20	남서울대학교 부지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검토	2011.10.31
21	보령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	2011.11. 1
22	가로림조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검토	2011.11. 9
23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	2011.11.10
24	대산항 준설토투기장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초안)검토	2011.11.14
25	태안화력 9,10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검토	2011.11.14
26	군장항 항로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2011.11.23
27	안면도 지포운여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초안)검토	2011.12.22

이 가운데 8개 사업은 발전소 건설, 고속도로 확장, 도로건설공사, 채석장, 대학교 부지증설, CC조성 등 외부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이었고, 나머지 19개 사업은 산업단지, 산업단지진입도로, 도로건설공사, 토석채취허가, 열회수시설, 관광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준설토투기장축조공사, 항로준설사업, 지방어항개발사업, 조력발전소건설 등 충남도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었다.

(2) 환경영향평가서 유형별 구분

<표21>은 내부사업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서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 산업단지진입도로, 도로건설공사, 토석채취허가, 열회수시설, 관광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준설토투기장축조공사, 항로준설사업, 지방어항개발사업, 조력발전소건설 등 각 사업은 시행자가 있더라도 투자입지과, 종합건설사업소, 도로교통과, 산림녹지과, 환경정책과, 관광산업과, 건설정책과, 항만물류과, 항만공사과, 수산과, 전략산업과 등 담당부서가 존재한다.

<표21> 환경영향평가서 유형별 정리(내부)

구분	담당부서	시행자	협의기관	승인기관	비고
산업단지	투자입지과				의견 없음
					자료 없음
		창해산업개발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법률
		현대그린파워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지식경제부	
산업단지진입도로	투자입지과				의견 없음
		대우건설			법률
	종합건설사업소	종합건설사업소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법률
도로건설공사	도로교통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유역환경청	대전지방국토 관리청	법률
토석채취허가	산림녹지과	한국광해관리공단, GS칼텍스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법률
열회수시설	환경정책과	동화기업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청(환경 녹지국 환경 관리과)	법률
관광지조성사업	관광산업과	태안군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법률
					의견 없음
			충남개발공사		법률
택지개발사업	건설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부	충청남도	법률
준설토투기장축조공사	항만물류과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금강유역환경청	국토해양부	법률
항로준설사업	항만공사과	군산지방해양항만청			부서별/법률
지방어항개발사업	수산과	충청남도	금강유역환경청	충청남도	법률
조력발전소건설	전략산업과	가로림조력발전(주)	환경부	지식경제부	부문별 세부검토
					추가보완요구

협의 또는 승인기관으로는 지식경제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남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환경부 등이 있었다. 검토 내용의 핵심은 주로 법률 검토 위주였고, 전혀 의견이 제시되지 않는 것도 3건이나 있었다.

〈표22〉는 외부사업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서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전소 건설, 고속도로 확장, 도로건설공사, 채석장, 대학교 부지증설, CC조성 등의 사업은 동부발전, 서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고산업개발, 성아학원, 고월, 태안기업, 한국건설산업진흥 등의 시행자가 있었고, 협의 및 승인기관으로는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연기군, 아산시, 천안시, 태안군 등이 있었다. 검토 내용은 주로 부서별로 법률 검토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표22〉 환경영향평가서 유형별 정리(외부)

구분	시행자	협의기관	승인기관	비고
발전소건설	동부발전(주)	환경부	지식경제부	부서별/법률
	한국서부발전(주)	환경부	지식경제부	부서별/법률
고속도로확장	한국도로공사	환경부	국토해양부	부서별/법률
도로건설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금강환경유역청	연기군, 대전광역시	법률
채석장	(주)도고산업개발	금강환경유역청	아산시	부서별/법률
대학교 부지증설	학교법인 성아학원	금강환경유역청	천안시	부서별/법률
CC조성	(주)고월	금강환경유역청	아산시	부서별/법률
	태안기업(주), 한국건설산업진흥(주)	금강유역환경청	태안군	부서별/법률

2) 환경영향평가 검토실태

2011년 충청남도에서 수행한 총27건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내부 사업의 경우 ‘의견 없음’ 인 경우도 있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풍부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외부 사업의 경우 주로 부서별로 법률적 요건만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친환경상품 사용 계획 수립이나 소음 및 진동 저감대책이 요구된다는 등의 의견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중양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건 배상액 산정 기준’ 등을 준수하라는 의견에 그쳤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업종은 가급적 제한하라’거나 ‘훼손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식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 또는 ‘불가피한 임목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문구는 단지 당위적으로 반복 제시될 뿐이었다.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과 같은 문장은 사업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반복되기도 했다.

또한 ‘바람직함’, ‘수립해야 함’, ‘적용해야 할 것임’, ‘실시해야 함’, ‘강구해야 함’, ‘각종 의무사항을 이해해야 함’ 등 원칙적인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치수방재과나 수질관리과가 아산시, 태안군, 천안시 등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추가된 것도 형식적인 절차를 나열한 것일 뿐 사업의 영향에 대한 검토라고 보기 어려웠다.

외부 사업의 경우 부서별로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는 식이었는데, 2011년 하반기부터는(11. 가로림 조력발전소건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환경영향평가서의 페이지를 명시하며 자료 제시를 요구하거나 비교적 분석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동부그린발전소 건설사업과 태안화력 9, 10호기 건설사업의 경우 주민과의 사전 공감대를 강조하고 있었다. 동부그린발전소 건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분석, 평가하기도 했고, 가로림 조력발전소건설에 대한 협의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의 개선 가능성을 볼 수 있을 만큼 상대적으로 풍부한 평가내용을 담고 있었다.

3) 환경영향평가 검토의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는 내부 사업의 경우 형식적인 절차를 지적하는 선에서 그치거나 심지어 ‘의견 없음’으로 제출되는 등 충분한 검토와 풍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부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외부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법률에 명시된 지침을 준수할 것을 상기시켜주는 수준의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 역시 또 다른 형식적 요건에 대한 강조일 뿐인 것이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의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충청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참여는 대부분 중앙부처의 사업에 대한 집

행수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 이는 내부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타 부서 관할 사업에 대해 정책과정의 초기에서부터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와 검토를 바탕으로 한 의견을 내기 어렵다.

내·외부 사업을 막론하고 주로 개발사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사업이든 충청남도 차원의 사업이든 지역개발 담론과 관련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 정책형성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의 경제발전, 사회적 통합, 환경보호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체론적인 접근을 통해 갖춰져 온 정책이 아니므로 반대 또는 보완 의견을 내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방해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또한 해당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의견을 내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일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구조에서는 전문성도 문제가 된다. 중앙정부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충청남도에서는 환경부서의 담당자 1인이 부서 차원의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짧은 기간에 피상적인 의견을 취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평가를 위한 도구나 틀이 존재하지 않고, 전문가 pool도 환경부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4) 환경영향평가 검토의 개선방향

2012년 정안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의 결정 내용(충청남도, 2012)을 보면,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분야를 검토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계획의 비교와 수단 및 방법에 관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대안별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검토의 과정과 결과물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안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의 결정 내용은 충청남도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하천기본계획에 대해 일부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만 스코핑(scoping)을 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주민의 의견수렴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적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최종 대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설명회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원이 제한적이고, 심의의견에 일정한 기준이 없이 산발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개선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검토의 문제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선 각 사업의 지속가능성 전반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환경적인 영향에만 국한하여 영향을 검토할 수는 없다.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호 각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는 검토에 참여하는 전문가 pool조차도 일정한 기준 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일관되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을 도출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는 또한 폭넓은 주민참여에 의해 보완되어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전반을 직접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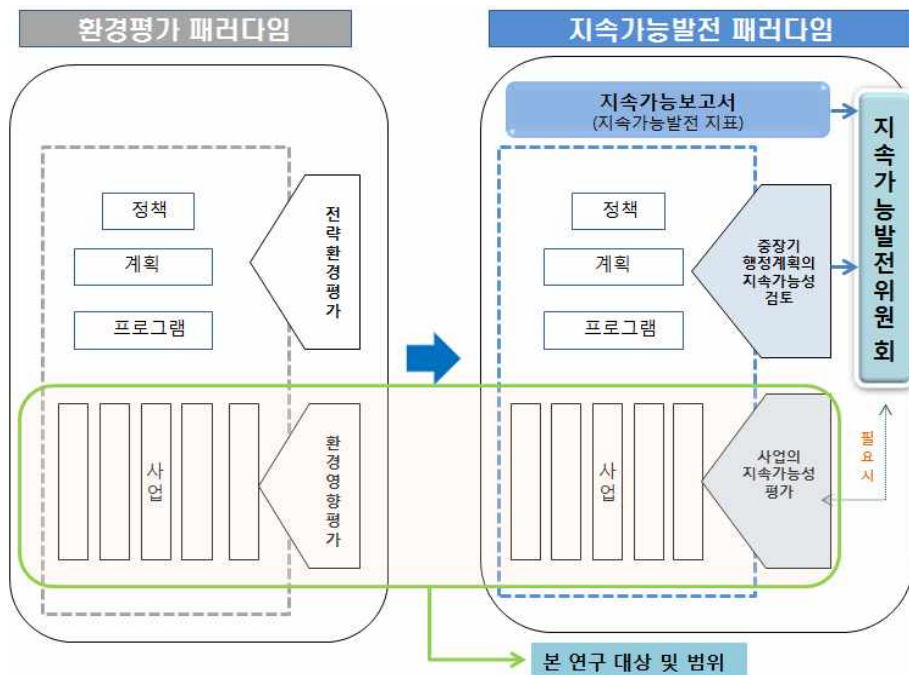
지속가능성 평가가 평가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검토 및 평가 결과에 따른 피드백이 체크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이 적용된 후에는 재작성이나 보완조치 후 재검토 등 피드백 기준이 적용되어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내부 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과정을 강화하여 충청남도가 부서간 활발한 협의와 조정에 의해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사업이 충청남도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유되고 조정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와 같은 역할을 부여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면, 충청남도의 지속가능성 전략과 목표 설정, 지속가능발전 지표 설정, 폭넓은 주민참여에 의한 지속가능성 평가, 행정 내부는 물론 주민참여와 연계한 모니터링까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의 의의

1) 환경영향평가와 지속가능성 평가의 관계 도식

앞에서 살펴본 환경영향평가의 체계와 지속가능발전 평가 체계의 구조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11>과 같다. 왼쪽에 나타난 환경평가는 사업단위의 환경영향평가와 정책, 계획,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전략 환경평가 두 계층으로 구별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전략환경평가로 진화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행정 절차 내에서 해당 단위의 사업이나 계획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그림 11>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이에 비해 오른쪽의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에서는 행정을 넘어선 행정구역 내의 상황을 지속가능발전 지표로 나타내는 지속가능보고서 체계를 출발점으로 한다. 이 보고서의 지표들은 해당 행정 단위의 지속가능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며, 이 지표의 설정은 하위 두 단위의 지속가능성 평가의 판단 기준이 된다.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은 환경평가제도가 사업이나 계획의 실행 결과로 인한 사회의 상황에 대한 측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비해 사회전반의 상황에 대한 소통과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직접적인 대상인 사업에 대한 평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속가능성 평가로 발전하는 것은 단순히 평가항목을 늘이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서 보듯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수반되는 일이다.

2)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의 의의

(1) 환경영향평가의 개선

우선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의미가 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항목이 환경에 한정되어 있는 한계를 벗어나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사업을 지속가능성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이로써 환경영향평가의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 평가항목의 협소함과 의사결정 지원 기능의 미흡함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2) 행정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 도입

지속가능성 평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에 앞서 행정이 지속가능발전을 목표 가치로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고, 양적인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질을 중시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그 결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형평성,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러한 가치의 정착은 환경영향평가가 개발 사업을 전제로 상대적 입지를 가졌던 것에서 벗어나,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가능발전을 가치로 설정하게 되면 정책들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더 많은 도로를 건설하는 대신, 노령화된 지역 사회 여건에 맞는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정책이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대중교통 활성화하는 방안들이 중요하게 된다.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 더 큰 관광지를 개발하는 외부투자를 유치하는 대신에 자연자원을 보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 자원을 활용해 기존의 생업을 이어가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게 하며, 개발로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사업들을 우선해서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들이 환류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이 점차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에 다가가게 될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 관점의 의사결정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아직 중앙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는 지방자치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형평성, 안전성을 국가의 GDP 증가보다 우선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역외유출이 가장 큰 충청남도의 입장에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 평가는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의 특성-포괄성, 형평성, 안전성, 신중성, 연계성을 고려함으로써 사업자 관점의 경제적 타당성의 한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4. 국내외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사례분석

지속가능성 평가 사례는 여러 영역과 분야에서 찾을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및 계획, 사업 등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사례와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항목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지속가능보고서 단계의 평가 사례

(1) 영국 브리스틀시 삶의 질 평가 지표³⁾

■ 현황

- 브리스틀시는 2010년 고용조건, 교통, 교육, 건강, 녹지 공간 등 삶의 질 영역에서 영국 내 1위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질, 생물다양성, 생태학적 발자국 등 환경 영역에서 낮은 순위인 13위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로컬푸드, 경제, 재활용 등 미래 대비성에 영역은 5위를 나타낸다.

- 브리스틀은 영국에서 좋은 고용 여건, 주민들의 높은 교육수준 등으로 잘 알려진 도시 중 하나이고 삶의 질 영역에서는 낮은 실업률, 고숙련된 지역주민, 그리고 학교 여건의 개선 등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데는 큰 성과를 이루어왔지만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계획된 폐기물 실행계획은 이 인근 지역의 모범으로 브리스틀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 브리스틀시는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과 보고서 발행에 착수하여 '95년 지속가능성/삶의 질을 측정하는 60개의 지표가 담긴 지역환경 보고서(Local Environment Report 1995)를 발행했다. 이후 2000년에는 '97년에 영국정부가 지방의제21을 2000년까지 작성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실천하여 12개의 지속가능성 의제로 구성된 지방의제21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지역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포커스 그룹은 '핵심 지표(headline indicators)'를 선정하였다.

- 2001년 처음으로 지역 삶의 질조사(Quality of Life in your Neighborhood Survey 2001)를 실시하였으며 여기에는 4,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 삶의 질에 관한 보고서는 2001년을 시작으로 매년 발행되었으며 이 밖에 청소년 대상 조사 보고서(Young Person's Quality of Life Survey 2002), 어린이 대상 조사보고서(Catching the Rye 2004)와 사회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보고서(The Minority Report 2005)가 발행되고 있다(Bristol City Council, 2006).

3) 본 사례는 고재경(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 구축 방안연구(2008)」에서 발췌하여 수정하였다.

■ 평가 대상 및 범위

- 브리스톨시의 삶의 질 지표평가는 브리스톨시 삶의 질 추세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매년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지표에 의한 정량 평가만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매년 2,500~3,50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에 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함.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지역 기관에 의한 하향식 방식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기반으로 한 상향식 방식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평가주체 및 방법

Quality of Life Index	Baseline 2001	2002	2003	2004	2005
시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	😊	😊	😊	😊
총 생활폐기물	😊	😞	😞	😊	😊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	😊	😊	😊	😊
도심지 교통량	😊	😊	😊	😊	😊
심각한 도로 교통사고	😊	😞	😞	😞	😊
대기질	😊	😊	😊	😊	😊
표층수 수질	😊	😊	😊	😊	😊
소음피해	😊	😊	😊	😞	😞
애완견 배설물 피해	😊	😊	😊	😞	😊
물이용 및 보전	😊	😊	😊	😊	😊
식인성, 수인성 질병	😊	😊	😊	😊	😊
취(퇴치 요구)	😊	😞	😊	😞	😞
조기사망(15-64세)	😊	😊	😊	😊	😊
유아사망(1세 미만)	😊	😊	😊	😊	😊
노숙자 및 보호대상 가정	😊	😊	😞	😊	😊
구시가의 주택개발율	😊	😊	😊	😊	😊
실업률	😊	😊	😊	😊	😊
지원금(benefit) 신청자	😊	😊	😊	😊	😞
신규 사업자 등록	😊	😊	😊	😊	😊
고등교육 이수	😊	😊	😊	😊	😊
초등교육 이수	😊	😊	😊	😊	😊
무단결석	😊	😊	😊	😊	😊
총 범죄 발생율	😊	😊	😊	😊	😊
보호대상으로 등록된 아동	😊	😊	😊	😊	😊
박물관 및 예술관 방문자	😊	😊	😊	😊	😊
TOTAL	50	58	59	58	65



Red = 1 악화되고 있음/ 상태 좋지 않음/ 지속가능성 적음

Yellow = 2 그대로임/ 특별한 변화 없음

Green = 3 향상되고 있음/ 상태 좋음/ 지속가능성 높음

※ 자료 : Bristol City Council, 2006

<그림 12> 브리스톨시 삶의 질 지표 정량평가

Your views – Quality of life survey Index	2001	2002	2003	2004	2005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	☹	☹	☹	☹
사회보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	☺	☺	☺
거주지역 일자리 대한 만족도(%)	☺	☺	☺	☺	☺
주거비용에 대한 만족도(%)	☹	☹	☹	☹	☹
도로, 공공장소 등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	☺	☺	☺	☺	☺
공원의 양과 질에 대한 만족도(%)	☺	☺	☺	☺	☺
지역 상가 이용이 용이한 주민 비율(%)	☺	☺	☺	☺	☺
집정원과 발에 서식하는 새가 증가한다고 느끼는 주민 비율(%)	☺	☺	☺	☺	☺
육아시설 이용이 용이한 주민 비율(%)	☺	☺	☺	☺	☺
스포츠/레저센터 이용이 용이한 주민 비율(%)	☺	☺	☺	☺	☺
의료서비스 이용이 용이한 주민 비율(%)	☺	☺	☺	☺	☺
매년 3개 이상의 문화/레저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 비율(%)	☺	☺	☺	☺	☺
교육 및 기술자격증을 소유한 주민 비율(%)	☺	☺	☺	☺	☺
가정내 흡연자 비율(%)	☺	☺	☺	☺	☺
적당한 운동을 하는 주민 비율(%)	☺	☺	☺	☺	☺
전체적인 버스서비스에 만족하는 주민 비율(%)	☺	☹	☺	☺	☹
교통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 비율(%)	☺	☺	☹	☹	☹
거주지역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 비율(%)	☺	☺	☺	☺	☺
과거 3년간 치안상태가 개선되거나 유지되고 있다고 느끼는 주민 비율(%)	☺	☹	☺	☺	☺
TOTAL	38	42	46	47	44

※ 자료 : Bristol City Council, 2006

<그림 13> 브리스틀시 삶의 질 지표 정성평가

- 브리스틀시는 매년 삶의 질을 측정하는 150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 혹은 악화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기준년도의 핵심적인 지표를 2점으로 놓고 이를 기준으로 잘 되어가고 있으면 3점, 잘 안 되고 있으면 1점을 부여한다.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지속가능성의 정도는 높아짐. 또한 각 지표의 추이를 교통신호등으로 표시하고 결과의 합이 지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지자체와 주민들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동기 부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표에 의한 정량 평가만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매년 2,500~3,500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에 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지역 기관에 의한 하향식 방식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기반으로 한 상향식 방식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사례 평가

- 브리스틀 시의 사례는 지속가능보고서 단계의 평가이다. 지표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지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들이 선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지역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의 결과가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환류해 주는 역할을 잘 보여준다.

2) 정책 및 계획 등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사례

(1) 서울특별시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도입 사례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지속가능성 평가절차는 먼저 추진부서에서 지속가능성 평가 사전협의를 요청하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관련 공무원을 참여시켜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시에 통보하며, 시장은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지속가능성 평가 안건으로 부의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지속가능성 평가 사전검토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토대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되, 평가결과는 토론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평가대상별로 평가의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기획조정위원회에 제출하고, 기획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협의·조정 후 시장에게 통보하면,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당해 사업계획을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 2002년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도입된 지속가능성평가제도가 시행 이후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사전협의 대상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중에서 지속가능성 평가에 회부된 건수도 늘고 있다. 접수된 안건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촉진지구 등의 뉴타운 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등의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이다.

<표23>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0조(평가대상안건 선정)

①조례 제16조에 의한 지속가능성 평가대상안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 또는 사업(이하 "사전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중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선정한다.

1. 환경정책과 통합적으로 조정·연계가 필요한 별표 1의 주요행정계획(변경 계획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2 개발사업)

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안건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현저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평가대상안건으로 선정하되, 사업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공무원을 참석시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
|---------------------|-------------------------|
| 1. 지형·지질 변화 정도 | 2. 습지 및 동·식물 등 생태 훼손 정도 |
| 3. 자원이용 정도 | 4. 대기오염 영향 정도 |
| 5. 수질오염 영향 정도 | 6.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
| 7. 녹지 훼손 및 경관 보존 정도 | 8. 생활장애 영향 정도 |
| 9. 토양피복 정도 | 10. 미래세대 및 환경약자의 고려정도 |

③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평가대상안건을 시

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조례 제16조제1항의 지속 가능성 평가·자문안건으로 부의 한다.

제11조(사전협의대상사업계획 제출 등)

① 제10조제1항의 사전협의대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당해 계획안을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완료전 중간보고 결과를 함께 제출한다.

1.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정계획 : 계획을 입안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기 전

2. 제10조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 기본계획을 입안하여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득하기 전

②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대상사업계획안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 평가대상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한다.

제12조(평가절차 및 방법)

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가능성평가대상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고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검토결과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보고한다.

1. 서울의제21의 8대 분야 기본원칙과 30개 행동목표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2. 환경보전, 사회적 형평, 경제적 효과 측면을 고려하되 환경보전 측면에 비중을 둔다.

3. 평가대상에 따라 중점평가항목을 선정하고, 분야별로 정성적으로 검토를 한다.

③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사전검토내용을 토대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되, 평가결과는 토론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④ 제1항·제2항의 사전검토 및 제3항의 평가를 함께 있어 고도의 전문적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3항의 평가결과를 평가대상별로 평가의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기획조정위원회에 제출하고, 기획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협의·조정한 후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평가 소요기간)

①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대상 안건에 대하여 제10조제3항에 의한 안건 부의일부터 2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기간을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과 협의하여 평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 처리)

① 주관부서는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당해 사업계획 등을 최종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간사를 경유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 : 서울특별시녹색시민위원회

(2) 영국 지역계획지침과 지속가능성평가 ⁴⁾

■ 도입배경 및 목적

- 영국은 지방정부가 지역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 지속가능성평가(Sustainability Appraisal)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평가 목적은 공간계획 전략과 지역의 다른 정책이 지속가능발전 원칙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으며, 2004년 7월 발효된 유럽의 계획과 프로그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전략환경평가 규정 2001/42/EC(Environmental Assessment of Plans and Programmes Regulations 2004로 대체됨)를 충족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지역계획 과정에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추가하여 개편하는 노력은 1997~2001년 사이에 영국 각 지역 별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0년에 만들어진 정책계획지침(Policy Planning Guidance:PPG)의 11장 “지역 계획(Regional Planning)”에서는 경제, 사회, 환경 정책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주요 메커니즘으로 지속가능성 평가가 필요하다(DETR, 2000a:17)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계획 담당자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영국 정부는 지역계획 지속가능성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Good Practice Guide on Sustainability Appraisal of Regional Planning Guidance)(DETR, 2000b)을 제시하였다.

■ 제도적 기반



-영국은 2004년 「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2004」의 Regulation 19(5)를 통해 관계 당국은 계획을 준비할 때 지속가능성 평가를 반드시 집행하고 평가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속가능성 평가 절차를Regulation 18(5)에서 정의하고 있다.

■ 평가 대상 및 방법

- 「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2004」에서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지역공간전략(Regional Spatial Strategy, RSS)이나 새로운 개발계획(Development Plan Documents, DPD)이나 보완계획(Supplementary Planning Documents, SPDs)을 수정할 때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전략환경영향평가(SEA)와 중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SEA는 “로컬 단위 소규모 계획이나 중대한 환경 영향을 미치는 계획”에 한해 실시하도록 지속가능성 평가와 구별하고 있다. 평가 방법은 점수를 통해 나타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수록 점수가 높아지고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정적인 영향일 때에는 점수가 마이너스로 표현된다. 평가와 관련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x'로 표현하고 영향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로 표현한다.

4) 본 사례는 고재경(2008)의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 구축 방안연구」에서 발췌하여 수정하였다.

<표 24> 점수 부여 기준

점수	정의
3	 긍정적 영향 증가
2	
1	
0	영향 없음
-1	
-2	
-3	 부정적 영향 증가
X	
?	
X	지속가능성평가와 관련 없음
?	주어진 정보로 영향을 정의할 수 없음

※ 자료 : ODPM, 2005

■ 평가 주체 및 절차

- 지속가능성 평가는 지역의 계획 주체나 지방 행정 관련 부서에서 담당함. 영국의 South West 지역에서는 지속가능성 평가의 권한이 지역개발 주체나 정부 기구를 대신하여 「Regional Roundtable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있다. 또 몇몇 지역에서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공무원을 포함한 더욱 포괄적인 개념의 그룹을 형성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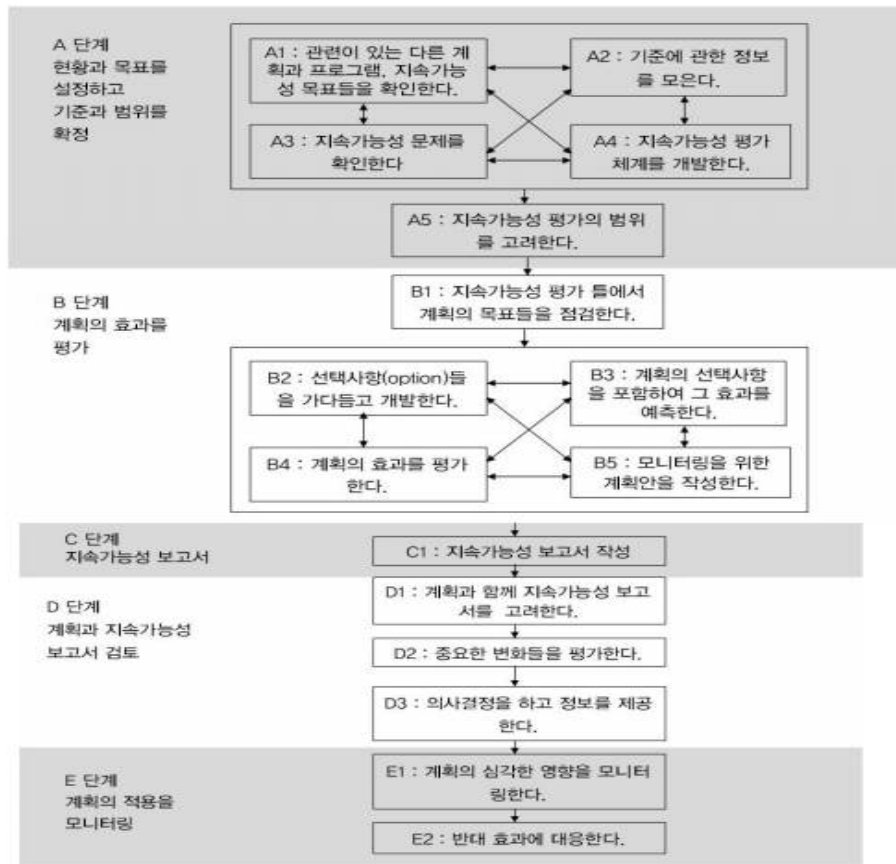
<표25> 영국의 지역별 지속가능성 평가 작성 주체

Region	Stage(s) at which Sustainability Appraisal produced	Commissioned By	Produced by
North East	◇ Draft RPG	RPB	In-house (audited by consultants)
East Anglia	◇ Proposed Changes	GO	Consultants
	◇ Draft RPG	RPB	Consultants
	◇ Panel's Report	GO	Consultants
East Midlands	◇ Draft RPG	RPB and GO	Consultants
	◇ Proposed Changes	GO	Consultants
South East	◇ Draft RPG	RPB	In-house
	◇ Proposed Changes	GO	Consultants
South West	◇ Draft RPG	Roundtable	Consultants
	◇ Proposed Changes	GO	Consultants
	◇ Pre-Consultation draft RPG	RPB	In-house (audited)
Yorkshire and the Humber	◇ Draft RPG	RPB and GO	Consultants
	◇ Proposed Changes	GO	Consultants
North West	◇ Draft RPG	RPB	Consultants

주: RPB(Regional Planning Bodies), GO(Government Organization)

※ 자료 : Counsell D. et. al., 2001

- 지속가능성평가는 <그림14>와 같이 현황과 목표 설정 및 지속가능성 평가 범위 확정, 계획의 효과 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계획과 지속가능성 보고서 검토, 계획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대응 등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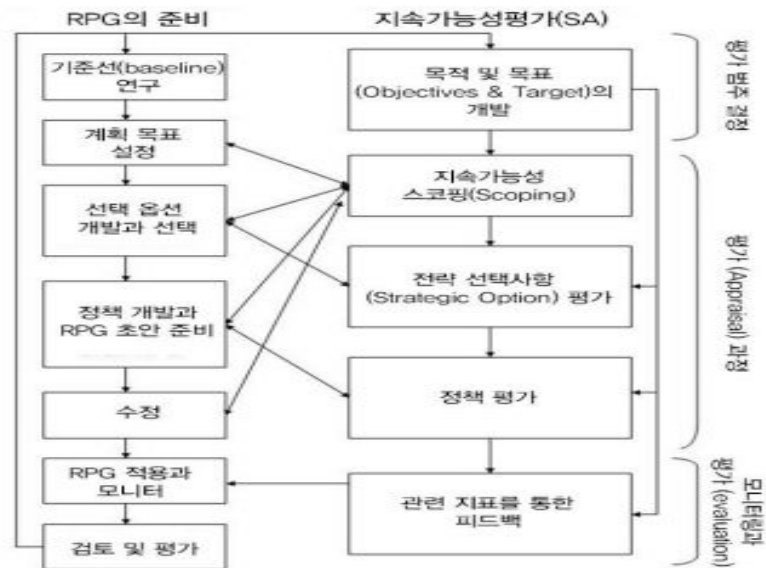


<그림14> 영국 지속가능성 평가 절차 및 관계

- 지속가능성평가는 지역 계획 절차의 다양한 단계와 결합되는데, <그림15>는 지역계획 수립 단계별로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의 설정,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를 통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등 지속가능성 평가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나타낸다.

■ 사례 평가

- 영국의 사례는 전략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이 기능을 수행했다. 주로 중·장기 기본계획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검토해 해당부서에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지속가능성을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이 사례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개별 사업 단위의 지속가능성 검토 보다는 상위의 검토이다.



<그림 15> RPG와 지속가능성 평가

(3)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 평가 : 영향평가 ⁵⁾

■ 도입 배경 및 목적

- 유럽연합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영향평가제도로 지속가능성영향평가(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SIA)와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IA)를 시행하고 있다.

<표26> 유럽연합 내에서 환경영향평가부터 지속가능성평가까지의 변천과정

법주	유럽연합 제도 (도입 시기)	주요 내용 및 적용 대상	평가 관점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EIA, 회원국 개별적용 1985)	토지이용계획 등의 자연, 경제,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분석	환경 ↓
지속가능성 관련 통합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SEA, 회원국 개별적용 2001)	복합적, 전략적, 정치적 중요 사안에 적용, 지속가능성평가 법주에 근접	
	무역 지속가능성영향평가 (TSIA, 유럽연합 무역총국 1999)	유럽연합의 모든 국제무역 협상 과정과 이행단계 평가 및 방향 제시	지속 가능성
규제영향평가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I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전체 2002)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의 지속가능성을 사전에 평가	

5) 본 사례는 김종환(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집필한 원고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영향평가 현황과 시사점”을 발췌하여 수정하였다.

■ 평가대상 및 방법

- 유럽 IA 는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항목은 제안하는 정책에 따라 다르다. 유럽연합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은 어떤 항목을 포함시켜야 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5~6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분야별 핵심 포인트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영향평가가 일부 항목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책 선택의 잠재적인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정책이 누구에게 언제 영향을 미치는지와, 수혜자와 피해자를 가려내 정책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2단계에서는 1단에서 걸러진 평가항목을 토대로 가장 중요한 영향 인자를 파악한다. 여기서는 인과 모델(causal model)을 이용하여 제안된 정책의 의미와 성격을 분석한다. 또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영향의 발생 가능성과 강도(상, 중, 하)를 파악한다.

- 3단계는 정성적 분석에서 밝혀진 문제를 중심으로 몇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정성분석을 실시하고, 가능한 분야는 영향의 정량분석도 병행한다. 이를 토대로 정책 제안의 문제점의 보완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대안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대안의 선택 기법 등도 가이드라인에 제시 되어 있다.

<표2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정책 영향평가 평가 항목 예시

분야	경제	사회	환경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력, 무역 및 투자 흐름 - 내수 시장의 경쟁 - 제도 운영비용 및 사업 추진 - 기업의 행정 비용부담 - 지적재산권 - 연구 및 기술혁신 - 소비자 및 가계 부문 - 특정 지역 또는 영역 - 제3국 및 국제 관계 - 국가 및 지자체 - 거시경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및 노동 시장 - 고용의 질과 관련된 노동 기준 및 노동권 - 사회통합 및 소수자보호 - 기회 균등 및 형평성, 차별철폐 - 사생활, 가정생활, 개인정보 - 거버넌스, 참여, 행정서비스, 법률 서비스, 언론 및 윤리 - 공공 보건 및 안전 - 범죄, 테러리즘, 안보 - 사회보장, 보건 및 교육 - 제도와의 접근성 및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질 - 수질 - 토양 또는 자원 - 기후 - 재생가능, 재생불가능 자원 - 종다양성, 동식물 및 경관 - 토지이용 - 폐기물 발생/처분/재활용 - 환경 재앙 가능성 및 규모 - 교통운송체계 및 에너지 사용 - 기업 활동의 환경영향 - 동식물 건강, 식품 및 사료 안전성

■ 평가 주체 및 절차

- 유럽 IA의 주체는 각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임. 먼저 1단계로 각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가 ‘유럽연합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Impact Assessment Guidelines, 15 June 2005, SEC(2005)791)에 규정된 절차와 형식에 맞추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보고서 초안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관계 부서의 의견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을 적용한다. 영향평가위원회(IA Board)는 처음부터

평가요소 및 방법론 선정 등에 관여하고, 필요한 자문을 함. 2단계로 2006년에 설치된 영향평가위원회(IA Board)는 집행위원회가 영향평가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채택하기에 앞서 각 부서가 만든 정책 제안서와 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하고, 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표28>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정책 영향평가 절차

구분	작업 내용
제1단계 (부서 초안 작성)	① 영향평가 절차 로드맵 작성 ② 관계 부서 연합 평가 그룹 구성 ③ 연구 및 의견 청취
제2단계 (영향평가위원회 심의)	④ 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⑤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제출 ⑥ 관계 부서 협의 (정책 제안 내용 + 영향평가 결과) ⑦ 집행위원회 정책 제안 채택
제3단계(제출, 심사)	⑧ 정책 제안 및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유럽의회 제출, 웹사이트 게시

■ 성과 및 한계

<표2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정책 영향평가 성과와 한계

성과 및 장점	한계 및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통합성 증진 - 증거에 기초한 합리적 정책 결정 - 부서 간 협력 증진 - 비용/편익 평가 및 산정 개선 - 의견 수렴, 투명성, 정책 책임성 강화 - 논란이 많은 정책의 성공적 채택(예: REACH, 대기질 개선 전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정책 중심의 단편적인 접근 위주 - 비용편익분석의 한계 - 단기적 시각과 장기적 시각의 대립

- 2002년에 유럽 IA가 의무화된 이후 2003~2007년 기간 동안에 실시된 영향평가가 300건을 넘었고 이 중 102건은 2007년에 실시된 것이다. 이것은 영향평가가 정책결정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영향평가의 질을 높이고 체계를 갖추기 위해 독립된 영향평가위원회(IA Board)가 2006년에 설치되었으며, 영향평가 과정에 대하여 외부기관의 평가도 실시된다. 집행위원회는 영향평가위원회의 노력에 힘입어 유럽연합의 정책 결정과정이 체계화되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한다.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향평가에 지속가능발전을 반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와 유럽연합이라는 실행주체가 모두 대단히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내 8개 그룹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 도구만 하더라도 물리적 평가, 화폐적 계량평가부터 이해관계자 분석과 모델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3) 개별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사례⁶⁾

■ 00저수지 수변 개발사업 추진 경과

<표30> 00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추진 경과

구분		내용	비고
변경 전	주민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호수 수변개발 사업계획 수립용역 착수(2010.7.9) • 00군 사업설명회(지역주민, 지역단체 및 군관계자)(2010.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설명 및 지역주민의견수렴 	총사업비 995억원
	00군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군 간담회 및 실무협의 9회(2010.8~20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군 주요추진사업과 연계한 친환경개발 - 00군 참여사업 및 관련 행정절차 등 • 00군과 한국농어촌공사 MOU 체결(2011.7)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새복원센터 의견수렴 2회(2010.12.8/2011.1.5) • 자문회의 2회(2010.12.8/2011.1.5) 	
	농수산식품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식품부 관련실무협의 8회(2010.8~20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관련 인허가 	
	KDI 실무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조사 KDI에 의뢰(2011.8.29) • 주민의견청취(2011.9.15~10.5) • 예비타당성조사 중간보고- 기획재정부(2011.12.1) • KDI 실무협의(기준적용 등 협의)(2011.12.20) • KDI 실무협의 2회(기준적용 및 사업계획변경 협의)(2012.01.13,26) 	
변경 후	예비타당성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 실무협의(사업계획 변경제출)(2012.2)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2012.5) • 예비타당성조사 최종보고(AHP결과 도출 전)(2012.4.6) • 예비타당성조사 최종평가 결과 가제본 수령 	총사업비 513억원
	00군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군 환경성검토 협의회 서면심의(2012.7.10~7. 18) 	

■ 지속가능성 검토의 배경

- 00군은 군내에 위치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호수를 숙박시설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생태공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계획에 MOU를 맺어 협력하기로 했다.
- 위의 계획이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생태공원 계획이 배제된

6) 본 사례는 00군 연구(2012), 「00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검토」」를 발췌 수정하였다.

숙박시설 중심의 개발계획으로 축소되어 예비타당성 검토를 마쳤다.

- 이 변경된 사업의 예비타당성 검토가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고, 지자체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외부 기관에 지속가능성 검토를 요청했다.

- 해당 지자체는 기존 개발 계획에서 핵심 요소였던 생태공원 조성이 누락되고, 숙박시설 중심으로 개발 계획이 변경되어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한 상태였고, 지자체의 기본 발전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아 고민을 하는 상황이었다.

- 00군은 2012. 9월 「 00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검토」 연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00저수지 수변개발사업 지속가능성 평가

□ 평가틀

<표31> 사업 평가틀

지속가능발 전영역	지속가능발전 세부가치	구체적 판단 항목 예시
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추진 사업(직무)은 00군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자연자원 가치 존중	추진 사업(직무)은 00군의 자연자원의 가치를 고려하여 추진한다.
	경제적 효과성	추진 사업(직무)은 00군의 소득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온다.
사회 통합	양극화 해소	추진 사업(직무)은 00군의 빈부 격차 등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
	사회갈등 해소	추진 사업(직무)은 00군의 개발과 보존에 따른 주민 및 집단 갈등 해소에 기여한다.
	사회·복지안전망 구축	추진 사업(직무)은 00군의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의 보호에 기여한다.
환경 보존	환경용량 준수	추진 사업(직무)은 00군의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추진한다.
	자원기반 보존	추진 사업(직무)은 00군 등의 자원소비를 최소화하여 추진한다.
	생물다양성 보존	추진 사업(직무)은 00군의 자연생태 환경을 보존하면서 추진한다.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		추진 사업(직무)은 00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하여 추진한다.

□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

○ 경제성 평가

- 예비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으로 재검토

-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경제성을 재해석
 - o 사회적 측면의 평가
- 지역 주민에 대한 FGI와 설문조사
 - 지역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인식, 지역개발 주체에 대한 의견 및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 지역 개발로 인한 갈등 등등에 대한 설문
 - o 환경적 측면의 평가
- 지역의 여건에 대한 현장 조사
 - 지역 환경에 대한 환경부 생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개발 방향의 적정성 검토
 - o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 사업 추진 및 변경과정에 지역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평가
 - 사회조사에서 주민 참여에 대한 조사

□ 평가 결과 요약

<표32> 평가 결과 요약

지속가능발전영역	내 용
경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개발로 인한 경제활성화 기회 박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개발사업 평균의 1/100 밖에 되지 않아 경제적 이익이 외부로 유출 (평균 0.4660, 본 사업 0.0052) •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환경자원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사장되고, 경제적 생산 기반인 생태적 자원이 보존 유지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가 부지 조성 후 미분양으로 방치될 것으로 우려 • 00군청의 비용 부담은 증가하나, 민자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세수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움
사회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발전 방향과 유리되어 사업 진행이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화합에 기여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군의 여타 추진사업에 비해 찬반의 대립이 명확해 갈등의 소지가 있음. • 지역 주민들의 경제에 기여하지 못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 뿐 아니라, 자연 경관의 접근권의 제한, 지역자원의 이용 권한 등의 관점에서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이 동의한 사업과 실제 진행되는 사업이 달라,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됨.
환경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 저수지의 자연 생태 경관을 기반으로 한 사업임에도 자연 생태 경관의 보존을 사전에 고려해 발전 방향을 설정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에 비해 환경부하가 급격히 증가되는 사업 모델임. • 00저수지가 지닌 자연자원적, 전통문화적, 공익적, 미래자원적 가치를 고려하지 못함. •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자연자원의 공익적 이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개방성”, “접근성” 및 “가치의 공유” 라는 3가지 원칙이 반영하지 못함.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의 참여가 단순히 사업계획에 의견을 표시하는 데 그쳐, 지역발전 방향이나 주민들의 생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며, 속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아 갈등의 소지가 있음. • 변경내용에 대한 협의과정 없이 사업을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신뢰가 깨어져 사업 추진기관이 지역주민 및 행정기관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

■ 사례 평가

00저수지 수변개발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는 본 연구의 직접적인 연구범위인 개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에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요청한 사례이다. 검토 기관이 전문성이나 행정력이 부족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에 의뢰해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활용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을 정형화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사안이나,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외부에 평가를 요청하는 방안을 병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3장 환경영향평가와 지속가능성 평가

1.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 내용

1) 환경영향평가법의 의의

(1) 단일법으로서의 환경영향평가법

국가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시기, 협의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집행적인 사항까지 정하고 있었기에 정책적으로나 입법기술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1993년 6월 단일법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 12월부터 시행되었다(함태성, 2012: 27-34).

환경영향평가법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각종 영향 가운데 일부만을 평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분석이 어렵고, 각종 영향평가가 별도로 실시되어 사업의 착수가 지연될 수 있으며, 각 영향평가별로 사업규모 등이 상이하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런데 각 영향평가의 통합이 실제로는 형식적 통합에 불과하여 종래의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3월 다시금 통합영향평가법에서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를 분리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만을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다. 이후 전략환경평가의 도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일원화가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환경부는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 속에 담아 환경평가절차를 개선하고 환경평가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다시금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한다. 여기에서는 사전환

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한 법령 내에 일원화하고 평가대상도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로 나뉘었다. 그런데 2010년 3월 11일 원혜영 의원 등이 사업의 협의 과정상의 속도를 높이는 데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즉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되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2011년 7월 21일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이 있었다(시행일은 2012년 7월 22일).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별개의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했다고 한다.



<그림 16>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 내용

(2)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내용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 전후 환경영향평가를 비교하면 <표3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 법에 나뉘어 있던 것이 환경영향평가 법으로 통합되었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로 나뉘어 있던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었다.

환경영향평가법의 법령체계는 총칙(1장), 전략환경영향평가(2장), 환경영향평가(3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4장),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5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6장), 환경영향평가사(7장), 보칙(8장), 벌칙(9장) 등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표34> 참조).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호). 기존 사전환경성검토가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개발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이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함태성, 2012: 37).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또는 결정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

<표33> 2011년 개정 전후 환경영향평가의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법률의 명칭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법
평가 구분	○ 사전환경성검토 - 행정계획(16분야 92개) - 개발사업(21개 보전지역) ○ 환경영향평가(17분야 77개)	○ 전략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행정계획의 구분	○ 상·하위 행정계획 구분 없이 동일한 절차 및 주민의견 수렴	○ 행정계획의 성격에 따른 구분 - 정책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지역적 범위가 넓고, 기본 방향이나 지침적 성격의 계획 - 개발기본계획: 재정비촉진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 계획 ○ 의견수렴
평가관련 위원회	○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 계획서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대행	○ 없음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아무나 작성 대행)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 평가업자 작성 의무화 ※ 대행업무 범위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차등화
평가사 도입	○ 없음 (대기, 수질 등 매체별 기술자격자)	○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도입, 평가서 작성 총괄
벌칙	○ 사전환경성검토 부실·허위작성 등의 처분 규정 없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허위작성 및 협의내용 미이행 등 벌칙 신설

※ 자료: 박종원(2012: 97-98).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기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의 하나였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지속가능발전의 도모, 실현가능한 범위 내의 대안 마련, 정보제공 및 참여의 원칙 실현, 간결하고 평이한 작성, 누적적 영향의 고려 등의 기본 원칙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제4조 제1호-제5호). 특히 제1호에서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지속가능성 평가로 보완, 전환, 강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표34> 환경영향평가법의 구성

장	조항 내용
제1장	총칙(제1조-제8조)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제9조-제11조)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제12조-제15조)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제16조-제21조)
제3장	환경영향평가 제1절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제22조-제23조)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제24조-제26조) 제3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등(제27조-제34조)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제35조-제41조) 제5절 사·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42조)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43조-제49조)
제5장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제50조-제52조)
제6장	환경영향평가의 대행(제53조-제62조)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제63조-제65조)
제8장	보칙(제66조-제72조)
제9장	벌칙(제73조-제76조)

2)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범위

(1) 환경영향평가 분야와 대상사업 결정 방법

환경영향평가 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 등의 분야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제7조). 평가분야별 평가항목은 <표35>와 같다. 즉 대기환경, 물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6개 평가분야에 걸쳐 21개 평가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첫째, 대상사업을 미리 정하지 않고 스크리닝(Screening)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 둘째, 대상사업을 미리 법령에 정하여 운영하는 방법, 셋째, 양자의 절충형으로 일정한 범위의 사업은 법에 규정하고 그 외는 스크리닝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함태성, 2012: 42).

<표35> 환경영향평가 등의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가항목
대기환경(4)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물환경(3)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토지환경(3)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연생태환경(2)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6)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사회·경제환경(3)	인구, 주거, 산업

※ 자료: 함태성(2012: 41)

스크리닝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은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는 관례법 주의 국가가 채택하는 방법으로서 평가대상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행위별로 구체적인 환경영향을 사전에 심사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대상사업을 미리 정해 운영하는 방법은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데,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는 데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의 특성과 대상지역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 양자의 절충형은 일본이나 네덜란드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관계법령으로 의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부여하고 그 외는 스크리닝 과정을 거쳐 평가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은 ①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②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③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④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⑤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⑥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⑦ 철도의 건설에 관한 계획, ⑧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⑨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⑩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⑪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⑫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⑬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⑭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⑮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⑯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⑰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다(제9조 제1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한다(제9조 제2항). 여기에서 정책계획은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발기본계획은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①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②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으로는 ① 도시의 개발사업, ②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③ 에너지 개발사업, ④ 항만의 건설사업, ⑤ 도로의 건설사업, ⑥ 수자원의 개발사업, ⑦ 철도의 건설사업, ⑧ 공항의 건설사업, ⑨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⑩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⑪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⑫ 산지의 개발사업, ⑬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⑭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⑮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⑯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⑰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을 들고 있다(제22조 제1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으로는 첫째,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둘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들고 있다(제43조 제1항).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2항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별표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제23조에서는 다음의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②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977년 12월 제정된 환경보전법에서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등 3개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한 이래 이 법의 1차 개정시 도로 조성 등이 추가되어 10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1981년 12월 환경보전법 2차 개정시 공공단체와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이, 1986년 12월 4차 개정시 민간개발사업이 평가대상사업에 포함되었다. 1990년 8월 환경정책기본법 제정시 국방·군사시설 설치사업의 추가로 16개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1995년 4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이 평가대상사업에 추가됨으로써 17개 분야 62개 단위사업에 걸쳐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었다. 1997년 9월 시행령 개정시 신항만 건설사업, 고속철도 건설사업, 석유비축시설 건설사업 등이 추가되고, 발전용 원자로 및 관개시설,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저수지나 우수지 사업이 삭제되어 17개 분야 63개 단위사업이 대상이 되었다. 2006년 시행령 개정에서 세부사업이 추가되어 17개 분야 76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함태성, 2012: 46).

<표36>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대상사업	세부사업 및 규모
도시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학교설치공사: 30만㎡ · 혁신도시개발사업: 25만㎡ · 공동집배송센터조성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설치공사,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 물류단지개발사업, 마을정비구역조성사업: 20만㎡ · 도시계획시설사업: 운하, 유통업무설비(20만㎡), 주차장시설(20만㎡), 시장(15만㎡) · 공공하수처리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 10만㎡/일
2. 산업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개발사업, 단지조성사업, 자유무역지역지정, 공장설립, 공업용지조성사업,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 연구개발특구조성사업: 15만㎡
3. 에너지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 ·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30만㎡ · 전원개발사업: 발전소(1만kW, 댐 · 저수지 건설 수반 시 3천kW, 풍력 · 연료전지발전소 10만kW), 지상송전선로(345kV, 10km), 옥외변전소(765kV), 회차리장(30만㎡), 저탄장(5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설비설치사업: 발전소(1만kW, 댐·저수지 건설 수반 시 3천kW, 공장용지 안의 자가용 발전설비 3만kW, 태양열·풍력·연료전지발전소 10만kW), 지상송전선로(345kV, 10km), 옥외변전소(765kV), 회처리장(30만㎡), 저탄장(5만㎡) · 송유관 중 저유시설 설치공사,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10만kl
4. 항만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시설 또는 어항개발사업: 외곽시설(300m), 계류시설, 기타 어항시설(15만㎡), 공유수면매립 수반 시 3만㎡ · 항만시설 건설사업: 외곽시설(300m), 계류시설, 기타 항만시설, 공유수면매립 수반 시 3만㎡ · 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준설면적 10만㎡ 또는 준설량 20만㎡(항로·정박지 등 유지, 오염물질 제거 목적의 준설 제외)
5. 도로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신설: 4km(도시지역 폭 25m) · 도로 확장: 10km(2차로 이상) · 신설+확장: $\frac{\text{신설구간 길이의 합}}{4km} + \frac{\text{확장구간 길이의 합}}{10km} \geq 1$ · 도시지역+비도시지역: $\frac{\text{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frac{\text{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geq 1$
6. 수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구언의 설치공사, 저수지·보(洑)·유지(溜地)의 조성: 만수면적 200만㎡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
7. 철도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공장 내 전용철도 제외) 건설사업, 도시철도 건설사업, 고속철도 건설사업, 길이 4km 또는 면적 10만㎡ · 삭도사업: 길이 2km, 궤도 길이 4km 또는 궤도용지 면적(궤도시설의 면적 포함) 10만㎡
8. 공항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개발사업: 비행장 신설, 활주로 건설(500m), 기타 공항개발사업(20만㎡)
9. 하천이용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에서의 하천공사: 10km
10. 매립·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매립사업: 지정항만·신항만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3만㎡, 기타 지역 30만㎡ · 간척 또는 개간사업: 100만㎡
11. 관광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30만㎡ · 공원사업: 조성면적 또는 공원집단시설지구면적 10만㎡ · 유원지, 공원시설 설치사업: 시설면적 10만㎡
12. 산지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 묘지 또는 봉안시설 설치(25만㎡), 초지 조성(30만㎡), 기타(20만㎡) · 임도설치사업: 노선 길이 8km, 1등급 권역에서의 임도설치사업
13. 특정지역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 14-17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 중 지역균형개

	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 지역종합개발사업: 20만㎡ · 주한미군시설사업,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사업,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기업도시 개발사업, 신공항건설사업
14. 체육시설	· 체육시설설치공사, 경륜 또는 경정시설 설치사업, 경마장 설치사업: 25만㎡
15. 폐기물·분뇨처리 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매립시설(조성면적 30만㎡ 또는 매립용적 330만㎡,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조성면적 5만㎡ 또는 매립용적 25만㎡), 소각시설(100t/일) ·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00kl/일(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 제외)
16. 국방·군사시설	· 국방·군사시설사업: 33만㎡(골프장의 경우 26만㎡) ·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비행장 신설, 활주로 신설(500m), 기타 시설(20만㎡) · 해군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15만㎡(공유수면매립 수반시 3만㎡)
17. 토석 등 채취	·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에서의 토석·암석·모래·자갈·광물채취사업: 상수원보호구역(2만㎡),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유수거리 5km 이내의 상류 5만㎡ · 산지에서의 토석·광물채취사업: 10만㎡ · 해안에서의 광물채취: 강원·경북(2만㎡), 기타(3만㎡) · 골재채취: 채취예정지 면적 25만㎡ 또는 채취량 50만㎡ · 해안에서의 골재채취: 채취면적 25만㎡ 또는 채취량 50만㎡ · 채석단지의 지정,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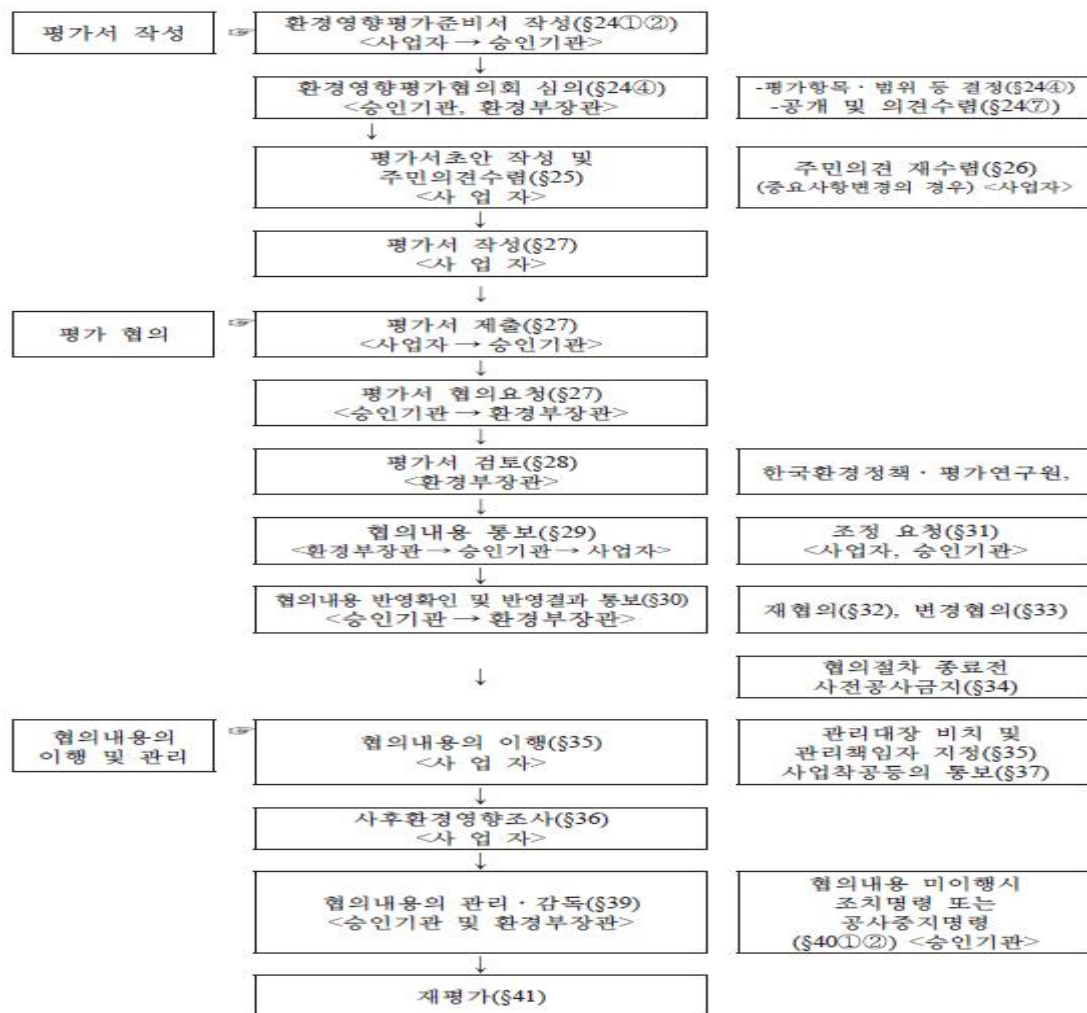
(4)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 ‘평가서의 협의 과정’,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함태성, 2012: 50).

첫 번째 단계에서 사업자는 개발하려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먼저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 등을 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자료수집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사업자가 작성된 평가서를 개발사업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 협의요청을 한다. 환경부장관은 일정 기간 내에 평가서의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반영 여부 등을 환경부에 통보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면서 협의내용을 이행해야 하고, 착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한다.



※ 자료: 함태성(2012: 51).

<그림 17>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협의 및 사후관리 절차의 흐름도

2. 충남 환경영향평가조례와 지속가능성 평가

1)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영향평가

(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기능은 중앙정부의 위임집행업무에 편중되어 있어서 자율성과 자치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업무와 환경보전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 환경영향평가제도 절차를 접목시켜 개발에 따른 의사결정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함태성, 2012: 56).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시·도가 조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함태성, 2012: 54).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는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는 제2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37>와 같이 2009년 현재 현재 8개 시·도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했다.

그런데 제42조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제4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과 시·도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대상과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즉 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대부분이 75,000㎡ 이상 중대형 사업으로 관리지역 등 보전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사실상 중복된다. 환경부에서도 법 개정 내용의 오류를 인식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개별법에 의한 보전지역 5,000㎡ 이상으로 도 환경영향평가조례 대상의 50%에서 100%와 중복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37> 시·도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운영 현황

시·도별	제정일	시행일	평가대상사업	실적 (' 08말 현재)
강원도	2001. 8. 4	2001. 9. 4	3개 분야 9개 사업	1건
제주도	2001. 9.19	2001. 9.19	16개 분야 37개 사업	13건
서울특별시	2002. 3.20	2002. 9. 1	11개 분야 26개 사업	76건
인천광역시	2002. 7.15	2003. 1.15	12개 분야 33개 사업	6건
부산광역시	2003.11.20	2004. 5.21	13개 분야 35개 사업	6건
대전광역시	2004.10. 1	2005. 4. 1	10개 분야 30개 사업	1건
경상남도	2006.10.12	2007. 4.13	13개 분야 35개 사업	4건
광주광역시	2007. 3. 1	2007. 8. 1	12개 분야 39개 사업	2건

※ 자료: 환경부, (2009). 「환경백서」, 349.

(2)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안)

충청남도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과 국제적 지속가능발전 동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환경영향평가 실시 요구 등에 발맞춰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조례제정의 목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 환경기본조례’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마련으로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조례의 법적 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두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 및 도지사 등의 책무 규정, 평가대상 사업의 종류 및 범위 규정,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류 작성 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게 대행, 사업자가 평가서 작성 시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기관장이 도지사에 평가서를 제출하여 협의요청하며, 평가서 작성이 미흡할 경우 도지사가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9조 및 제10조). 특히 평가서 검토를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등의 의견수렴과 사업자 등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0조).

도지사가 평가서 접수 후 40일 이내에 협의내용을 통보하면,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이 사항을 다시 도지사에 통보해야 한다(안 제11조 및 제12조). 사업자는 협의의견 통보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거나 당초 사업의 30% 이상 규모가 증가할 경우 재협의해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도록 하였다(안 제14조 및 제15조).

승인기관장 등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토록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조치명령, 불응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야 하며, 특히 준공검사시 협의내용 이행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 통보하고 미이행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한다(안 제18조). 사업자는 협의, 재협의 또는 그밖에 변경절차 완료 전 공사시행 금지 위반시 승인기관의 장이 공사중지를 명령하도록 했다(안 제19조).

2) 충남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지속가능성 평가

(1) 충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표38>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중복될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어 향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그 대상사업과 범위가 더욱 분명해질 전망이다.

<표38> 충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안)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 사업	<p>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3만 제곱미터 이상 25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p> <p>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p>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p>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 전</p> <p>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 전</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p>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7만 5천 제곱미터 이상 15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 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 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 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p>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p> <p>자.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 이 경우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p> <p>차.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p>	<p>「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p> <p>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협의 전</p> <p>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p>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p>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제곱미터 이상 15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p> <p>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제곱미터 이상</p>	<p>「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15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p> <p>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7만 5천 제곱미터 이상 15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다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라.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7만 5천 제곱미터 이상 15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p>	<p>「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및 입주계약 등의 완료 전</p> <p>「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3. 에너지 개발사업	<p>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중 154kV 이상의 지상 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 5킬로미터 이상 10킬로미터 미만인 것</p> <p>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중 154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 5킬로미터 이상 10킬로미터 미만인 사업</p>	<p>「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인가 또는 신고 전</p>
4. 도로의 건설사업	<p>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p>	<p>가)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에</p>

	<p>의한 도로의 건설사업중 2km이상 4km 미만 의 신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 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도로법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 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p>	<p>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p> <p>나)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p> <p>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p>5.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 업</p>	<p>다음의 구역에서 하는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 길이로 5킬로미터 이상 10킬로미터 미만인 사업 (다만, 하천의 보수·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방보강공사는 제외)</p> <p>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p> <p>2)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수 관리구역</p>	<p>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p> <p>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경우 : 「하천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p> <p>다)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하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전</p>

<p>6.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p>	<p>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다만,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신항만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인 것</p> <p>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간척 또는 개간사업중 사업면적이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것</p>	<p>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전</p> <p>나) 그 밖의 자가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전</p> <p>「농어촌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전</p>
<p>7. 관광단지의 개발사업</p>	<p>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다. 「온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p>	<p>「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p> <p>「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p> <p>「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p>

	<p>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중 조성면적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면적의 합계가 5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p>	<p>가)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하는 경우 : 「자연공원법」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결정 전</p> <p>나)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 전</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p>가)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p> <p>나)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 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8. 산지의 개발 사 업	<p>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p> <p>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 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제곱</p>	<p>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른 설치·조성 전</p>

	<p>미터 이상</p> <p>25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p> <p>2)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의 조성사업 중 조성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p> <p>3) 1) 및 2) 외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사업</p>	<p>나) 그 밖의 자가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전</p> <p>「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전</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林道)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p>나) 그 밖의 사업인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p>
9.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p>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제곱미터 이상 25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p>	<p>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전</p> <p>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p> <p>「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p>

	<p>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제곱미터 이상 25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p> <p>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p>	<p>전</p> <p>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p> <p>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p>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조성 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p>
10.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p>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p> <p>1)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 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매립용적이 165세제곱미터 이상 330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것</p> <p>2)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2만5천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매립용적이 12만5천 세제곱미터 이상 25만 세제곱</p>	<p>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p> <p>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p> <p>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p>

	<p>미터 미만인 것</p> <p>3)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 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p>	
11.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p>「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사업면적이 16만5천 제곱 미터 이상 3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면 적이 12만5천 제곱미터 이상 25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p>	<p>가)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기본설계의 승인 전</p> <p>나)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 여도 되는 경우 : 기본설계의 확정 전</p>
12. 토석· 모래·자갈·광 물 등의 채취 사업	<p>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 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 구역에서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마목 또 는 사목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p> <p>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 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미 만</p> <p>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수</p>	<p>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 허가 전</p> <p>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전</p> <p>다) 광물을 채광하는 경우 :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p> <p>라) 그 밖의 경우 : 「하천법」 제33조제1 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전</p>

	<p>거리 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2만5천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미만</p> <p>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p>	<p>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는 제외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p> <p>나) 위 가) 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 (1) 광물채광의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 (2) 토석채취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전</p>
	<p>다.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및 바다쪽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광물채취면적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인 경우. 다만, 태풍·폭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긴급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유지·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p> <p>라.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12만5천</p>	<p>「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협의·승인 전</p> <p>「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p>

	<p>제곱미터 이상 25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채취량이 25만 세제 곱미터 이상 50만 세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	--	--

(2) 충남 지속가능성 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고 있다. 조례는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과 마찬가지로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분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상위법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중앙정부의 위임집행업무에 편중되어 있어 자율성과 자치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대부분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 및 조직의 정비, 인력과 전문성 측면에서도 미흡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개발업무와 환경보전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는바,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속가능성 평가를 지향하면서도 현 제도 내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발전의 세 축 중에서 어느 축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청남도가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지속가능성 평가로 운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과 마찬가지로 환경영향평가조례에서도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분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각 분야를 더욱 정교하고 풍부하게 고려해나가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 평가의 의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영향평가조례가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과 범위를 모두 지속가능성 평가의 대상사업과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한편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은 환경영향평가법이나 환경영향평가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충청남도의 도정 전반과 제반 정책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여 모든 정책과 사업과정에서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지향점을 삼을 수 있다. 나아가 이렇게 될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부문과 사회부문에 대한 검토까지를 포함하게 되면서 제각기 검토됨으로써 들어가는 중복적인 사회적 비용과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제4장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및 항목 설정

1.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1) 지속가능발전의 다섯 가지 특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ladwin(1995)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포괄성(inclusiveness), 연계성(connectivity), 형평성(equity), 신중성(prudence), 안전성(security) 등 다섯 가지 특성을 도출하였다.

포괄성이란 시간과 공간을 넘는 인간개발을 포함하여 환경과 인간, 근린과 원거리,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지속가능성의 인간 차원에 대한 이해는 인구변화, 경제성장, 기술변화, 정치 및 경제제도, 태도와 신념 등 지구환경 변화에 인간이 끼치고 있는 영향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계성은 상호 침해하거나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상호 의존성에 대한 수용을 말한다. 세계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지 않고서는 경제적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편적 교육과 고용기회, 보편적 건강과 재생산 배려,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분배, 안정적인 인구, 자연자원의 토대를 지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평성은 미래 자원을 크게 훼손하거나 타인의 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는 세대간, 세대내, 종 간 공정성, 세대내, 세대 간 공정한 자원 및 재산권 분배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비인간 세계를 고려하는 인간의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경험적으로 발견될 수 없고 간주관적으로만 발견될 수 있다는 특성도 갖고 있다. 인간의 행동이 적절한 보상이 없이 현재와 미래에 다른 인간의 이익에 비용을 전가하거나 다른 인간의 재산 또는 자원 권리를 전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중성은 불확실성에 대한 입증 여부를 밝히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주의하고 예방하는 일을 말한다. 생명을 지탱하는 생태계의 유지, 상호 관련된 사회경제적 체계를 탄력성 있게 만드는 것, 비가역성을 회피하는 것, 재생능력과 수용능력 내에서 인간 행동의 규모와 영향을 유지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엄청난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 체계 구성요소, 알려지지 않은 한계, 생태계 및 사회체계의 복잡한 역학 간의 비선형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신중함과 겸손함을 고려하는 것이다.

안전성은 만성적인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대한 환경파괴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안전하고 건강하며 높은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인간 중심적인 구성체를 말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 충족과 함께 생태계와 사회체계의 건강, 임계 자연자본, 자기조직화, 수용능력, 인간의 자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그간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에 대한 시도와 실험은 있어왔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Gladwin이 메타평가를 통해 도출한 위와 같은 다섯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2) 지속가능발전의 특성과 기준 연계

우선 지속가능발전의 다섯 가지 특성은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존의 세 축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표39>와 같이 경제발전, 사회통합, 환경보존이라는 세 축은 각각 다섯 가지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A1, A2, ……., B1, B2, ……., C1, C2, ……., C5에 이르는 평가기준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복잡할 수 있다는 점과 세 축마다 각 특성을 엄격히 한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표39> 지속가능발전 특성별 매트릭스 평가

	포괄성	통합성	형평성	신중성	안정성
경제발전	A1	A2	A3	A4	A5
사회통합	B1	B2	B3	B4	B5
환경보존	C1	C2	C3	C4	C5

다음으로 <표40>와 같이 지속가능발전 각 특성별로 몇 가지 하위요소를 배치하여 하위요소에 대한 판단을 통해 각 특성의 반영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에 개발된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지만, 충청남도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여 여기에 맞춰 각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용성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부평구 등에서 적용된 바 있는 지속가능발전 세부가치별로 평가기준을 도출한 방식을 응용하여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을 도출해볼 수 있다(표41 참조).

<표40> 지속가능발전 특성별 하위요소 체크리스트

지속가능성의 구성요소	내용	하위요소	배점
포괄성 (inclusiveness)	환경과 인간, 지역과 국가 또는 세계, 현재와 미래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가?	도정 방향(목표)와의 일치 여부	
		장기적인 전망 검토 여부	
		자연자원의 가치 고려 여부	
연계성 (connectivity)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의존적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한 가지 가치의 강조 여부	
		타 정책 목표와의 모순 여부	
		사회갈등 유발 여부	
형평성 (equity)	인간과 자연의 본질적이고 독립적인 가치를 인정하는가?	자연자원의 훼손 여부	
		사회적 약자 보호 기여 여부	
		시민의 재산권 침해 여부	
신중성 (prudence)	기술적, 과학적, 정치적 예방의 원칙에 유의하는가?	불확실성 대응 및 입증 여부	
		재생 및 복원력 고려 여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여부	
안전성 (security)	안전에 대한 위협과 위해한 환경파괴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가?	자연의 수용능력 고려 여부	
		사회·문화적 수용능력 고려 여부	
		삶의 질에 대한 기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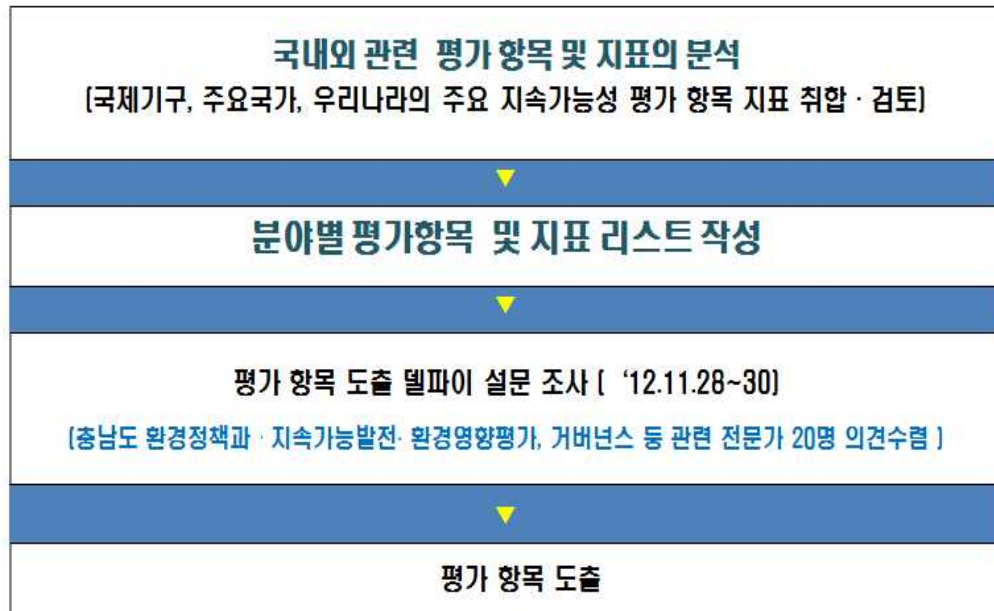
<표41> 지속가능발전 세부가치별 평가항목

지속가능발전 영역	지속가능발전 세부가치	정 의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추진 사업(직무)은 충남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한다.
	자연자원가치 존중	추진 사업(직무)은 충남도의 자연자원의 가치를 고려하여 추진한다.
	경제적 효과성	추진 사업(직무)은 충남도의 소득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온다.
사회통합	양극화 해소	추진 사업(직무)은 충남도의 빈부 격차 등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한다.
	사회갈등 해소	추진 사업(직무)은 충남도의 개발과 보존에 따른 주민 및 집단 갈등 해소에 기여한다.
	사회·복지안전망 구축	추진 사업(직무)은 충남도의 사회적 약자(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의 보호에 기여한다.
환경보존	환경용량 준수	추진 사업(직무)은 충남도의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추진한다.
	자원기반 보존	추진 사업(직무)은 에너지 등의 자원소비를 최소화하여 추진한다.
	생물다양성 보존	추진 사업(직무)은 충남도의 자연생태 환경을 보존하면서 추진한다.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		추진 사업(직무)은 충남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하여 추진한다.

2.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

1)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 도출

위에서 검토한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그림18>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우선 국제기구, 주요국가, 우리나라의 주요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과 지표들을 취합하여 검토함으로써 국내외 관련 평가 항목과 지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분야별 평가항목과 지표 리스트를 작성한 뒤 평가 항목을 도출하기 위한 델파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델파이 설문 조사는 2012년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충청남도 환경정책과,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환경영향평가, 거버넌스 분야의 관련 전문가 20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림18>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 도출 과정

국내외 관련 평가 항목과 지표를 분석하고 <표42>와 같이 이를 지속가능발전의 다섯 가지 특성별로 분류한 뒤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각 항목이 잘못 배치된 것은 없는지, 문장을 수정할 것은 없는지, 추가할 항목은 없는지 의견을 받고 수정, 추가, 보완하였다.

<표42>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 도출을 위한 설문 조사 내용

특성	설명	평가 항목
포괄성	환경과 인간, 지역과 국가 또는 세계, 현재와 미래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업은 지역 자연자원의 가치를 존중하는가? - 이 사업은 지역 생물다양성을 촉진하고 보존하는가? - 이 사업으로 인해 과도하게 지역의 에너지가 소비되고 온실가스가 배출되는가? - 이 사업은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저감을 촉진하는가? - 이 사업은 지역 내 유해물질을 발생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가? - 이 사업은 물을 과도하게 소비하고 하수를 배출하는가? - 이 사업은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대기질을 개선하는가? - 이 사업은 하천, 지하수, 해양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자원을 보호하는가?
연계성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의존적임을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가? - 이 사업은 사회갈등 해소에 기여하는가? - 이 사업은 지역의 교통통신 인프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가? - 이 사업은 지역의 토지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이 사업은 숙련된 인력을 개발하고 유지하여 지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향

	하고 있는가?	상사키는가?
형평성	인간과 자연의 본질적이고 독립적인 가치를 인정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업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가? -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 이 사업은 활동적이며 참여적인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가? - 이 사업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수혜나 사회적 참여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는가? - 이 사업은 보건과 건강의 불평등을 저감시키는가? - 이 사업은 지역에 균등하게 교육 달성 수준을 향상시키는가? - 이 사업은 빈곤 지역의 경제적 회복을 촉진하는가?
신중성	기술적, 과학적, 정치적 예방의 원칙에 유의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업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가? - 이 사업은 주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가? - 이 사업은 지역 환경용량을 준수하면서 진행되는가? - 이 사업은 지역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가? - 이 사업은 지역에 환경적 영향을 덜 주는 제품을 이용하는가? - 이 사업은 에너지의 효율성과 안보를 확보하는가?
안전성	안전에 대한 위협과 위해한 환경파괴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복지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가? - 이 사업은 지역의 자원기반을 보존하면서 진행되는가? - 이 사업은 지역의 인구추이와 구성 측면에서 지역의 부양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가? - 이 사업은 공공환경의 안전성과 어메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총32개 평가 항목이 도출되었는데, 자문회의를 통해 2개의 유사항목이 통합되어 최종적으로 <표43>과 같은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이 도출되었다. 여기에는 포괄성 6개 항목, 연계성 6개 항목, 형평성 7개 항목, 신중성 5개 항목, 안전성 6개 항목 등 총30개 항목이 포함된다.

<표43>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

지속가능성 구성요소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
포괄성	1. 지역 자연자원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역의 자원기반을 보존하는가?
	2. 지역 생물다양성을 촉진하고 보존하는가?
	3.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저감을 촉진하는가?
	4. 물을 적게 소비하고 하수를 적게 배출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가?
	5.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대기질을 개선하는가?
	6. 하천, 지하수, 해양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자원을 보호하는가?
연계성	7.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가?

	8. 기존 농어촌 일자리를 감소시키지 않고 진행되는가?
	9. 사회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진행되는가?
	10. 지역의 교통통신 인프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진행되는가?
	11. 지역의 토지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진행되는가?
	12. 숙련된 인력을 개발하고 유지하여 지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가?
형평성	13. 소득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가?
	14.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15. 활동적이며 참여적인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가?
	16. 공공서비스 수혜나 사회적 참여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발생시키지 않고 진행되는가?
	17. 보건과 건강의 불평등을 저감시키는가?
	18. 지역의 교육 수준을 균등하게 향상시키는가?
	19. 지역의 빈곤해소에 기여하는가?
신중성	20.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가?
	21. 지역 환경용량을 준수하면서 진행되는가?
	22. 지역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가?
	23. 지역에서 친환경제품 사용을 촉진하는가?
	24. 에너지의 효율성과 안보를 확보하는가?
안전성	25.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강화에 기여하는가?
	26. 지역의 인구추이와 구성 측면에서 지역의 부양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27. 지역 내 유해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진행되는가?
	28. 지역공동체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가?
	29. 인간과 생태계의 안전을 위해 인위적, 자연적 재해에 충분히 대응하는가?
	30. 공공환경의 안전성과 어메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2) 참고지표와의 연계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의 다섯 가지 특성에 따른 평가 기준은 충청남도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목표에 연계될 필요가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지속가능성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이 상정될 때, 과연 이 사업이 지속가능발전의 각 특성과 목표별로 충청남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 저해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충청남도 내부적으로는 각 정책과 사업을 구상할 때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목표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개별 사업이 어느 정도나 이러한 목표

달성에 기여하거나 저해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성 평가 시 위에서 도출한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을 판단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점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을 도출한 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들 항목을 평가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참고지표를 각 항목별로 <표44>와 같이 도출하였다. 이는 충청남도가 향후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여 확정하는 과정에서 더욱 명확한 평가 기준으로 발전될 수 있다.

<표44>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 참고지표 연계(예시)

지속가능발전의 특성	환경영향평가 (지속가능성평가) 기준	지속가능발전 지표 (참고지표)
포괄성 (inclusiveness)	1. 지역 자연자원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역의 자원기반을 보존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하는 지역 자원의 수 - 산림지역 비율 - 어업양식량 자연보호지역 비율 - 친환경농업 면적 비율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 비율 - 화학비료 사용량 - 농약 사용량 - 녹지 훼손 면적(녹지자연도 6,7,8등급별 훼손 면적, 신규) - 도시생태면적 비율
	2. 지역 생물다양성을 촉진하고 보존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종의 개체수 - 야생조류개체수 - 멸종위기종 수 - 법정 자연환경보호지역 지정면적 비율 - 생물종다양성 - 수서생물종
	3.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저감을 촉진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처리방식의 적절성 -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 지정폐기물 발생량 - 음식폐기물 발생량 - 1인당 생활폐기물발생량 -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 -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4. 물을 적게 소비하고 하수를 적게 배출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물소비량 - 하천오염도(BOD) - 하수배출량(미처리수 또는 처리하수 배출량(신규)) - 1인당 하수배출량 - 물사용량(신규) - 방류수계의 수질이상의 방류수
	5.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대기질을 개선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질(Nox, PM10, O3) - CO2 흡수효과(신규)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신규) - 대기순환효과(신규)
	6. 하천, 지하수, 해양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자원을 보호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오염도(BOD) - 물순환지수 - 연안오염도 - 갯벌면적 증감
연계성 (connectivity)	7.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증가되는 소외계층의 일자리 수 - 일자리 수 - 노인 일자리 수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신규창출 일자리 수(신규) - 기존 일자리 상실 수(신규)
	8. 기존 농어촌 일자리를 감소시키지 않고 진행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어든 농어촌 일자리 수(신규) - 감소된 갯벌 면적(신규) - 감소된 농지 면적(신규) - 송전탑 수(신규)
	9. 사회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진행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거버넌스 기구 - 사회통합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 - 녹색교통
	10. 지역의 교통통신 인프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진행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 인구 증가율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보행자를 위한 보도율 - 도로 서비스 수준(신규)
	11. 지역의 토지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진행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피복도 - 1인당 녹지면적 - 1인당 공원녹지 - 농지면적 비율 -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산림훼손면적(신규) - 발생사면면적(신규)
형평성 (equity)	12. 숙련된 인력을 개발하고 유지하여 지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수 - 역량강화지수 (참여, 교육훈련, 참여자 평가 등 지수개발활용)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국가직업자격증 소지 비율(영국 South East England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2001에서) - 임시직 고용비율(신규)
	13. 소득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지수 개발 활용 - 취약계층 적응 - 사회적 취약 인구 - 빈곤인구 비율 -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 저소득가정 아동비율
	14.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육성 - 일자리 수 - 1인당 지역내 총생산
	15. 활동적이며 참여적인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 참가율 - 지역주민 대화창구 존재 및 활성화 정도(신규) -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비율
	16. 공공서비스 수혜나 사회적 참여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발생시키지 않고 진행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취약 인구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 다문화지원 가구 수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비율 - 아이돌봄 지원 아동 비율 - 공공서비스시설 이용 인구(신규) - 문화, 스포츠, 예술활동 관람률(영국, 2001) - 문화, 스포츠, 예술활동 참여율(영국, 2001)
	17. 보건과 건강의 불평등을 저감시키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서비스 - 다문화지원 가구 수 - 성인병 발생률 - 유소년 영양상태 - 영아사망률 -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 환경성 질환(아토피, 천식)
	18. 지역의 교육 수준을 균등하게 향상시키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학습 참여율 - 주민역량강화 교육 - 중등학교 졸업률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19. 지역의 빈곤해소에 기여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 비율 - 다문화지원 가구 수 -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 근로가능연령의 근로비율(영국, 2001)
	20.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제도 - 거버넌스 관련 조례 제정 수 - 위원회 개최 건수
신중성 (prudence)	20.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위원회 주민참여율 - 예산대비 시민사회단체 지원 비율
	21. 지역 환경용량을 준수하면서 진행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오염 기준치 초과 비율 - 토양오염 기준치 초과 비율 - 1인당 녹지면적 - 대기오염 기준치 이상인 날 수(신규) - 1급수 이상 수질의 강의 길이(신규) - 1인당 수자원 소비량(신규)
	22. 지역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 문화재 훼손 건수(비율) - 지역문화보전발굴육성 수
	23. 지역에서 친환경제품 사용을 촉진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제품 이용률 -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24. 에너지의 효율성과 안보를 확보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자립도 - 에너지 효율성 - 신재생에너지 비율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 1인당 에너지 소비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에너지 절약 사업 실적 - 온실가스 배출량 - 에너지 효율성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
안전성 (security)	25.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기여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서비스 - 저소득층 비율 - 1인당 조세부담률 - 1,000인당 의사 수 -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26. 지역의 인구추이와 구성 측면에서 지역의 부양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증가율 - GRDP - 인구밀도 - 고령인구 비율 - 생산가능인구 비율(신규) - 산업체 고용인구(신규)
	27. 지역 내 유해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진행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오염 기준치 초과비율 - 중금속 발생량 -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 - 불산 등 유해물질 관리 시스템(신규) - REACH 인증(신규)
	28. 지역공동체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 고용안정지수 -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업 수 - 최소 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 주택 수 - 소음도 - 적절치 못한 주택의 비율 또는 쾌적한 주택 비율(영국, 2001)
	29. 인간과 생태계의 안전을 위해 인위적, 자연적 재해에 충분히 대응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 피해
	30. 공공환경의 안전성과 이미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활동 참여 비율 - 범죄발생률 -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 1,000인당 범죄발생 건수

제5장 지속가능성 평가 절차 및 평가 체계 구축 방안

1. 지속가능성 평가 절차와 방법

1) 지속가능성 평가 절차



<그림 19>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지속가능성 평가 절차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준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평가임을 고려해 지방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는데, <그림19>와 같은 서울특별시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참고할 만하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주관구청장과 관할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평가서작성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중점평가항목 등을 검토하고,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서를 작성하며, 평가서의 검토와 협의내용의 이행에 이르는 과정을 밟고 있다.

충청남도 지속가능성 평가는 <그림20>과 같이 사업자(내부 사업의 경우 주관부서)가 도지사에게 평가서작성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협의 또는 검토부서나 위원회가 중점평가항목 등을 검토(scoping)하여 검토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평가서 초안 작성이 시작된다. 중점평가항목 검토는 참고지표 pool에서 관련 참고지표를 도출하는 작업이 될 것이며, 내부 사업의 경우 관련 지표별 목표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림20> 충청남도 지속가능성 평가 절차도

사업자가 작성한 평가서 초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협의요청에 들어가고, 협의 또는 검토부서나 위원회가 평가서를 검토한 뒤 검토내용을 통보하면, 미흡한 평가항목에 대해 재작성 후 재협의에 들어가고,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평가항목의 경우 보완 후 재검토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재협의를 끝난 사업의 경우 협의 또는 검토 내용을 이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 승인기관과 도지사의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평가부서나 위원회 또는 주민단체를 중심으로 주요 항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들어가게 된다.

2) 지속가능성 평가 방법

작성된 평가서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성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표45>와 같이 각 평가항목별로 ‘미흡’, ‘보완필요’, ‘적정’, ‘해당 없음’ 등으로 판단한다. 평가서작성계획서 검토 단계에서 참고지표와 함께 검토하여 각 평가항목의 판단근거가 될 수 있는 참고지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성 평가 시에는 이러한 참고지표를 판단근거로 의견을 제시하며 각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을 평가한다.

<표45> 지속가능성 평가 체크리스트

지속가능성 구성요소	환경영향평가(지속가능성 평가) 항목	미 흡	보 완 필 요	적 정	해 당 없 음
포괄성	1. 지역 자연자원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역의 자원기반을 보존하는가?				
	2. 지역 생물다양성을 촉진하고 보존하는가?				
	3.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저감을 촉진하는가?				
	4. 물을 적게 소비하고 하수를 적게 배출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가?				
	5.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대기질을 개선하는가?				
	6. 하천, 지하수, 해양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자원을 보호하는가?				
연계성	7.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가?				
	8. 기존 농어촌 일자리를 감소시키지 않고 진행되는가?				
	9. 사회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진행되는가?				
	10. 지역의 교통통신 인프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진행되는가?				
	11. 지역의 토지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진행되는가?				
	12. 숙련된 인력을 개발하고 유지하여 지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가?				
형평성	13. 소득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가?				
	14.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15. 활동적이며 참여적인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가?				
	16. 공공서비스 수혜나 사회적 참여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발생시키지 않고 진행되는가?				
	17. 보건과 건강의 불평등을 저감시키는가?				
	18. 지역의 교육 수준을 균등하게 향상시키는가?				
	19. 지역의 빈곤해소에 기여하는가?				

신중성	20.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가?				
	21. 지역 환경용량을 준수하면서 진행되는가?				
	22. 지역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가?				
	23. 지역에서 친환경제품 사용을 촉진하는가?				
	24. 에너지의 효율성과 안보를 확보하는가?				
안전성	25. 지역사회 복지증진 강화에 기여하는가?				
	26. 지역의 인구추이와 구성 측면에서 지역의 부양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27. 지역 내 유해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진행되는가?				
	28. 지역공동체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가?				
	29. 인간과 생태계의 안전을 위해 인위적, 자연적 재해에 충분히 대응하는가?				
	30. 공공환경의 안전성과 어메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평가위원들의 평가에서 ‘미흡’ 판정이나 ‘보완필요’ 판정이 나온 항목에 대해서는 <표46>에서 제시하는 예시처럼, 평가위원들이 scoping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경중을 따져 조치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다. 내부 사업의 경우에도 도 차원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 관리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판정 결과에 따른 비율 설정과 조치 내용의 확정을 위해서는 도지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전문적 통찰력을 활용하거나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AHP 방법의 적용을 거칠 수 있다.

<표46> 지속가능성 평가 판정 결과에 따른 조치(예시)

판정 구분	비율 (30항목*평가위원 수 대비)	조치
미흡	5% 미만	보완 후 재협의 불승인
	5% 이상	
보완필요	10% 미만	모니터링 중점 점검 보완 후 재협의
	10% 이상	

2.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 구축

1) 평가 절차의 개선

내부 사업의 경우 각 개별 부서의 사업에 대해 참고지표의 scoping에 따른 평가위원의 검토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을 체크리스트로 삼아 점수를 부여하고, 미흡한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 여부를 재협의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그리고 이와 연계한 성과관리 시스템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재협의를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 주민 또는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도 필요하다.

외부 사업의 경우 참고지표의 scoping에 따른 평가위원의 검토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을 체크리스트로 삼아 점수를 부여하고, 미흡한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성 평가에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로 관련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주민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사업에 따라 시군별 인구수 차등 구성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평가 및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모니터링은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분야와 영역별로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성과관리 시스템 확립과 더불어 전문가, 주민, 시민단체,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연계하여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단체, 주민, 담당 부서가 공동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참고지표의 개발, scoping, 전문적인 지속가능성 평가 수행과 모니터링 등을 위해 도내 전문 연구기관들을 적극 활용하거나 육성할 필요가 있다.

2) 평가 기반 구축

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할 일은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를 만드는 것이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이 예견되고 있지만, 이미 다른 광역 시·도의 경우 상당수가 자체적인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보면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환경영향평가법이 명시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내용을 최소 기준으로 하여 지속가능발전의 내용을 갖춰가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처럼,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과 발맞춰 경제, 사회, 환경부문을 모두 망라하는 행정,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로서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행정체제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충청남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충청남도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등의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충청남도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참여에 의해 지속가능성 평가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참고지표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제고, 나아가 지속가능성 평가의 체계화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한국개발연구원이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특별시의 서울연구원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검토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줄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이미 충청남도에는 충남발전연구원이나 충남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역량 있는 연구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 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부서와 인력, 그리고 매뉴얼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문에 국한된 활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충청남도는 이미 공무원교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과정을 설치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과 정책과정에서 성과관리로까지 연결되는 지속가능발전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사회의 참여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3. 시범 평가

이상과 같은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과 항목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 검토된 A 건설사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을 적용해보았다. 당시 이 사업의 평가에 관여했던 총3인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당시 이 사업의 성격상 ‘미흡’하다는 항목이 많아 각 항목별로 재작성 후 심의를 받아야 할 정도였다. 이에 <표47>, <표47>와 같이 각 항목별 평가 예시와 판정의견을 정리한다.

<표47> 항목별 평가(예시)

지속가능성 구성요소	환경영향평가(지속가능성평가) 기준	미 흡	보 완 필 요	적 정	해 당 없 음
포괄성	1. 지역 자연자원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역의 자원기반을 보존하는가?	○			
	2. 지역 생물다양성을 촉진하고 보존하는가?	○			
	3.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저감을 촉진하는가?				○
	4. 물을 적게 소비하고 하수를 적게 배출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가?				○
	5.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대기질을 개선하는가?	○			
	6. 하천, 지하수, 해양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자원을 보호하는가?	○			
연계성	7.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가?	○			
	8. 기존 농어촌 일자리를 감소시키지 않고 진행되는가?	○			
	9. 사회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진행되는가?	○			
	10. 지역의 교통통신 인프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진행되는가?	○			
	11. 지역의 토지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진행되는가?	○			
	12. 숙련된 인력을 개발하고 유지하여 지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가?	○			
형평성	13. 소득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가?	○			
	14.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			
	15. 활동적이며 참여적인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가?	○			
	16. 공공서비스 수혜나 사회적 참여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발생시키지 않고 진행되는가?	○			
	17. 보건과 건강의 불평등을 저감시키는가?				○
	18. 지역의 교육 수준을 균등하게 향상시키는가?				○
	19. 지역의 빈곤해소에 기여하는가?	○			
신중성	20.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가?	○			
	21. 지역 환경용량을 준수하면서 진행되는가?	○			

	22.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가?	○			
	23. 지역에서 친환경제품 사용을 촉진하는가?				○
	24. 에너지의 효율성과 안보를 확보하는가?	○			
안전성	25.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강화에 기여하는가?	○			
	26. 지역의 인구추이와 구성 측면에서 지역의 부양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			
	27. 지역 내 유해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진행되는가?	○			
	28. 지역공동체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가?	○			
	29. 인간과 생태계의 안전을 위해 인위적, 자연적 재해에 충분히 대응하는가?	○			
	30. 공공환경의 안전성과 어메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			

<표48>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 시범 적용 판정의견

환경영향평가(지속가능성평가) 항목	판정의견
1. 지역 자연자원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역의 자원기반을 보존하는가?	○중서부 지역 최대 갯벌 지대의 파괴와 지역 사회 맨손 어업 등의 경제 기반 파괴를 가져올 것이기에 부정적임 ○서해안의 희소한 자연 연안과 어류 산란지 훼손
2. 지역 생물다양성을 촉진하고 보존하는가?	○공사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바다 물길의 단절과 수위 변동 등으로 인한 생물종 다양성의 급격한 감소가 예견되기에 부정적임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 우려 ○지역의 희귀 생물종의 서식지 파괴 우려
3.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저감을 촉진하는가?	○서해 연근해 지역의 핵심자원은 바다와 갯벌을 기반으로 한 연근해 수산자원이다. 이는 또한 주변 해안 풍경과 같은 독특한 관광자원으로도 연계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 지역 자원의 가치를 고려한 개발 계획이라 보기 어려움
4. 물을 적게 소비하고 하수를 적게 배출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가?	○천혜의 연안 바다 위에 건설될 인공적인 시설 조성은 불가피한 환경오염과 수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5.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대기질을 개선하는가?	○천혜의 연안 바다 위에 건설될 인공적인 시설 조성은 불가피한 환경오염과 대기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공사과정에서 상당한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됨
6. 하천, 지하수, 해양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자원을 보호하는가?	○해수 단정과 수위 변동으로 인한 해수 정체로 인한 수질 악화가 우려됨 ○해양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수자원을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 됨
7. 지역의 일자리를 감소시키지 않고 진행되는가?	○갯벌 파괴로 인한 맨손 어업과 생계 기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 매우 부정적임 ○어민들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임
8. 기존 농어촌 일자리를 감소시키지 않고 진행되는가?	○개발로 인한 관광사업 신규 일자리 창출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주민 일자리 창출로는 연결되지 못할 것임으로 부정적임

환경영향평가(지속가능성평가) 항목	판정의견
9. 사회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진행되는가?	○어민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킴 이미 서산, 태안지역간 개발 이익을 놓고 갈등이 있으며, 수대로 내려온 지역 어업 활동의 상실로 사회적 분쟁과 갈등이 예견되어 부정적임 ○사회갈등이 이미 가시화 되어 있는 상황임
10. 지역의 교통통신 인프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진행되는가?	○해상도로 신설로 교통 개선 효과를 기대되고 있음 ○공사기간 중 교통량 증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11. 지역의 토지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진행되는가?	○어업 중심의 주변지역 토지 이용이 일부 관교아 산업 등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부정적임 ○연안의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 우려
12. 숙련된 인력을 개발하고 유지하여 지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가?	○주민 참여의 지역 개발 전략과는 무관한 사업임 ○지역의 인력이 질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동종의 일자리가 지역에서 계속 증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임
13. 소득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가?	○기층 주민의 어업 터전 상실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지역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해 양극화가 심화될 것임
14.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전통적 경제 기반 붕괴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임 ○대규모 외부투자에 의한 지역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비율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어려움 ○지역주민들의 전통적인 생업이 위축되어 지역경제에는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이 우려됨
15. 활동적이며 참여적인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가?	○대규모 개발 사업자의 일방적인 사업으로 지역공동체가 배제되고 있으며 지역간 갈등으로 공동체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지역 주민들의 생계 수단이 위축되어 오히려 공동체가 위축되고, 개발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어 공동체의 응집력이 약화될 것임
16. 공공서비스 수혜나 사회적 참여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발생시키지 않고 진행되는가?	○자연자원의 인간에 대한 서비스가 일부 외부 투자자들에게 독점되어 자연 자원의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할 것임
17. 보건과 건강의 불평등을 저감시키는가?	○연안 생태와 자연환경의 훼손으로 장기적으로는 주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으로 부정적임
18. 지역의 교육 수준을 균등하게 향상시키는가?	○해당 사항 없음
19. 지역의 빈곤해소에 기여하는가?	○지역 경제 기반의 붕괴로 인한 일부 계층 절대 빈곤화가 우려됨 ○지역의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빈곤층을 확산할 우려가 있음
20.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가?	○사업의 기획,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매우 빈약함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21. 지역 환경용량을 준수하면서 진행되는가?	○본 사업은 천혜의 자연 자원의 파괴를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 지역 환경용량의 훼손이 불가피한 사업임 ○지역의 환경용량을 준수하지 못함
22. 지역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가?	○역사적으로 어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생활문화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환경영향평가(지속가능성평가) 항목	판정의견
23. 지역에서 친환경제품 사용을 촉진하는가?	○해당사항 없음
24. 에너지의 효율성과 안보를 확보하는가?	○일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기여함 ○공급중심 에너지 정책을 고착화시켜, 전체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에너지의 대기업 의존도를 높여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됨
25.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강화에 기여하는가?	○진정한 복지는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기반을 강화하는 일로, 본 사업은 연안해양산업에 기반한 주민 경제 기반의 파탄을 전제로 추진된 사업으로 매우 부정적임 ○저소득 어민의 일자리를 줄여, 복지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임
26. 지역의 인구추이와 구성 측면에서 지역의 부양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지역의 기존 산업과 연계성이 낮으면서, 오히려 전통적인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됨
27. 지역 내 유해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진행되는가?	○청정 서해 해상에 건설될 대형 토목사업으로 주변 해양 수질과 공사 와 운영과정에서의 오염물질 유입이 우려됨 ○오염물질의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해양 생태계에는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됨
28. 지역공동체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가?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는 서비스는 없음
29. 인간과 생태계의 안전을 위해 인위적, 자연적 재해에 충분히 대응하는가?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하고, 해수면 상승 등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자연 재난을 가중시키며, 위험한 시설물로 판단됨 ○자연 상태의 연안에 비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에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됨
30. 공공환경의 안전성과 어메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자연과 조화롭지 못한 부자연스러운 시설 조성 사업으로 지역 어메니티를 훼손할 것으로 우려됨 ○공공환경의 안전성과 어메니티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됨

제6장 결론 및 제언

1.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충청남도는 현재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해 산업 입지여건이 불리해져 남하하는 산업 시설 입지로 급격한 개발과 도시화를 겪고 있기도 하고, 균형발전 정책의 결과로 새로 개발된 세종시나 도청 이전으로 인한 내포 신도시 개발 등 다른 어떤 곳 보다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경기도가 수도권으로 발전함으로써 경기도가 가진 수도권 식량 생산 기반으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감소하면서 식량 생산지로서의 의미도 커지고 있다. 이렇듯 충청남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맞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의 관점에서 충청남도의 역할과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시점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관점에서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가는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가 기존의 압축적 경제성장으로 인한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충남에 변화를 촉진하는 균형발전은 그러한 후유증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발전 방식을 성찰하고, 미래에 적합한 역할을 설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충청남도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현 시점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과거 개발시대에 개발 사업들의 영향을 예측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 구조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개발사업의 환경적 영향을 예방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격변하는 충청남도의 상황에서 개발 사업의 영향을 보다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지역 사회의 생태적 기반을 보존하고, 주민들의 자원 활용의 우선권을 보장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 평가가 그 필요에 부응하는 방안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기본 입장의 타당성은 EU를 비롯한 영국 등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지속가능성 평가로 진화해간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환경영향평가를 지속가능성 평가로 발전시키는 것은 환경에 국한되어 있는 평가 항목을 경제, 사회, 환경으로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적 협의의 위치에서 벗어나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의미가 있다. 더불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행정의 목표로 수용하게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지속가능성 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히 평가 항목을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가치와 수단의 변화를 포함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을 의미하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의 관리지표로서도 의미를 갖는다.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를 완전히 갖추는 것은 전체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하는 일로 당장은 어렵다. 현재 충청도의 제도적 여건에서 다른 조치 없이 지속가능성 평가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단계에 지속가능성 평가를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지속가능성 평가의 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의 실제 행정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아직 행정에 정착되지 못해 담당공무원이나 자문위원의 자문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중앙 정부나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 같이 이러한 전문성 부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평가표를 개발했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실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내용을 검토했다.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은 현재 상태의 개선을 위해 평가표를 작성하는 것에 긍정적이었다. 이 자문의견을 토대로 평가 항목 pool을 만들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항목을 수정해 최종 지속가능성 평가표를 도출했다.

도출된 지속가능성 평가표의 현실 적용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의 기존 사업에 자문을 했던 전문가에게 평가표에 의한 검토를 요청해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개발 사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이 없는 항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유용성이 확인 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지속가능성 평가표를 이용할 경우 평가 결과의 질적 수준에 일관성이 유지되고, 평가 항목의 포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동시에, 평가 결과에 따른 명확한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행정처리 절차가 표준화되고 명확해짐에 따라 그동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사후관리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결과는 향후 충청남도의 환경영향평가조례가 제정되어 충청남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관의 역할을 해야 할 경우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와 도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두 경우에 모두 이 지속가능성 평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충남의 여러 기초자치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유용성이 높다. 지속가능성 평가표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이 충남 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지속가능성 평가표의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분석되고 논의되어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충청남도에서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중앙정부의 환경평가제도 운영 여건에 비추어 훨씬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더 커지는 지방자치단체 관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이 크다. 환경영향평가

서에 대한 검토 단계에 지속가능성 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갈등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이러한 연구 의도는 지금까지 환경평가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하고자 했던 선행연구들이 환경평가제도의 틀 안에서 논의를 폈던 데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좀 더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성년을 지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정책 관점을 벗어나 자치단체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연구결과로 제시된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표가 국내에서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과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몇몇 시도가 있었으나, 아쉽게도 실제 행정에 도입되지 못했다.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충청남도는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해야 할 긴급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해야 할 현실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충청남도가 이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지속가능성 평가를 행정에 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이 표의 적용과 확대 과정에서 많은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의 한계

이 연구가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체계 전체를 다루지 못했다는 점은 가장 큰 한계이다. 이 연구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한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연구 범위로 삼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 평가의 세 계층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가장 낮은 단계의 사업에 대한 평가에 국한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상위의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속가능성 평가표에 평가 기준이 되는 지표를 참고지표(안)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의 내용을 결정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향후 충남도의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개발되면,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별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로 제시된 지속가능성 평가표가 실제로 행정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시범 실시를 통한 적용 과정이 필요하다. 충남에서 기 검토한 사업 중 하나의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에 참여했던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평가 틀을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을 거쳤지만, 너무나 명확한 문제를 지닌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화가 어려울 수 있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검토를 담당할 전문위원들이 지속가능성 평가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으로서 지속가능성 평가표의 활용 방법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이었던, 검토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다룰 수 없었던 점도 한계로 남아 있다.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자료의 양과 평가해야하는 항목으로 보아 적절한 보수가 지불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검토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지속가능성 평가가 도입되더라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3. 향후 연구 과제

우선 지속가능성 평가에 기준에 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개발과 평가를 통해 충남도가 지속가능발전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보완하는 방향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본 연구에서 개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판단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도 하다.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평가한 지속가능보고서는 충남도 행정의 결과로 인한 최종 상태와 지표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줌으로써 도의 정책이 수정·보완 되어야할 방향을 알려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표의 부재는 본 연구의 지속가능성 평가가 참고해야 할 충남도의 지속가능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되고 있다.

둘째는 개별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이나 조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기능이 보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외한 도청의 내부 사업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에 해당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 단계의 지속가능성 검토는 전략환경평가가 사전 단계에 환경성을 검토함으로써 예방의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대안 모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던 의도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정책의 기획단계에서 다양한 분야들 간의 소통과 조정이 이루어져, 행정의 궁극적 목표인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 질 것이고, 개별 사업들에 지속가능성이 더욱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다.

셋째는 지속가능발전의 추진 체계를 설치하고 기능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7년 제정되었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를 설치하고,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하며, 중장기 행정계획 및 제·개정 조례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전체 추진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의 역할이다. 이러한 추진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도 중요하고 시급한 향후 연구과제이다.

넷째는 현재 도 환경정책과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환경부의 경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서울시의 경우 서울연구원(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녹색시민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경우 충남발전연구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이러한 지원기능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표를 활용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중요성이 크거나, 평가표를 활용한 평가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능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도의 현실에 비추어 어느 기관에 어떻게 그 기능을 설치하고, 어떤 절차로 평가를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는 도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여건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가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과정에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지속가능성 평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담당하는 경우 대부분 기초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때 지방자치 단체들의 검토 의견이 일정한 수준과 기준에서 작성되도록 하면, 협의 과정이 보다 내실화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속가능성 평가표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제도 자체가 크게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예비타당성검토가 우선 되면서, 예비타당성검토를 통과한 사업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 단계에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의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어려운 구조일 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을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것이 지역 공동체와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 성장위주 정책을 지탱하는 제도였다면, 이제 경제, 사회,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고, 그 과정에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발전 방향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이다. 결국 이것은 타당성 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합 확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제도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이다. 이 분야의 많은 학문적 연구와 제도적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자료>

- 고재경(2012), Rio+20과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과제:전문가 100인의 진단, 이슈&진단,제51호, 경기개발연구원
- 고재경, 정규호, 김희선(2008)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 체계 구축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구도완(2002),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회영향평가 - 제도도입과 발전 방안, 환경사회학연구 ECO 통권3호
- 구자건, 2003, 구축사업의 사회영향평가 방법 연구(Ⅰ)-담 건설 계획 및 사업의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407~444
- 김은경, 노태호, 김종연(2012) 해당저수지 주변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검토, (주)지속가능성센터 지우
- 김은경,지속가능발전 포럼(2012), 성장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한국미래발전연구원
- 김종환(2008), “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영향평가 현황과 시사점” 원고
- 김준현(2012), 갈등예방을 위한 새로운 제도, 복지영향사전 평가, 정책리포트 제107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준현·김경혜(2011) 서울시 복지영향사전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홍균(2008),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통합, 저스티스 통권105호
-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6)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시범적용 평가
-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6),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방안
-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6),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8), 법령 및 중장기 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방안 연구
-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8),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본 골프장 건설의 경제사회적 영향분석 및 공급정책 방향 연구
-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8),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연구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6)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6)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및 운영방안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6)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진단 및 기본계획 수립지침 작성 연구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7) 법령 및 중장기 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방안 연구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7) 지방 지속가능발전 진단과 컨설팅 및 시도 공무원 역량강화 실시방안 연구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7) 지방 지속가능발전 진단과 컨설팅 실시방안 연구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7) 지속가능한 국가비전 설정을 위한 환경정책의 미래전략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8) 「지방지속가능발전 진단과 컨설팅 실시방안」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8)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업무참고자료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8)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보고서
- 목정훈(2009),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운영 및 평가방법 분석 연구, 서울도시연구원
- 박종원(2012), 환경정책기본법의 변천과 발전. 「An Evaluative Analysis of Korean Legislative Development in Relation with Economic Growth(Environmental Policy and Law):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63-104.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 안소은(2008), 사업단계 전략환경평가를 위한 환경가치 활용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안소은, 전철현, 배두현(2010), 환경가치를 고려한 통합정책평가 연구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유현석 외(2011) 개발사업의 종합환경영향평가 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윤순진(2004), 환경갈등의 예방·완화·해소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1호
- 이비안(2010),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대안의 검토 필요성 : 합리적 대안과 부작위 대안, 환경법연구, vol.32
- 이시재(2002), 사회영향평가의 이론과 방법, 환경사회학연구 ECO, 3, 106~132
- 이정환(2004), 사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연구, 환경사회학연구 ECO, 6, 127~169
- 인천광역시 부평구(2012), 인광역시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평가 지표(안)
- 정별길(2009),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공법학연구 제10권
- 조공장, 최준규, 박영민, 송영일, 사공희, 이상범, 정주철, 임영신(2008), 환경평가제도 30년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조공장의(2011), 사회영향지표개발및운영가이드라인마련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2011),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 보고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 최상기, 김태형, 송영일(201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효율적 이행방안을 위한 제도적 고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최희선 외(2011), 공간환경계획에 기반한 광역계획의 전략환경평가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충청남도(2011~2012),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역
- 충청남도(2012),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안)
- 충청남도(2012), 「정안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 충청남도(2012),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 함태성(2012), 환경영향평가법의 변천과 발전. 「An Evaluative Analysis of Korean Legislative Development in Relation with Economic Growth(Environmental Policy and Law):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22-59.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자료집.
- 환경부(2008), 외국의 환경영향평가법령 및 제도 조사·분석 연구
- 환경부(2009), 사회환경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안
- 환경부(2011), 건강영향평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환경부(2009), 「환경백서」

<법 규정>

-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1019호, 2012.7.22, 타법개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66호, 2012.7.20, 전부개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467호, 2012.7.20, 전부개정]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조례 제5308호, 2012.7.26, 타법개정]

<웹 사이트>

- 충남발전연구원 <http://www.cdi.re.kr>
-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 통계청 <http://kostat.go.kr>
- 통계청 사회조사 <http://www.kostat.go.kr/survey/society/index.action>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ss.go.kr/>

<국외자료>

- Cook, D.(2004), “The Natural Step: Towards A Sustainable Society,” Schumacher Briefing No 11, Green Books for the Schumacher Society.
- Gladwin, T. N., T. Krause & J. J. Kennelly(1995), “Shifting Paradig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management theory and practi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874-917.
- Hart, S. L.(1997), "Beyond Greening: Strategies for a sustainable world," Harvard Business Review, 75(1): 66-76.
- Milbrath, L. W.(1989), Envisioning a Sustainable Society: Learning Our Way Ou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이태건·노병채·박지운 역(2001), 『지속가능한 사회』, 인간사랑.
-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London(2005), Sustainability Appraisal of Regional Spatial Strategies and Local Development Documents: Guidance for Regional Planning Bodies and Local Planning Authorities
- P. Price Thomas, M. Suzuki, P. Hawken & M. Wackernagel(2002), “Strategic sustainable
- Ridaura, L.(2005), Multi-Scale Sustainability Evalutainf, A framework for the derivation and quantification of indicators for natural resuurce management Systems
- Robert, K. H., B. Schmidt-Bleek, J. Aloisi de Larderel, G. Basile, J. L. Jansen, R. Kuehr, development: selection, design and synergies of applied tool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0, 197-214
- Schubert & Stormer(2007), Sustainable Development in Europe: Concept, Evaluation and Applications,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 Senge, P. et al(2008), The Necessary Revolution, 현대경제연구소 옮김, 2009, 『(피터 센계의) 그린 경영』, 비즈니스 맵.
- Schroter, D.(2010), Sustainability Evaluation Checklist, Western Michigan University, www.evaluation.wmich.edu
- Stockmann, R.(2009), Understanding Sustainability Evaluation and its, Contribution to Policy-making
- TBL Toolkit - Copyright City of Melbourne & ICLEI 2002
- WCED(1987), Our Common Future, 조형준 홍성태 옮김, 2005, 『우리 공동의 미래』, 새물결

<부록1>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분석(2011년도)

사업명	시행자	항목	세부항목	검토 의견	근거
1. 탕정 T/C 및 탕정 제2일반산업단지	투자입지과 - 651호	탕정테크노컴플렉스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변경 및 신규업종추가	신규발생 오염물질 중 CN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항목으로 추가지정 필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탕정 제2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변경	별도의견 없음	
2. 아산그린테크밸리산업단지	투자입지과(창해산업개발(주))	아산그린테크밸리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시설 연료로 LNG 사용 이행 요망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발생 저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방안 강구 필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종의 입주 제안 계획 이행이 바람직 -부득이하게 허용할 경우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악취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함 -부지조성공사 시 절·성토 공정에 의한 지형훼손 최소화할 환경친화적 개발이 이뤄져야 함 -생태복원녹화공법 적용해야 할 것임 -토사유출 저감을 위해 배수구역별 3단 이상의 저류지를 설치해야 함 -저류지는 충분한 규모로 설치해야 함 -장기적 유지 관리로 토사 유출 피해 방지 -추후 폐수발생업체 입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 관련법에 의한 필요조치가 선행돼야 함 -동/식물상 조사는 분류군별로 전문가가 참여하여 최소 2계절 이상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 -생물종 서식 확인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보전대책이 마련돼야 함 -훼손 수목의 이식계획을 수립해야 함 -임목폐기물은 재활용해야 함 -주차장과 도로포장 등은 투수성 재료로 포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함 -친환경상품 사용 계획을 수립해야 함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중수도 이용 등 단지내 자원순환을 계획해야 함 -생태계 훼손면적에 따라 부과금을 납부해야 함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예측 부적정으로 인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p>악영향 우려 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함</p> <p>-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의무사항 준수</p>	
3. 예산 일반산 업단지 진입도 로개설	투자 입지 과 -20 40호			<p>별도의견 없음</p>	
4. 송산 산업단 지진입 도로건 설공사	종합 건설 사업 소 시설 1과 -11 89호			<p>-급경사 지역 사면안정화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강우 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함</p> <p>-안정화작업 시 생태복원녹화공법 적용돼야 함</p> <p>-방음벽과 교량 등 설치 시 색채, 재료, 배치구조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함</p> <p>-적정 지점에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관련 제시내용을 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야 함</p> <p>-습지 통과구간에는 소음 및 불빛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p> <p>-콘크리트 측구 설치 시 수로 바닥에 부분적으로 습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p> <p>-각종 교량공사 시 하천식생 훼손 최소화 방안과 하상 정리정돈 및 생물서식공간 복원방안을 수립해야 함</p> <p>-정온시설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과 주민의견 수렴한 합리적 보완책(보상) 등의 이행방안을 마련, 시행하여 환경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함</p> <p>-산지 원형 보존 조치, 부득이한 경우 우회노선 선정 또는 터널/교량 등을 계획, 주변 산림과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이식가능 입목은 최대한 이식계획을 수립해야 함</p> <p>-토양/지하수 오염방지 등 사업 시 예견될 수 있는 각종 환경오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 초안에서 제시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함</p> <p>-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이해해야 함</p>	<p>-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지침과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설치 및 관리 지침</p>
5. 경부 고속도 로(남이 -천안) 확장사 업	한국 도로 공사 녹색 환경 처 -10 83호 (국토 해양			<p><환경정책과></p> <p>-토사유출 피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용량의 가배수로 및 침사지 등을 설치해야 함</p> <p>-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등 서식환경 변화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함</p> <p>-주거지/축사 등 주변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 설치 후 공사 시행해야 함</p> <p>-살수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p> <p>-주거지역 위치 구간은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p>	<p><환경관리과></p> <p>-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p> <p>-소음진동규제법 및</p>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음/진동 저감대책 시행 -발파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이내로 유지할 수 있게 계획해야 함 -폐기물 재활용계획의 구체적 수립, 시행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예측의 부적정 우려시 별도의 대책 수립으로 환경영향을 최소화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 <p><환경관리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소음진동 규제기준 준수하고,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함 -자원순환 촉진 대책을 강구해야 함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및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의 준수와 배출자 신고를 이행해야 함 -순환골재 등 사용의무 대상임 <p><수질관리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량공사 시 하천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처방안 제시, 수질 오염사고 시 대응계획 수립 필요 -충분한 침사지 확보, 완충 녹지 공간 확보 -충남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천안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야 함 <p><농촌개발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 편입 최소화, 봉지 분할 최소화 -농지개량시설 편입 시 대체시설 반드시 설치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시기 바람 -농기계 진출입로 확보로 농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함 <p><산림녹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는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형질 우량 입목지 등은 원형 존치해야 함 -수형양호 입목은 최대한 이식계획을 수립해야 함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설계에 반영해야 함 -실시설계 시 복구기준에 따르되 안정각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복구계획을 설계에 반영해야 함 -토목공사는 단계별로 실시토록 계획하고, 주변 	<p>시행규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골재 등의 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산림녹지과> -산지관리법 <치수방재과> -하천법
--	----	--	--	--

				<p>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해야 함</p> <p><치수방재과></p> <p>-하천구역 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p>	<p>및 시행 령</p>
<p>6. 서산 도 시 형 일 반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p>	<p>투 자 입 지 과 - 19 5 8 (卍 대 우 건설)</p>			<p>-산업시설 연료로 LNG 사용 계획 이행바람</p> <p>-신재생에너지 사용 방안 또한 강구해야 함</p> <p>-입주예정업체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업종은 가급적 제한</p> <p>-부득이하게 입주 허용 시 유해물질 배출 최소화</p> <p>-악취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함</p> <p>-현재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친화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p> <p>-사면 복원 시 구조물 보호공법, 텃밭식재 등을 지양</p> <p>-혼합식재 등 생태복원녹화공법을 적용해야 함</p> <p>-배수구역별 3단 이상의 저류지를 설치해야 함</p> <p>-저류지는 충분한 규모로 설치해야 함</p> <p>-정기적인 유지관리로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p> <p>-토량이동을 최소화 할 토량이동계획을 수립</p> <p>-비산먼지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함</p> <p>-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등 관련법에 의한 필요조치가 선행되어야 함</p> <p>-“특히 사업지구로부터 약4.23km 하류 지역인 간월호로 최종방류수가 유입됨을 감안 간월호 수질오염 최소화 방안 등도 병행 수립되어야 함”</p> <p>-동/식물상 조사는 최소 2계절이상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p> <p>-주요 생물종 서식이 확인된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과 보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p> <p>-훼손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식계획을 수립해야 함</p> <p>-불가피한 임목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p> <p>-주차장, 도로포장 등은 최대한 투수성 재료로 포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p> <p>-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함</p> <p>-친환경상품의 사용계획을 수립해야 함</p> <p>-단지내 자원순환이 이뤄지도록 계획해야 함</p> <p>-예측 못한 상황이나 예측의 부적정으로 인한 주변 환경 악영향 우려 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임</p> <p>-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p>	<p>-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p>

				을 준수해야 함	
7. 행정 도시-대 덕 테크 노 밸리 도로 건 설공사	행 정 중 심 복 합 도 시 건 설 청 교 통 계 획 과(연 기 군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면안정화 대책 수립, 시행해야 함 -생태복원녹화공법이 적용되어야 함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함 -동,식물상 조사를 충분히 실시해야 함 -주요 보호종에 대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별도로 수립해야 함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법규 제시내용을 계획에 충실하게 반영해야 함 -조류 서식지에는 소음 및 불빛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서류 고사 방지를 위해 수로 바닥에 부분적으로 습기가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함 -하천 횡단 교량공사 시 하천식생 훼손을 최소화하고, 하상 정리정돈 및 생물서식 공간 복원방안을 수립해야 함 -정온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저감대책 마련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합리적 보완책으로 환경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군락 등 원형이 보존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우회노선 선정 또는 터널, 교량 등을 계획해야 하며, 최대한 이식계획을 수립해야 함 -사업시행 시 예견될 수 있는 각종 환경오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초안에서 제시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생동물이 동통로 설치지침(환경부)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설치 및 관리지침(환경부)

8. 화양 - 양 화 도로 건 설공사	도 로 교 통 과 - 9 0 30 (대전 지 방 국 토 관 리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에 방을 위해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 시행해야 함 -사설판넬 설치높이 상향조정 또는 이중 방음벽 설치 등 사전적 조치 필요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 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전문가 입회 하 에 시험발파 등 적정 장악량을 산정한 후 발파를 시행해야 함 -사면부에 환경정화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해야 하고,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방안 강구 -지형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주변 지역과 경관적, 생태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이질 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훼손된 자연경관을 저감할 수 있고, 식재계획을 수립해야 함 -야생동물 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통로의 종 류 등을 결정 설치하고, 서식환경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유도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하며, 주변지형과 식생 등을 고려하여 자생수종이나 식이식물 위주 로 설치해야 함 -임상이 양호한 수목은 생태이동 통로에 이식하 는 계획 수립, 시행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 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법령 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환경 분쟁조정 위원회 분 쟁사건 배 상액 산정 기준 이내 로 유지
9. (주)도 고 산 업 개발 채 석장	아 산 시 장 (산림 녹 지 과 장) ((주) 도 고 산 업 개발		<p><환경정책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염물질의 발생, 확산의 누적효과를 종합적으 로 고려해야 함 -평가서에 제시된 예측농도의 피해에 대한 보완 대책이 병행되어야 함 -암반 발파시 발파풍압에 대해효과가 좋은 전색 재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계전문가 입 회하에 시험발파 등 적정 장악량을 산정한 후 발 파를 시행해야 함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 사전 사전적 조치를 완료해야 함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 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환경 분쟁조정 위원회 분 쟁사건 배 상액 산정 기준 이내 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 획 해 야 함 -대기환경 보전법, 소 음 진 동 규

			<p>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p> <p><환경관리과></p> <p>-신고사항 이행 및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평가서에서 제시한 저감대책을 이행할 것</p> <p><수질관리과></p> <p>-우기 때에는 조사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하천직접유출 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우수침사지는 폭우에 대비하여 용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p> <p><산림녹지과></p> <p>채취지역을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분석, 경관영향 시뮬레이션 실시 및 경감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함</p> <p>-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차폐공법 또는 특수공법으로 녹화하여 경관유지해야 함</p> <p>-사면의 안정각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복구방안을 설계에 반영해야 함</p> <p>-토석채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함</p> <p>-소유자 및 대표자 전원 동의를 검토해야 함</p> <p>-산지관리법 등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반영해야 함</p> <p><문화예술과></p> <p>-문화재청에 제출 협의한 후 문화재 보존대책을 이행해야 함</p> <p>-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도 및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하며,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음</p> <p><치수방재과> 검토 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며, 아산시와 별도 협의해야 함</p>	<p>제법,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p> <p>-산지관리법</p> <p>-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p> <p>-자연재해대책법 제4조</p>
10. 아산 아름다운CC 조성사업	(주) 고월(아산시장도시계획과장)		<p>-원형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계획하여야 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특히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여야 함</p> <p>-어느 정도 저감할 수 있는지를 제시 또는 구체적인 저감대책 수립되어야 함. 계획수립하여야 함</p> <p>-방류수 수질허용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p> <p>-사면녹화계획에 구체적인 방법,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우수 배제계획 수립 필요함</p> <p>-중금속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 추가 실시 요구됨</p> <p>-현지조사 계획 수정 필요</p>	<p>-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p> <p>-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p>

			<p>-진입도로 건설계획을 본 평가서에 표기하는 방안 강구</p> <p>-생태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코스설계 및 조경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p> <p>-이식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함</p> <p>-친환경상품의 사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p> <p>-인,허가 내용을 2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산정된 부과금을 납부해야 함</p> <p>-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p> <p><환경관리과></p> <p>-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대상이며,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p> <p>-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함</p> <p>-자원순환 촉진 대책을 강구해야 함</p> <p>-준수 및 의무를 이행해야 함</p> <p>-처리기준의 준수와 배출자 신고를 이행해야 함</p> <p><수질관리과></p> <p>계획을 철저히 이행, 아산시와 별도 협의,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p> <p>-저류지의 설치</p> <p>-사업장 내 물의 재이용시설 적극 설치 및 운영</p> <p><산림녹지과></p> <p>-산림청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p> <p>-녹지는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군락 등은 원형존치해야 함</p> <p>-최대한 이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함</p> <p>-조경계획을 수립하고, 산림바이오에너지로 활용되도록 계획함</p> <p>-표토채취, 보관방안 등을 강구하고, 복구 및 녹지복원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을 강구해야 함</p> <p>-절,성토사면을 완만하게 처리하여 안정각을 유지하고, 친환경적인 복구계획을 설계에 반영해야 함</p> <p><건설정책과></p>	<p>-소음진동 규제법 제21조 및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p> <p>- 자 원 의 절약과 재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p> <p>-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7조</p>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p> <p>-산지관리법</p> <p>- 국 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 하 천 법 제7조 제4항, 제87조</p> <p>-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p> <p>-소하천정비법</p> <p>- 국 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p> <p>-자연재해대책법 제</p>
--	--	--	--	---

				-조치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치수방재과> -지방하천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오수,우수는 환경기준을 준수하여 하천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국,공유지가 편입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매수하여야 함 -피해발생시 사업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아산시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임 <체육청소년과> -저촉되지 않아야 함 <문화예술과>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협의한 후 문화재 보존대책을 이행해야 함 -우리 도 및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의 변동 등이 수반될 수 있음	4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82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11. 가 로림 조 력 발 전 소건설	전 략 산 업 과 - 4 1 57 (가로 림 조 력 발 전 (주)) (환경 부/지 식 경 제부)			-환경적 가치 과소평가 -보고서의 일관성 유지 미흡 -누적 복합영향 미 반영 -부문별 세부 검토의견: 미기상, 지하수, 해양수질 및 저질, 해양물리, 육상 동식물상, 해양 동식물상, 경제성분석	
12. 당 진1 철 강 일 반 산 업 단 지	투 자 입 지 과 - 4 4 97 (현대 그 린 파 위 (주)/ 지 식 경 제 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누적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대기질 환경오염 저감대책 등이 제시되어야 함 -비교분석이 필요함 -연료 성분분석, 전처리계획 등이 수립되고, 부생가스 전용 버너를 설치하여야 함 -충분한 용량의 관 매설계획이 반영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제시가 필요함. 대규모 침전조 설치 등의 검토가 이뤄져야 함 -당초 계획대로 녹지공간비율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최대한 투수성 재료로 포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p>야 함</p> <p>-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함</p> <p>-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p> <p>-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p>	
13. 토석채취허가	산림녹지과 (한국광해관리공단, GS칼텍스(주))			<p>-오염물질의 발생, 확산의 누적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p> <p>-보완대책 병행되어야 함</p> <p>-대해효과가 좋은 전색재 종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험발과 등 적정장약량을 산정한 후 발과를 시행해야 함</p> <p>-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전 사전적 조치를 완료해야 함</p> <p>-정온시설에 대한 저감 및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함</p> <p>-방진덮개로 밀폐한 후 외부로 반출해야 하며, 영향권내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p> <p>-배수구역별로 설치해야 하며,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p> <p>-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p>	<p>-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이내로 유지</p>
14. 만리포해수욕장관광지조성사업	관광산업과 - 5307 (태안군)			<p>-보완대책 병행되어야 함</p> <p>-공사중 수질조사 주기를 월1회 이상 실시해야 함</p> <p>-대표할 수 있는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최근 자료를 제시해야 함</p> <p>-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함</p> <p>-우기 시절,성토공사를 자제하고 충분한 용량의 가배수로, 침사지 등을 설치해야 하며, 필요시 오탐방지막 설치 등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p> <p>-공사시 인근 주거지역에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 진동 저감대책을 시행해야 하며, 발과 시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p> <p>-투수성 재료의 사용계획과 친환경상품의 사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p> <p>-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p>	<p>-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p> <p>-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p>

				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	
15. 지방어항(고대도, 장고도)개발사업	수 산과 - 8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질 수지식으로 토사이동량을 제시해야 함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시행해야 함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험발파 등 적정 장약량을 산정한 후 발파를 시행해야 함 -저감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시설설치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함 -오탉방지막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사고수습체계를 주기적으로 교육토록 하고, 사고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 내에 비치해야 함 -투수성 재료의 사용계획과 친환경상품의 사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함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6. 청양스틸테크노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투 자 입 지 과 - 5739				
17. 동화기업열회수시설(소각로)	환 경 정 책 과 - 12557 (동화기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서에 제시된 소각원료 이외의 폐기물을 소각해서는 아니되며, 폐기물 품목 변경시에는 별도의 환경영향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함 -총 배출가스량 산정시 포함되어야 함 -배출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지시설의 이중설치 등 저감대책이 필요함 -항목별 구체적 설명 제시하고, 악취물질에 있어서도 구체적 설명 제시 필요함 -환경영향 예측 분석이 제시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이옥신 및 악취물질 검사를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되어야 함 -동절기 동물상 서식환경 추가조사 필요함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 시행해야 함 -환경영향조사를 매월 1회 실시토록 조치 -악취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함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조사 및 실질적 감축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영향예측과 보전대책 등을 우선 시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투수성 재료의 사용계획과 친환경상품의 사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함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18. 태안 웨스트 비치 CC 조성사업	태안 0330-0611 (태안기업(주), 한국건설산업진흥(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화식물의 유입이 배제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동,식물의 서식지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대한 보완대책 병행되어야 함 -해수침투가 우려되는 지하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농업용수 사용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 시행해야 함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관계전문가 임회하에 시험발파 등 적정 장약량을 산정한 후 발파를 시행해야 함 -초기우수용 저류조는 15일 이상 저류할 수 있도록 설치 -저류지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이식계획을 수립해야 함 -생태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코스설계 및 조경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투수성 재료의 사용계획과 친환경상품의 사용계획을 실시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함 -환경영향 조사계획 반영 필요 -이식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가 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건 배상액 산정 기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제22조, 같은

			<p>도록 해야 함</p> <p>-인,허가 내용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부과금을 납부해야 함</p> <p>-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p> <p><환경관리과></p> <p>-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대상이며,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p> <p>-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함</p> <p>-자원순환 촉진대책을 강구해야 함</p> <p>-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및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p> <p>-예측 및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의 준수와 배출자 신고를 이행해야 함</p> <p><수질관리과></p> <p>-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철저히 이행</p> <p>-태안군 관련부서와 별도 협의</p> <p>-주변 인가 및 농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함</p> <p>-건전한 환경조성에 노력</p> <p><건설정책과></p> <p>-태안군수가 기 제출한 조치 계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p> <p><체육청소년과></p> <p>-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p> <p>-문화재 지표조사 및 문화재청의 보존대책을 성실히 이행</p> <p>-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을 충실히 이행</p>	<p>법 시행규칙 제21조</p> <p>- 자 원 의 절약과 재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p> <p>-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7조</p>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p> <p>-충남 고시 제 2011-132호</p> <p>-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 2011-26호</p> <p>-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제6조</p> <p>-문화재보호법 제35조</p>
19. 동 부 그 린 발 전 소 건 설 사 업	동 부 발 전 (건 설) (환경 부/지 식 경 제부)		<p>-지역민들과의 사전 공감대 형성 후 사업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p> <p><환경정책과></p> <p>-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결과 조치사항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p> <p>-비산먼지 보완대책 병행되어야 함</p> <p>-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p> <p>-밀폐형으로 설치하여야 함</p> <p>-석탄 연소후 회 처리에 대하여 구체적 방안제</p>	<p>-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건 배상액 산정 기준</p> <p>-폐기물관리법</p>

			<p>시가 필요함</p> <p>-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 강화</p> <p>-구체적 시스템 운영계획 및 비용부분, 재이용 용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p> <p>-구체적 온배수관 매설계획이 미 제시됨. 또한 채류시간이 큰 대규모 침전조 설치 등의 검토가 이뤄져야 함</p> <p>-사후환경영향조사 주기를 강화하여야 함</p> <p>-구체적 처리, 활용방안이 미제시되었음</p> <p>-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 시행해야 함</p> <p>-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험발파 등 적정 장약량을 산정한 후 발파를 시행해야 함</p> <p>-투수성 재료로 포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p> <p>-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처리 해야 함</p> <p>-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p> <p><환경관리과></p> <p>-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야 함</p> <p>-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p> <p>-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대상임</p> <p>-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함</p> <p>-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및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p> <p>-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을 제시하고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p> <p>-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의 준수와 배출자 신고를 이행해야 함</p> <p><수질관리과></p> <p>-초기우수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반영해야 함</p> <p>-당진군 수도부서와 협의 후 당진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함</p> <p>-하수도법에 의한 당진군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야 하고, 방류방법을 준수해야 함</p> <p>-발전소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기 바람</p> <p><산림녹지과></p> <p>-보전산지의 편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p>	<p>-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p> <p>-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p> <p>-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p> <p>-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p> <p>-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7조</p> <p>-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p> <p>-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산지관리법</p> <p>-국토의 계획 및</p>
--	--	--	--	---

			<p>여 반영해야 함</p> <p>-녹지는 최대한 확보하고, 원형 존치토록 계획해야 함</p> <p>-녹지공간에 조경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해야 함</p> <p>-표토채취, 보관방안 등을 강구하고 복구 및 녹지복원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강구해야 함</p> <p>-실시설계시 복구기준에 따르되 절,성토사면을 완만하게 처리하여 안정각을 유지하고 복구수종은 현지 식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p> <p><일자리경제정책과></p> <p>-국가전력수급계획상 필요하다면 지역주민과의 사전 공감대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선행된 후 추진되어야 함</p> <p><경제정책과></p> <p>-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함</p> <p>-용도지역과의 정합성 검토</p> <p>-화력발전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검토</p> <p>-전반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p> <p>-주변 환경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필요</p> <p>-기존의 농경지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 반영</p> <p><경제정책과></p> <p>-관련 조치 후 우리 도 및 문화재청에 신고하여야 함</p> <p>-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p> <p><수산과></p> <p>어업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도록 조치해야 함</p> <p><항만물류과></p> <p>-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조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p> <p>-사업 인, 허가시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등을 통보해야 함</p> <p>-해양시설 신고를 이행해야 함</p>	<p>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p> <p>-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p> <p>-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p> <p>-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p> <p>-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p> <p>-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p>
20. 남서울대학교 부지 증설 사업	성암학원 114 (천안시)		<p>-철저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사업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p> <p><환경정책과></p> <p>-보완대책을 병행해야 함</p> <p>-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 시행해야 함</p>	<p>-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건 배상액 산정 기준</p>

			<p>-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전문가 입회하에 시험발파 등 적정 장약량을 산정한 후 발파를 시행해야 함</p> <p>-최대한 투수성 재료로 포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p> <p>-폐기물은 가능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처리 해야 함</p> <p>-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p> <p><환경관리과></p> <p>-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p> <p>-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함</p> <p>-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p> <p>-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의 준수와 배출자 신고를 이행해야 함</p> <p><수질관리과></p> <p>-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대책을 반영해야 함</p> <p>-천안시 수도부서와 별도 협의해야 함</p> <p>-천안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함</p> <p>-설계단계부터 반영하기 바람</p> <p><산림녹지과></p> <p>-구역 편입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최대한 확보하고, 원형 존치토록 계획해야 함</p> <p>-최대한 이식을 계획하고, 조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표토채취, 보관방안 등을 강구하고 복구 및 녹지복원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강구하여야 함</p> <p>-복구기준에 따르되 절,성토사면을 완만하게 처리하여 안정각을 유지하고 복구수준은 자연 친화적인 복구가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p> <p>-토목공사는 단계별로 실시토록 계획하고, 산지전용이 완료된 부분은 중간복구 조치하거나 토사유출 방지시설, 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해야 함</p> <p><농촌개발과></p> <p>-침사지, 가배수로 등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p>	<p>-폐기물관리법</p> <p>-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p> <p>-소음진동 규제법 제21조,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p> <p>-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p>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p> <p>-천안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p> <p>-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산지관리법</p>
--	--	--	--	---

				<p>야 함</p> <p>-각 환경영향요소별 저감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함</p> <p>-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p> <p><문화예술과></p> <p>-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우리 도 및 문화재청에 제출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른 문화재 보존대책을 이행해야 함</p> <p>-별도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우리 도 및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음</p>	
21. 보령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건설정책과 - 11804 (한국토지주택공사)			<p>-보완대책 병행되어야 함</p> <p>-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함</p> <p>-주변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전문가 임회하여 시험발파 등 적정 장약량을 산정한 후 발파를 시행해야 함</p> <p>-사후환경영향조사시기를 분기 1회에서 월1회로 강화해야 함</p> <p>-영향예측과 보전대책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함</p> <p>-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저감되도록 하고, 기존 식생은 최대한 보전하고 충분한 면적의 완충녹지 확보 및 연결녹지를 조성하여야 함</p> <p>-지형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함</p> <p>-투수성 재료의 사용계획과 친환경상품의 사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p> <p>-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함</p> <p>-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p>	<p>-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건 배상액 산정 기준</p> <p>-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p>
22. 가로림조력건설사업(보완서)	전략산업과 - 7155			<p>-본안 협의시(2011.7.12) 요구사항 12개 항목 미반영</p> <p>-금회 보완서에 제시된 보완의견 26개 항목 부실작성</p> <p>-추가보완 요구의견을 전략산업과에 제출코자 함</p>	
23. 만리포해수욕장	관광산업과			-별도의견 없음	

관 광 지 조 성 사 업	- 7 5 05				
24. 대 산향 준 설 토 투 기장 축 조공사	항 만 물 류 과 - 7 4 16 (대산 지 방 해 양 항 만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주기를 분기1회에서 월1회로 강화하여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별도의 보완대책을 강화하여야 함 -악취 저감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최근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보다 구체적인 사후관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 제시되어야 함 -물질 수지식으로 준설토 이동량을 제시하여야 함 -보다 강화된 방지대책이 제시되어야 함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사고수습체계를 주기적으로 교육토록 하고, 유류제거 장비를 사고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함 -투수성 재료의 사용계획과 친환경상품의 사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 강구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25. 태 안 화 력 9,10호 기 건설 사업	한 국 서 부 발 전 (주) (환경 부/지 식 경 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피해저감방안 등 지역민들과의 사전 공감대 형성 후 사업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환경정책과> -조사주기를 각각 분기1회에서 월1회로 강화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 -별도의 보완대책을 병행해야 함 -기존 시설을 포함한 누적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특단의 온실가스배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완전 밀폐형으로 설치하여야 함 -체류시간이 큰 대규모 침전조 설치 등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이중 방음판넬 설치 등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 시행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

			<p>-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적정 장약량을 산정한 후 발파를 시행해야 함</p> <p>-최대한 투수성 재료로 포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p> <p>-관련법규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함</p> <p>-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향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p> <p><환경관리과></p> <p>-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해야 함</p> <p>-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p> <p>-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임</p> <p>-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함</p> <p>-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p> <p>-석탄회 처리방안 사전 강구 필요</p> <p>-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의 준수와 배출자 신고를 이행해야 함</p> <p><수질관리과></p> <p>-법적 처리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회처리장으로 배출해야 하며, 발전폐수량을 최대한 재이용하여야 함</p> <p>-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p> <p>-태안군 수도부서와 협의하여야 함</p> <p>-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법정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함</p> <p>-물의 재이용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 발굴하여 반영하여야 함</p> <p>-발전시설 내 연계 재활용방안 등을 적극 반영하여, 생태발전시설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p> <p><산림복지과></p> <p>-원형 존치토록 계획하여야 함</p> <p>-최대한 이식을 계획하고, 조경계획을 수립해야 함</p> <p>-표토채취, 보관방안 등을 강구하고 복구 및 녹지복원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강구해야 함</p>	<p>조</p> <p>-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p> <p>-소음진동 규제법 제21조 및 제22조</p> <p>-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7조</p>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p> <p>-산지관리법</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p> <p>-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p>
--	--	--	---	--

				<p>함</p> <p>-안정각을 유지하고 복구수종은 현지 식생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하며, 설계에 반영해야 함</p> <p>-중간복구 조치하거나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함</p> <p><건설정책과></p> <p>-기준에 부합되어야 함</p> <p>-저탄장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하는 방안 검토</p> <p><일자리경제정책과></p> <p>-부정적 측면이 강함</p> <p>-지역갈등으로 화력발전소의 추가 입지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p> <p>-지역주민과의 사전 공감대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선행된 후 추진되어야 함</p> <p><문화예술과></p> <p>-문화재 지표조사 규정을 준수해야 함</p> <p><수산과></p> <p>-대책을 선행 조치해야 함</p> <p><항만물류과></p> <p>-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함</p> <p>-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 시행자가 책임처리해야 함</p>	<p>령 제4조</p> <p>-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p>
26. 군 장항 로 준 설 사업	항만 공사 과 - 26 32 (군산 지방 해양 만 청)			<p>-악영향이 예상되므로 완벽한 저감대책 마련 후 사업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p> <p><환경정책과></p> <p>-조사주기를 각각 분기 1회에서 월1회로 강화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p> <p>-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조사 필요함</p> <p>-준설방법 변경 등 보다 구체적인 저감방안이 제시되어야 함</p> <p>-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제시 필요</p> <p>-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함</p> <p>-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p> <p><환경관리과></p> <p>-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고,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p> <p><수산과></p>	<p>-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건 배상액 산정 기준</p> <p>-폐기물관리법 제13조</p>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p>

				<p>-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등 영향조사 및 대책수립 필요</p> <p><항만물류과></p> <p>-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반영</p> <p>-지역주민 불편해소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영</p> <p>-항구적인 대책 필요</p> <p>-어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p>	
27. 안면도지포운여관광단지	관광산업과 - 8171 (충남개발공사)			<p>-현재의 지형을 활용하여 원형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계획하여야 하며,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여야 함</p> <p>-추가 저감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보완대책 병행되어야 함</p> <p>-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 시행해야 함</p> <p>-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적정 장약량을 산정한 후 발파를 시행해야 함</p> <p>-초기 우수를 통해 수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저류지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p> <p>-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p> <p>-최대한 이식할 수 있도록 이식계획을 수립해야 함</p> <p>-전문가가 참여하여 코스설계 및 조경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p> <p>-우기시 절,성토 공사를 자제하고 충분한 용량의 가배수로 침사지 등을 설치해야 하며,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함</p> <p>-투수성 재료의 사용계획과 친환경상품의 사용계획을 실시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함</p> <p>-이식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함</p> <p>-성상별, 종류별 폐기물의 발생량을 예측하고 적정처리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함</p> <p>-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자는 생태계 훼손면적에 따라 산정된 부과금을 납부해야 함</p> <p>-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등 각종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p>	<p>-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건 배상액 산정 기준</p> <p>-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p>

<부록 2> 전문가 델파이조사 설문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 방안 연구를 위한 1차 전문가 델파이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델파이 조사는 (주) 지속가능성센터 지우가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충청남도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충청남도에 지속가능성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델파이 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포괄성, 연계성, 형평성, 신중성, 안전성 등 지속가능발전의 다섯 가지 특성별로 환경영향평가(지속가능성평가)를 위한 기준들을 질문 형태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각 질문들이 다섯 가지 특성에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질문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삭제하거나 추가할 질문이 있는지를 답변해주시요. 이 결과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충청남도 담당자가 평가할 때 활용할 평가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지속가능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참고하셔서 각 지속가능발전 기준을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하위지표로 적절하거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지표들을 배치해주시요. 충남도청이 직접 수행하는 내부사업에 대한 자체 지속가능성평가 작업의 기준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귀중한 의견은 통계처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줄 잘 알고 있지만 시간을 내셔서 귀한 의견을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 조사기관 : (주) 지속가능발전센터 지우

<참고사항>

지속가능발전의 다섯 가지 특성

Gladwin(1995)의 지속가능발전 다섯 가지 특성

- **포괄성(inclusiveness)**
 - 시공간, 환경과 인간, 근린과 원거리,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의 지속가능성
- **연계성(connectivity)**
 -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대한 수용
- **형평성(equity)**
 - 세대간, 세대내, 종간 공정성
- **신중성(prudence)**
 -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주의하고 예방하는 일
- **안전성(security)**
 - 만성적인 위협으로부터의 안전과 위대한 환경파괴의 방지

I. 지속가능발전의 다섯 가지 특성별 환경영향평가(지속가능성평가) 기준

※ 아래 표를 보시고 각 기준이 구성요소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기준 질문을 수정, 삭제, 추가할 것이 있는지를 검토해주시오.

지속가능발전의 특성	환경영향평가(지속가능성평가) 기준
■ 포괄성(inclusiveness): 환경과 인간, 지역과 국가 또는 세계, 현재와 미래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가?	1. 이 사업은 지역 자연자원의 가치를 존중하는가?
	2. 이 사업은 지역 생물다양성을 촉진하고 보존하는가?
	3. 이 사업으로 인해 과도하게 지역의 에너지가 소비되고 온실가스가 배출되는가?
	4. 이 사업은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저감을 촉진하는가?
	5. 이 사업은 지역 내 유해물질을 발생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가?
	6. 이 사업은 물을 과도하게 소비하고 하수를 배출하는가?
	7. 이 사업은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대기질을 개선하는가?
	8. 이 사업은 하천, 지하수, 해양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자원을 보호하는가?
■ 연계성(connectivity):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의존적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9. 이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가?
	10. 이 사업은 사회갈등 해소에 기여하는가?
	11. 이 사업은 지역의 교통통신 인프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가?
	12. 이 사업은 지역의 토지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13. 이 사업은 숙련된 인력을 개발하고 유지하여 지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가?
■ 형평성(equity): 인간과 자연의 본질적이고 독립적인 가치를 인정하는가?	14. 이 사업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가?
	15.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16. 이 사업은 활동적이며 참여적인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가?
	17. 이 사업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수혜나 사회적 참여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는가?
	18. 이 사업은 보건과 건강의 불평등을 저감시키는가?
	19. 이 사업은 지역에 균등하게 교육 달성 수준을 향상시키는가?
	20. 이 사업은 빈곤 지역의 경제적 회복을 촉진하는가?
■ 신중성(prudence): 기술적, 과학적, 정치적 예방의 원칙에 유의하는가?	21. 이 사업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가?
	22. 이 사업은 주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가?
	23. 이 사업은 지역 환경용량을 준수하면서 진행되는가?
	24. 이 사업은 지역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가?
	25. 이 사업은 지역에 환경적 영향을 덜 주는 제품을 이용하는가?
	26. 이 사업은 에너지의 효율성과 안보를 확보하는가?
■ 안전성(security): 안전에 대한 위협과 위협한 환경파괴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가?	27.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복지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가?
	28. 이 사업은 지역의 자원기반을 보존하면서 진행되는가?
	29. 이 사업은 지역의 인구추이와 구성 측면에서 지역의 부양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30.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가?
	31. 이 사업은 공공환경의 안전성과 어메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질문 1> 환경영향평가(지속가능성평가) 기준의 배치 수정 여부(예: 5번을 안전성으로)

<질문 2> 환경영향평가(지속가능성평가) 기준 질문의 수정 또는 삭제 여부

(예 1: 13번 삭제)(예 2: 27번 -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보편적 복지에 기여하는가?'로)

<질문 3> 환경영향평가(지속가능성평가) 기준 질문 추가 여부

(예: 신중성에 '사업자가 위험 주장에 대한 반대 견해를 입증했는가?' 추가)

II. 지속가능발전의 판단과 측정을 위한 하위지표의 배치

※ 붙임자료의 각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참고하셔서 아래의 지속가능발전 특성별 지속가능발전 지표(하위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들을 배치(추천)해주십시오.

1. 포괄성

지속가능발전의 특성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지속가능발전 지표(하위지표)
1. 포괄성(inclusiveness): 환경과 인간, 지역과 국가 또는 세계, 현재와 미래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가?	- 이 사업은 지역 자연자원의 가치를 존중하는가?	
	- 이 사업은 지역 생물다양성을 촉진하고 보존하는가?	
	- 이 사업으로 인해 과도하게 지역의 에너지가 소비되고 온실가스가 배출되는가?	
	- 이 사업은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저감을 촉진하는가?	
	- 이 사업은 지역 내 유해물질을 발생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가?	
	- 이 사업은 물을 과도하게 소비하고 하수를 배출하는가?	
	- 이 사업은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대기질을 개선하는가?	
	- 이 사업은 하천, 지하수, 해양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자원을 보호하는가?	

2. 연계성

지속가능발전의 특성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지속가능발전 지표(하위지표)
2. 연계성(connectivity):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의존적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 이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가?	
	- 이 사업은 사회갈등 해소에 기여하는가?	
	- 이 사업은 지역의 교통통신 인프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가?	
	- 이 사업은 지역의 토지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이 사업은 숙련된 인력을 개발하고 유지하여 지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가?	

3. 형평성

지속가능발전의 특성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지속가능발전 지표(하위지표)
3. 형평성(equity): 인간과 자연의 본질적이고 독립적인 가치를 인정하는가?	- 이 사업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가?	
	- 이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 이 사업은 활동적이며 참여적인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가?	
	- 이 사업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수혜나 사회적 참여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는가?	
	- 이 사업은 보건과 건강의 불평등을 저감시키는가?	
	- 이 사업은 지역에 균등하게 교육 달성 수준을 향상시키는가?	
	- 이 사업은 빈곤 지역의 경제적 회복을 촉진하는가?	

4. 신중성

지속가능발전의 특성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지속가능발전 지표(하위지표)
4. 신중성(prudence): 기술적, 과학적, 정치적 예방의 원칙에 유의하는가?	- 이 사업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가?	
	- 이 사업은 주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가?	
	- 이 사업은 지역 환경용량을 준수하면서 진행되는가?	
	- 이 사업은 지역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가?	
	- 이 사업은 지역에 환경적 영향을 덜 주는 제품을 이용하는가?	
	- 이 사업은 에너지의 효율성과 안보를 확보하는가?	

5. 안전성

지속가능발전의 특성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지속가능발전 지표(하위지표)
5. 안전성(security): 안전에 대한 위협과 위해한 환경파괴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가?	- 이 사업은 지역사회의 복지안 전망 구축에 기여하는가?	
	- 이 사업은 지역의 자원기반을 보존하면서 진행되는가?	
	- 이 사업은 지역의 인구추이와 구성 측면에서 지역의 부양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가?	
	- 이 사업은 공공환경의 안전성과 어메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Ⅲ. 환경영향평가 개선과 지속가능성평가의 도입을 위한 의견

- ※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하고, 지속가능성평가를 도입하는 데 대한 의견을 진솔하게 밝혀주시요.

- 감 사 합 니 다 -

■ 집 필 자 ■

연구 책임 · 김은경 (주)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
공동연구원 ·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보조연구원 · 인은숙 (주)지속가능성센터 지우 팀장
오나경 (주)지속가능성센터 지우 팀장

자문그룹 · <충청남도 자문>

권혁이 충청남도 환경정책과장
조경연 충청남도 환경정책과장
박상환 충청남도 환경정책과 사무관
정운섭 충청남도 환경정책과 평가담당

<전문가 자문>

이창우 박사(서울연구원)
김성균 박사(성대학교)
배수호 교수(성균관대학교)
김지영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동준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권기태 실장(희망제작소)
차수철 사무국장(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전략연구 2012-28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글쓴이 · 김은경 외 인 / 발행자 · 박진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2년 12월 31일 / 발행 · 2012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전화 · 041-840-1123(기획조정연구실)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http://www.cdi.re.kr>

© 2012,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